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 학위논문

화전하던 산에서 송이따는 산으로:  
울진군 산촌 경관에 내재한 자연-사회 경계의 역동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장 예 지

화전하던 산에서 송이따는 산으로:  
울진군 산촌 경관에 내재한 자연-사회 경계의 역동

지도교수 채 수 홍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10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장 예 지

장예지의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12 월

위 원 장 \_\_\_\_\_ 오명석 \_\_\_\_\_ (인)

\_\_\_\_\_ 황익주 \_\_\_\_\_ (인)

위 원 \_\_\_\_\_ 채수홍 \_\_\_\_\_ (인)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정국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이라는 공간이 자연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사람들은 그 바깥에 머물게 된 과정, 즉 산이 ‘자연’으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핀다. 한반도에서 산림은 사람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산은 인간 사회와 동떨어져 자체의 활동 원리로만 작동하는 원형의 자연의 공간이라기보다, 개인과 지역, 공동체, 국가의 전유의지가 침투하는 사회적 공간의 성격을 내재한다.

본 연구는 금강소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두 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두천리와 금강송면 소광리를 연결하는 산림을 민족지적 연구 공간으로 정하였다. 연구자는 산림에서 시기를 달리하며 발생한 정치적 사건과 경제·사회 활동이 해당 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맞물리며 산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다양한 목적으로 산림을 전유한 개인과 마을 공동체, 국가라는 세 주체의 상호작용은 산림 경관의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며 변화하는 세 주체의 상호작용 양상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이 산림의 생태적 환경을 창안하는 일부가 됨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 산림 전유의 역사 속에서 포착되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고찰해, 양자 간의 경계가 생성과 해체, 재생성을 일으키는 과정을 살핀다.

연구자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통해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지를 관통한 문제의식을 시계열적으로 엮어내고자 했다. 첫째, 화전정리사업부터 산림보호활동에 이르는 국가의 산림정책이 함의하는 정치경제적 특성과 이것이 산림생태계 및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주민과 마을 공동체, 국가가 산림을 전유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소유의식을 근대적 소유권과 비교해 그 특성을 살

핀다. 셋째, 세 주체와 산림의 상호작용 가운데 표상되는 산림 생태계의 모습과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적 경계의 변동을 그린다.

두천리와 소광리 산림 경관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열쇳말은 여러 갈래의 길이다. 다종다양한 길의 생성과 지속, 소멸은 인간과 자연, 사회 사이의 매개와 단절을 야기했다. 해방정국에서 196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보부상의 십이령길과 도부꾼 여성과 화전 농경자, 산판꾼이 만든 샛길 등 다양한 길이 사라졌다 생기기를 반복했다. 법과 제도로 모습을 드러내는 국가의 힘은 미약했다. 고립된 산간이라는 지리적·생태적 조건과 빈곤한 경제적 현실은 법의 존재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지었다. 이에 여러 길들로 연결된 평지의 마을과 산림은 그 자체가 총체적 경관을 이루며 하나의 생활세계로 작동했다. 산림 경관의 의미도 인간과 비인간(non-human)이 맺는 연결망(meshwork)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자연적 경관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1968년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과 함께 산을 이루던 곳곳의 샛길이 사라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길들이 화전정리사업과 산림녹화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국가 정책과 관료의 권력이 산림생태계를 포함한 마을, 주민 개개인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의 녹화사업으로 푸르고 단순한 산림의 형태가 주조되고, 강력한 법은 주민을 동원하고 통제하는 정책 집행을 정당화했다. 이로써 마을과 산림을 잇는 경관은 점차 분리되고, 경계의 구분이 보다 공고해졌다. 자연의 푸르름과 강대국의 이미지를 동시에 표상하게 된 울창한 삼림 경관은 인간 사회와는 확연히 구분된 ‘자연’이 된 것이다. 또한 강력한 법의 현현으로 마을 내 집합의식과 국가가 주입하는 산림에 대한 도덕 사이에는 어긋남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화전정리사업으로 마을 사람끼리 공유한 화전지에 대한 소유 의식보다 근대적 소유 관념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변형을 거듭한 오늘의 산림의 모습은 이전 시기의 산림에서의 변화가 축적된 다층적 경관을 내포한다. 2000년대 들어 개통한 울진금강소나무숲길에서 탐방객이 마주하는 광경이 곧 축적된 경관이였다. 박물관이 된 숲에는 사람의 역사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숲과 마을의 구분 가운데 주민은 산의 바깥에서 산의 추억을 구술하는 이중적 위치에 처한다. 울진군의 자랑이 된 송이와 금강소나무 역시 경관의 역동(dynamics)의 소산이다. 송이는 다채로운 종들이 조화와 충돌을 일으키며 교란을 빚어낸 총체적 환경의 산물이였다. 상품이 된 송이를 채취하는 주민은 자신의 경험적 지식과 생태적 감각, 즉 메티스(metis)로 송이를 찾아 나선다.

이는 결국 우리가 하나의 공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유동성을 보여준다. 공고해 보이는 듯한 안과 밖, 자연과 사회 등의 경계는 인간과 비인간이 빚어내는 아상블라주로 인해 언제나 다른 형태로 변화해 갔다. 경계의 변화는 마을이라는 국지적 공간을 넘어 우리 삶의 방식과 토대도 종전의 그것과 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민지의 문법과 근대의 조건, 냉전 하 권위주의적 국가 체제의 흔적은 작은 산촌에 축적된 경관으로 남아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사회가 언제나 새롭게 구성되는 가운데, 자연은 점차 외부화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해 나갔다. 하지만 축적된 경관에서 보듯 자연은 끊임없이 사회 안으로 들어왔다. 사회와 국가가 구축되는 역사와 자연의 역사 간 구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주요어 : 화전농경, 산림녹화, 울진금강소나무숲길, 송이, 자연과 사회, 산림  
경관

학 번 : 2015-22541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5
1) 자연과 사회에 관한 이분법 .....	5
2) 국가와 국민, 그리고 생태정치 .....	9
3) 기존 산촌 공동체 및 화전 연구 .....	12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6
1) 연구대상 .....	16
2) 연구방법 .....	18
II. ‘별건 산’의 추억 .....	23
1. 화전을 통한 산림의 전유 .....	24
1) 산전 부치는 사람들 .....	24
2) 화전지에 대한 소유관념 .....	35
2. 벌목과 도벌 .....	44
1) 나무를 베는 산판꾼 .....	44
2) 합법적 벌목과 불법 도벌의 불온한 경계 .....	51
3.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경계 .....	55
1) 생활세계로서의 산림 .....	55
2) ‘독가촌(獨家村)’과 마을(村) .....	65
III. 강대국을 꿈꾸는 ‘푸른 산’ .....	71
1. 공비로부터 국민을 ‘구하되’ 화전은 ‘금하라’ .....	72

1) 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의 취약지 대책사업 .....	72
2) 화전정리사업과 그 틈새 .....	79
2. ‘법’의 집행으로 ‘문명화’되는 산림 .....	90
1) 법의 언어가 말하는 산림 .....	90
2) ‘녹화’를 위한 금기, 그리고 동원 .....	93
3) 국유림 소유권을 둘러싼 경합 .....	104
3. 경관의 분리가 낳은 새로운 도덕 .....	112
1) ‘자연 경관’과 ‘마을 경관’의 분리 .....	112
2) 푸른 숲이 상징하는 선진국의 도덕 .....	116
 IV. ‘녹색 산’, 그 축적의 경관 .....	120
1. 소나무 숲 마을의 자랑, ‘송이’ .....	121
1) ‘상품’이 된 송이 .....	121
2) 마을 공동체의 송이 채취권 .....	127
3) 송이 채취의 묘(妙) .....	137
2. 숲을 ‘관광’하다 .....	143
1) 박물관이 된 숲: 울진금강소나무숲길.....	143
2) 탐방객과 마을 주민이라는 표식 .....	151
3. 송이산과 숲길 사이에서 .....	158
1) 소나무에 붙인 이름들 .....	158
2) 탐방객의 숲길, 주민의 송이산 .....	162
 V. 결론: 숲에 난 길들 .....	169
 참고문헌 .....	176



## 표 목 차

〈표 1〉 심층면담자 목록 .....	20
〈표 2〉 화전민의 유형 .....	32
〈표 3〉 두천과 소광의 자연부락 (출처: 울진군지) .....	67
〈표 4〉 두천리와 소광리 조림내역 (제공: 울진국유림관리소) .....	101

## 그 립 목 차

〈그림 1〉 대왕송 아래에서 본 산지 © 장예지 .....	33
〈그림 2〉 국유림과 사유림을 분기하는 경계석 .....	42
〈그림 3〉 GMC차량 진입을 위해 길을 낸 모습 .....	45
〈그림 4〉 과거 산판길이었던 임도 © 장예지 .....	46
〈그림 5〉 별목에서 살아남은 ‘못생긴 소나무’ © 장예지 .....	48
〈그림 6〉 울진-봉화 옛 보부상길 © 중앙일보 .....	56
〈그림 7〉 셋재 성황사 © 장예지 .....	60
〈그림 8〉 보부상단원 이름이 빼곡한 성황사 내부 현판 © 장예지 ·	61
〈그림 9〉 두천2리 서낭당 © 장예지 .....	62
〈그림 10〉 대광천 옆 독가촌 집터 모습 © 장예지 .....	67
〈그림 11〉 이주사업으로 정부에서 제공한 가옥 형태 © 장예지 ....	78
〈그림 12〉 화전정리 완료구역을 표시한 지도 © 장예지 .....	86
〈그림 13〉 화전정리기록카드: 소광리의 예 © 장예지 .....	88
〈그림 14〉 낙엽송 조림지 모습 © 장예지 .....	89
〈그림 15〉 1950년경 불에 탄 나무 © 장예지 .....	96
〈그림 16〉 사방에 편재하는 낙엽송 조림지 © 장예지 .....	100
〈그림 17〉 한현산식림회명부 © 장예지 .....	108
〈그림 18〉 마을과 산림의 경관 © 장예지 .....	112
〈그림 19〉 산림의 분할 (출처: 국토녹화10개년계획) .....	114

〈그림 20〉 송이의 등급 (출처: 산림조합 홈페이지) .....	122
〈그림 21〉 송이 도난 방지 대비 시설물 설치 경고문 © 장예지 ....	136
〈그림 22〉 숲길에서 바라본 보호구역 © 장예지 .....	144
〈그림 23〉 도처에서 발견되는 입산금지구역 팻말 © 장예지 .....	145
〈그림 24〉 보부상의 옛길을 복원한 골짜기 © 장예지 .....	147
〈그림 25〉 금강송군락지를 둘러보는 탐방객 © 장예지 .....	148
〈그림 26〉 현령비(좌)와 그 뒤에 펼쳐진 주막터(우) © 장예지 .....	151
〈그림 27〉 3구간 생태경영림(좌)과 탐방객의 모습(우) © 장예지 ...	152
〈그림 28〉 화전민이 두고 간 솔단지(좌)와 화전지의 식생(우) ©	156
〈그림 29〉 황장봉산 동계표석 표지판 © 장예지 .....	158
〈그림 30〉 임도와 숲길 사이 © 장예지 .....	163
〈그림 31〉 금강소나무숲길 지도 (출처: 남부지방산림청) .....	164
〈그림 32〉 문화재목재생산림을 식별하는 표시 © 장예지 .....	165
〈그림 33〉 송이 채취 경계를 표시하는 화살표 © 장예지 .....	167

이 논문은 2015년 정부재원(교육부 BK21플러스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 21B20151813155)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내산 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1979년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남한에는 화전 가구 300,796호가 산에서 생계를 이었다. 1호당 5명의 가족을 상정하면 약 1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화전을 했던 셈이다(배재수·이기봉·오기노 지히로 2007: 32).<sup>1)</sup> 전국의 화전민들은 1973년 수립된 녹화 10년 계획으로 산에서 떠나야 할 ‘이주 대상’이 되었다. 1974년 화전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를 주관한 산림청은 사업이 6년 만에 공식적으로 ‘성공 및 완료’ 되었다고 자평한다.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푸르고 울창한 산림’ 경관은 누군가 산을 떠나고, 조직적으로 나무를 심음으로써 창안된 구성물이었다.

인류학에서 자연은 사회의 상대어 또는 보충물로 개념화되곤 했다. 가령 구조주의 및 상징인류학에서 자연-사회의 이분법은 신화와 의례, 분류체계 등의 ‘사회적 삶’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게 작동했다(Descola & Pálsson 1996: 2). 하지만 경계가 공고한 이분법은 한 공간이 자연으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은 설명해 주지 못한다. 여러 민족지적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바, 자연-사회 또는 자연-문화의 이분법은 비서구 사회에서 물리적 환경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양상과 맥락을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자연이라는 개념은 결국 문화적, 역사적 인자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었다(Ibid.: 82).

본 논문은 해방정국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이라는 공간이 자연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사람들은 그 바깥에 머물게 된 과정, 즉 산이 ‘자연’으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핀다. 전 국토의 70%가 산림인 한반도에서 산림 공간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특히 산간지방의 경우, 생계유지와 사회 활동, 종교 생활 전반

---

1) 사실 1970년대 집계된 화전민의 수는 제시된 자료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치를 얻는 것은 힘들다.

이 산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산은 인간 사회와 동떨어져 자체의 활동 원리로 작동하는 ‘자연’의 공간이라기보다, 개인과 지역 공동체, 국가의 전유(專有) 의지가 계속해서 침투하는 ‘사회적 공간’의 성격을 내재한다.

산림을 무대로 펼쳐지는 개인과 마을, 국가라는 세 주체의 상호작용은 시기적으로 양상을 달리한다. 그에 따라 산림의 경관 및 공간에 부여되는 의미도 변화해갔다. 변화의 방향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양자는 서로에 대한 대립으로서 공존한다. 그러나 인식과 실재 모두에서 자연과 사회의 대립은 언제나 불완전하게 서로를 의지한다. 일반적으로 산림은 사람들의 사회적 삶이 발현하는 공간, 가령 농촌공동체나 도시의 대척점에 있는, ‘자연환경’이 전부인 공간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는 환경을 인간 삶의 배경 혹은 전경으로 두어 정태적 대상으로 박제화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의 발로일뿐더러, 산림 내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운동·활동의 역사를 외면한 시각이다.

본고는 금강소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두 마을인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두천리와 금강송면 소광리를 연결하는 산림을 민족지적 연구 공간으로 정하였다. 연구자는 산림에서 시기를 달리하며 발생한 정치적 사건과 경제·사회 활동이 해당 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맞물리며 산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사회적 특성을 부여받으며 다른 공간과의 분리 및 연결을 반복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연구대상지인 울진군 북면 두천리(총면적 24.30km<sup>2</sup>)와 금강송면 소광리(총면적 75.81km<sup>2</sup>) 산림은 산림면적 전체의 80% 이상이 국유림으로, 울진군내에서도 대표적인 산간 지역이다. 그 중 3,705ha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금강소나무 군락지 약 23.14km<sup>2</sup>가 포함되어 있다(울진군 2016). 금강송 군락지는 조선 숙종 6년(1680) 왕실 황장봉산으로 지정된 뒤 1959년 국내 유일의 육종림이 되었다. 1985년에는 천연보호림으로, 2001년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국가 차원의 보호 대상이다.

유구한 숲의 역사를 자랑하는 두 지역이지만, 우수한 생태계를 갖춘 숲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림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 역시 높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울진군은 대표적인 송이 생산지 중 한 곳으로, 송이채취는 두천리와 소광리 주민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2월 ‘울진금강송 산지농업 시스템’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임업유산 제1호)로 확정해 숲 경관보전과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sup>2)</sup> 이는 비단 현 시기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의 대규모 목재 수탈은 물론, 절대적 빈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산에서 의식주를 해결했다. 결국 숲이 완전한 ‘보전’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현상인 셈이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함의한다. 첫째, 해방 정국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마을 공동체, 국가가 산림을 전유하는 방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 변화가 20세기 한국사회를 분기하는 시대별 특수성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고찰한다. 한반도에서 산림은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특히 산간지방에서 산은 생계유지는 물론 사회 활동과 종교 생활 전반이 이뤄지는 공간이었다. 여러 주체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또한 이 공간에서 맞물렸다. 지역민과 외지인, 산림공무원 등은 갈등과 화합을 반복하며 시기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산림을 전유했다. 이러한 변주는 한국의 20세기를 수식하는 식민지배기와 해방 정국, 근대화 등이 표상하는 시대적 특수성의 맥락을 내포한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위의 변화 과정에서 포착되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고찰하는 데 있다. 산림은 사람들의 사회적 삶이 발현되는 공간의 대척점에 있는, ‘자연’이 전부인 환경으로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환경을 인간 삶의 배경으로 두고, 정태적 대상으로 박제화하는 인간중심적 사고의 발로일뿐더러, 산림 내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활동의 역사를 외면한 시각이다. 오히려 인간은 산림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는 갖가지 실천을 통해 ‘사회적’ 관습과 소유의식, 공동체 규율을 형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촌민이 적극적으로 산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국가가 법과 정책의 잣대로 이들의 활동에 개입하며 산림을 변형시키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른바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라는 양자의 경계는 어떻게 생성과 해체를 반복하는 지 살펴볼 것이다.

---

2) 2017년 4월 25일, 울진의 소리, “울진군, 생태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

상세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본문에서는 해방 후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지 산림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를 시계열 순으로 엮어내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화전정리사업부터 산림보호활동에 이르는 국가의 산림 정책은 어떤 정치경제적 특성을 가지며, 이는 산림생태계와 마을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산림을 향하는 국가의 시선은 산촌민과 마을 공동체의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국가가 내세우는 권력과 통치 체제에 따라 마을과 산림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화전과 벌목, 임산물 채취 등 다방면으로 산림 생태계를 ‘자원화’하는 산촌민 가정과 공동체의 행위 역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산림 정책이 표방하는 가치와 실제 적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고립된 산촌 마을의 일상에 투입해 마을과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국가의 역할과 그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주민과 마을 공동체, 국가가 산림을 전유한 방식 및 이를 통해 발현되는 산림을 향한 소유의식과 관련된다. 개별 주민과 그들이 이루는 마을, 국가는 각자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산림을 활용한다. 세 주체가 산림을 전유하는 양상은 이들이 ‘산’이라는 장소를 이해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내재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산림 정책을 수행하는 관료와 마찰을 일으키거나 협력하는 등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또한 산림 내 자원을 향유하거나 보호하는 일련의 실천 양식은 독특한 ‘소유’의 의식을 형성한다. 소유 의식은 누가, 어떤 법적 또는 관습적 토대 하에 특정 산림이 ‘나의 것’이라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본고는 산림을 전유하는 세 주체의 상호작용 과정 및 그 가운데 발생하는 소유 의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질문은 개인과 마을, 국가라는 세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산림에서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적 경계가 떠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천과 소광 사이에 놓인 산림의 경관은 시대적 특수성과 조우하며 변화를 거듭했다. 금강소나무를 보호하는 현재의 푸른 숲 경관은 과거의 모습들이 축적된 결과물인 한편, 계속해서 변화하는 동태적 경관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은 물론, 정책을 수행하

는 관료, 국가의 담론에서 자연과 사회의 관계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표상되었다. 표상은 곧 산림 생태계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도 했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다룬 이론과 국가의 자연 전유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 그리고 국내 산촌 공동체와 화전민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대상 사이의 경계 설정 및 이분화 논의는 산림을 어떤 장소로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고찰하는 기본적 토양이 된다. 본 연구는 경계를 공고히 만들거나, 그것을 흔들고 때로는 지워 버리는 여러 주체들의 작용과 반작용을 다룬다. 때문에 자연과 사회를 가르는 이분법에 대한 연구는 산이라는 공간에서 얹혀드는 다양한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독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논의할 국가의 생태정치에 관한 이론은 국가가 자신의 자원 및 자연의 전유 의지와 권력을 개인과 공동체에 행사하는 방식 및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적 맥락에서 군사 정권이 바라보는 산림과, 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인식하는 산림 사이에 발생하는 어긋남을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 논의와 결부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촌 공동체 및 화전 농경, 화전민을 주제로 한 연구는 한국 내 화전 현황의 전반적 성격과 산촌 공동체의 특수성을 큰 흐름에서 바라보는 데 유의할 것이다.

### 1) 자연과 사회에 관한 이분법

자연과 사회 혹은 문화의 이분법적 이해는 화전민의 산림과 마을 정착을 다루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시작점이다. 생태학을 접목한 인류학 연구에서 뒤르켐과 모스는 자연(대우주)과 문화(소우주) 간 관계는 인간의 지각과 사회적

조직 형성의 근본적 토대를 이룬다고 보았다(Durkheim & Mauss 1963). 자연-문화의 이분법은 이후 생태인류학의 연구 방향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생태인류학은 인간과 자연 또는 문화와 자연의 관계를 생태계라는 단일한 분석체계 내에서 본질적 상호의존의 관계로 파악하는 총체성의 관점을 취한다(오명석 2012: 209). 특히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과 자연에 관계하는 인간 사회의 양상을 다루는 문화생태학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문화생태학적 접근에서는 보편적 자연을 가정하고, 그에 적응하는 인간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문화들이 보편적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기술했다(이선화 2015: 7).

인류학에서 환경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의 지식과 인식, 경험을 포괄하는 연구 영역을 일컫는 용어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Yancey et al. 2015: 157). 그러나 문화 생태학 내부에서 환경에 관한 지식과 가치 이해는 특정 환경에 대한 문화적 적응 현상으로 이해되었고(Steward 1955; Rappaport 1968; Netting 1977), 인간의 인식과 문화의 영향은 환경에 대한 앎을 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는 자연을 사회적 행위의 기본적인 결정요인으로 보는 자연과학 모델을 취한 서구적 관점으로, 비서구권 문화가 환경과의 관계를 개념화하는 방식엔 주목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Descola & Pálsson 1996: 2).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삼림의 전유 형태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산과 상호작용해 온 두천과 소광 주민이 부여하는 의미에 주안점을 둔다. 즉 지역의 맥락에서 산촌민이 환경을 바라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주거와 연료, 식량 조달을 위한 전 삶의 과정에서 산림은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으로 황폐화된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자원이자 터전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근대화의 열풍 속에서 산림녹화의 성공이 곧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그에 따라 마을과 산의 경계가 보다 촘촘하게 설정되면서 산은 순수한 원형의 ‘자연’이 되어 갔다.

짙(Tsing, 2005)은 자본주의의 전지구화에 따라 인도네시아 산림이 해외 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플랜테이션 농장과 벌목업이 성행하면서 농경 지역과 일으키는 마찰에 주목한다. 자본의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해 한 국가의



산림은 전 지구적으로 이어진 산맥의 일부로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공간’이 됨으로써 벌목업자와 농장주들이 산림을 전유한다. 때문에 자연-사회의 이분법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산림을 사회적으로 향유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측면은 두천과 소광에서 국가의 법적, 정치적 개입이 마을과 주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밝혀내는 데 이론적 지침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연구대상지 산림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변화를 살펴보는 가운데, 개인과 마을, 국가가 산림에 투영하는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팀 잉골드(Tim Ingold)의 관계적 시각(relational view)은 자연과 사회라는 두 관념이 두천과 소광의 산림에 용해되는 방식을 다루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반이다. 잉골드는 각각의 경계가 명확한 자연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간다. 그는 인간과 사물은 각각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 않고 무한히, 계속해서 펼쳐지는 관계의 장 안에서 하나의 결합체로서 성장과 발전을 이룬다고 보았다(Ingold 2000: 15). 이러한 관계의 장은 일종의 그물 연결망인 메쉬워크(meshwork)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간과 사물의 구분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구분은 다종다양한 관계적 망 내에서 위치 지워진 결과로 보아야 한다.

자연과 사회를 하나의 총체적 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제는 ‘경관(Landscape)’이다. 본 연구에서 파악하는 산림 역시 분절된 공간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행위자가 되어 창안하는 관계성의 공간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역사적 경관을 통해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엮어내 보고자 한다. 호웰(Howell 1996)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에 거주하는 취웅(Chewong)족은 인간을 다른 존재, 즉 동식물과 영으로부터 분리하지 않는다. 이는 언어나 이성, 도덕적 코드 등의 ‘의식적 측면’(consciousness)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Descola & Pálsson 1996: 7). 호웰의 취웅족은 이분화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내리고자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짚은 사회-자연적 경관(social-natural landscap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의 프로젝트에 의해 창조되는 ‘사회

적'인 성격과 동시에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비인간 종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경관의 '자연적' 측면을 함께 강조한다(Tsing 2005: 173).

본 연구 역시 산림의 변화의 다양한 측면 중 자연과 사회 양자의 연결성에 주목해, 그러한 연결이 시각화된 경관 개념을 차용해 산림의 모습을 기술한 것이다. 진종현(2016)은 녹화사업 이후 형성된 푸른 산을 발전(개발)의 상징경관이자, 동시에 민족경관의 재현체로 본다. 이는 일종의 도덕지리적 경관으로, 산림의 생태적 측면을 넘어서 국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차원에서 산림을 보다 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울진군 두천리와 소광리에서 진행된 산림녹화사업 역시 산림 보전을 위한 환경적 가치 외에도, '푸른 삼림'을 통해 국가의 부강함과 민족의 협동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또한 이후 지속되는 산림 보전의 기조는 마을과 주민의 경제 상황 및 산을 '탐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맞물리며 지속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이를 거듭하는 푸른 산의 경관이 갖는 정치생태학적 성격은 뒤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사회-자연적 경관의 특성은 화전농업과 벌목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국가가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송이 채취와 문화적 '관광' 상품으로 산림을 전유하는 전 국면에서 드러난다. 여기서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관한 지역민의 인식은 호웰의 관점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사회와 자연이라는 명확한 이분법에서 벗어나, 양자가 사람들의 생활과 언어 속에서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보다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잉골드의 '관계적 시각'은 자연/문화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연'이 그 자체로 주어진 자연과 문화적으로 구성된 자연을 모두 지칭한다 해도, 그것은 언제나 인간이 사고하는 한에서만 자연이라 불리기 때문에 결국 문화적 구성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Nick 2012: 122). '환경' 역시 유기체와 관계하는 한에서만 환경일 수 있기에 관계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을 녹화 사업의 수행 주체(국가)와 사업 대상(자연, 마을 공동체, 원주민)에 적용해 본다면, 마을을 둘러싼 산림이 공동체의 거주 영역과 철저히 분리되는, 인식 바깥의 공간으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술하였듯 쩡이 제안한 사회-자연적 경관은 인간의 영역과 숲의 영역이 명확한 경계 없이 복합적인 경관을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 간의 실제적 관계를 설명해 줄 것이다(Tsing 2005: 174-175).

## 2) 국가와 국민, 그리고 생태정치

정치생태학은 인간사회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자연현상과 밀접한 관련 속에 놓여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폴 로빈스 2008). 이 때 국가와 자연의 관계는 과정적 속성을 갖는다.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황진태·박배균 2013: 349). 산림녹화사업과 화전민이주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 재구성하기’는 국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일어났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 당시 본격화된 산림녹화정책을 다룬 대다수의 단행본과 정부보고서는 주로 한국이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자 세계적 모델이라는 우수성을 조명하며 성공 담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가령 김종철(2011)은 산림녹화 성공을 부른 국가의 능력과 국민의 솔선수범, 협동정신을 강조하며 민족적 자긍심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경준 외(2015)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숲과 사회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광복 이후 산림녹화의 역사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녹색국가론과 토건국가론이 주를 이룬다. 녹색국가론은 국가 내부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고, 녹색의 가치를 시민사회까지 확산시킬 것을 함의한다(황진태·박배균 2013: 356). 문순홍(2006)은 과거 한국의 국가형태가 어떻게 자연을 ‘파괴’했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토건국가론은 국가경제에서 토건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지적한다(황진태 2013: 317). 그러나 두 이론은 박정희 정권 시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가 일방적인 자원획득을 목적으로 자연을 파괴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국가와 자연의 복합적 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황진태·박배균 2013: 357).

이런 성찰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정치생태학 논의에서 다뤄지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산림녹화사업의 경우, 국가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담겨있으므로 단순히

국가를 자연 훼손의 주체로 특정하기 힘들다. 또한 녹화사업은 산림의 생태적 가치 증진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 사업의 성격도 함의한다. 때문에 자연과 국가를 대립시키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를 보다 명확히 밝혀보고자 한다.

배재수(2007)는 1972년 산림개발법 제정으로 조림을 유도하는 경영 중심 산림정책에서 국가 재정과 경찰력을 동원한 치산녹화 10년 계획 수립으로 임정(林政)의 기조가 변화한 까닭을 박정희 대통령의 ‘시간적 제약’ 인식에서 찾았다. 즉 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영림(營林)공사가 아닌 행정력 주도의 사업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는 고도성장을 통치 정당성의 수단으로 내세운 박정희 정부의 통치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만용(2010)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진 농업에서의 녹색혁명과 임업에서의 녹색혁명을 ‘이중의 녹색혁명’으로 명명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것과 함께 혁명을 진작시킨 과학기술과 정치가 맺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국가의 시각에서 삼림녹화 사업을 조명하거나 당시의 통치 패러다임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핀다면, 국가 통치 전략의 측면에서 화전농업 금지 및 녹화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배리(Barry, 2007)의 정리에 따르면 보수적인 우파 정권은 환경에 대한 접근 역시 환경(생태)-파시즘(eco-fascism), 환경(생태)-권위주의의 관점을 토대로 통치를 실현한다.

스콧(Scott, 2010[1998])은 국가가 삼림을 과학적으로 통제하고, 인간과 삼림의 상호작용은 무시한 채 하나의 거대한 단일 상품으로 대상화함을 지적한다. 이는 삼림녹화 당시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경제 수종(소나무, 잣나무, 낙엽송)으로 조림 사업을 진행했던 양상과 상응한다. 국유림, 사유림의 경계를 획정하고 거주와 노동의 공간과 거주 금지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모두 국가 행정력의 능력 여하에 달린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특히 “삼림 관리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조림”(Ibid.: 37)은 산의 형태를 단순화함으로써 가독성 높은 삼림을 만들고자 한 관리 계획의 일환이었으며, 삼림을 하나의 상품 기계로 개조하려는 시도였다(Ibid.: 48-62).

본래 사람을 모으고 마을을 세우는 것은 국가의 전략이었으며, 국가는 읍

겨 다니는 화전민을 마을에 정주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스콧, 2015[2009]: 38-39). 스콧이 주목한 변방(frontier), 즉 조미아(Zomia)는 다양한 산지농업이 펼쳐지고, 분산성과 이동성이 높은 성격을 지닌다. 그는 ‘평지의 국가’와 ‘산악민’의 공간을 구분하고, 전자가 국가 공간이라면 후자는 비국가 공간으로, 곧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을 상정했다(Ibid.: 51-59). 정착 농업인 벼농사와 달리, 화전은 인구 분산을 일으키고 혼합 경작과 주기적 개간이 가능했으므로 화전민은 정착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국가 통치자들은 화전을 극도로 배척했다(Ibid.: 151).

스콧의 관점을 차용해 보면, 화전민 이주 사업으로 산악에 거주하는 화전민을 마을 공동체로 편입시키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낙엽송을 심은 한국의 녹화사업은 비국가 공간을 국가 공간으로 포섭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도 성행한 정책적 목표였다. 다만, 그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바 베트남에서 이동식 경작자들은 잠재적 체제 전복자로 여겨져 강제 이주와 정착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다. 태국에서도 몽족과 카렌족을 향한 폭력적인 정착 캠페인이 행해졌는데, 군부는 카렌족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구금하거나 국경 너머로 쫓아 버리기까지 했다(Ibid.:152-154). 이에 본고는 스콧이 말하는 국가와 대립하고, 공격 대상이 되는 화전민과 한국의 화전민 사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동남아 산악지대를 유랑하는 화전민과 한 마을에 정착하려는 성향이 강한 한국의 화전농은 일정한 차이를 갖는 바, 본 연구는 그 의미와 이후 전개된 화전정리사업이 화전민과 마을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가 자연의 개념과 공간을 창안하기 위해 구사하는 법과 제도, 또 그에 따라 달라지는 소유 관념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린하우스(Greenhouse 2012)는 말리노프스키와 뒤르켐의 법 개념을 비교하며 법이 형성하는 집합의식을 다뤘다. 또한 보하난(Bohannan 1965)은 기존의 관습과 규범에서 발아하는 법의 이중적 제도화를 통해 법의 성격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의 성격에 기초하여 이것이 산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마을에 미친 파장을 살펴보고, 국가가 산림을 전유하는 가운데 밀려나는 마을과 주민의 산림 소유는 어떤 새로운 실천을 낳았는지 고찰할 것이다.

다양한 주체의 산림의 전유는 곧 누가, 어떻게 산림을 ‘소유’하게 되는가에 대한 법적, 인식론적 구분과 긴밀히 관련된다. 근대적 산림 소유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확립된다. 이우연(2010)에 따르면, 일제는 1911년 국유림구분조사사업을 실시해 장기간 전국적인 실지조사를 벌였고, 국유임야의 관리 경영을 위한 기초를 세웠다. 조선임야조사사업은 귀속이 불분명한 산야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지적제도를 확립해 국유와 민유의 구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최병택(2009)은 이러한 소유권 제도 도입과 관련, 왕토사상에 기반해 촌락공용지를 발달시킨 조선의 체제를 왜곡한 일제의 산림 행정을 비판한다. 또한 이우연(2006)은 소유권 정리가 산림녹화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밝혔는데, 개개인이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산림 소유권을 배분하는 방식이 작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들이 소유권이 제도화된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다뤄져 해방 후 제도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힘들고, 소유를 둘러싼 관념과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에 식민지기에 확립된 것으로 알려진 산림 소유권이 1960-70년대 산림행정에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는지 확인하고, 당시 마을 주민들은 실제로 어떤 소유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기존 산촌 공동체 및 화전 연구

안승택·이경묵은 인류학과 역사학의 접점과 결절 지점을 논하며, 상징적 구성물로서의 공동체가 갖는 함의를 탐구한다. 일국사(一國史)의 맥락에서 평면적으로 다뤄졌던 역사적 사실을 입체화하기 위해 경제와 환경, 기술, 사회 조직 등을 포괄적으로 상호 결부된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 속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안승택·이경묵 2015: 391)은 본 연구의 중요한 참조지점이다. 가령 마을 공동체의 내적 작동 원리가 자연을 새롭게 전유하는 녹화사업이나 벌목상 등의 외지 세력과 맞닿을 때 일으키는 마찰 및 그것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거대 서사 아래 침묵하곤 하는 소지역의 역사를 되살려 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고찰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여기서 공동체란 공유하는 단일 규범이나 원리가 아닌 공동체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의 인식적 토대 위에서 실재한다(Ibid.: 405). 산림과 그 곳에 거처하는 화전민 역시 공동체의 안과 밖을 가시화하는 외곽 경계지대의 존재자라 할 수 있다. 본고는 가변적인 공동체의 경계를 산림과 마을의 경계 문제와 연결 지어 화전민의 주변부적 위치를 논하고, 대규모 녹화사업과 그 이후 산림이 완전한 보호지역이 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경계의 모습을 기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촌 공동체 자연부락의 형성 원리와 그 변화 과정을 다룬 최재석(1987)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최병택(2008)은 박정희 정권과 일제강점기 조직된 산림계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산림계가 마을 주민을 조직 및 동원하는 원리로 작동하게 된 과정을 살핀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두천과 소광의 주민들이 인식하는 ‘마을’의 경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하는 산림의 장소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산림생태계와 화전민, 별목상, 산림 공무원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로, 시대를 달리하며 차이를 보이는 관계의 양상을 통해 탐구해 볼 수 있다.

화전(火田)은 산촌민의 생계 수단이자, 산촌의 문화적 특질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다. 화전에 관한 연구는 첫째, 화전 농업의 기술적 측면과 현황, 둘째, 화전민 생활사, 셋째, 화전정리사업의 주제로 분류 가능하다. 다만 그 비중에 있어 농업기술과 전체 현황을 주된 내용으로 다룬 연구가 가장 많고, 화전민의 농경문화나 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한상복(1966), 이광규·최길성(1968)과 강만길(1981), 정연학(2005)의 논문 등에 그친다. 이광규 외(1968)와 호을영(1977) 등은 현지조사를 통해 화전민의 주거 양식과 생활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내용의 간략함으로 산림에서의 생활양식의 독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먼저 화전농경에 관한 연구에서 옥한석(1985)은 화전의 생태적·문화적 특성에 관한 이론을 폭넓게 다루면서 시대에 따른 한국 화전 농경 기술의 변화와 작부체계 및 전국적인 화전 현황을 제시하였다. 조동규(1966)의 논문에서도 화전민의 지역적 분포와 시기에 따른 화전민 수의 증감을 통계 수치

로 제시해 객관성을 더했다. 그밖에 민병근(1995)은 화전농업의 생태 관행을 민속학적 관점에서 다루었고, 생물학자인 이규송(2006)은 강원도 평창군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해, 화전 후 묵밭의 식생천이 과정에서 발달하는 식생 구조와 종 다양성의 변화를 시기별로 조사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화전 농경에 대한 보편적 특성 및 생태적 성격, 그리고 화전민의 현황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지역별 특수성과 지리·생태적 조건과 화전 농경 문화의 연관성 등은 세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박호석(2001)의 연구는 화전 경험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통 생업 기술에 관한 과거의 기억을 구술하는 방식을 사용해 민속적 특징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차용하여 두천리와 소광리에 오랜 시간 거주하며 화전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주민의 생애사 구술을 바탕으로 화전 농경과 마을, 산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상복(1966)은 한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변동과 맞물리며 변모하는 부락사회를 논의하는 가운데 화전부락의 특이성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토대로 화전 농경의 특수성을 야기한 산간지방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당시 화전민의 정치경제적 조건 및 문화와 환경의 상호 관계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화전정리사업을 다룬 논의로는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발간한 정부보고서 및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 요인을 진단하는 연구 논문 등이 있다. 『화전정리사』는 화전정리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 산림청에서 발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을 전국 단위로 서술하였다. 화전정리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이 전국 단위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사업의 단계별 진행 시기와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두천리와 소광리에서 실제로 화전정리사업이 진행된 양상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을 국가가 생산한 공식 담론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논문으로는 김동수(1974)와 호을영(1975), 이기봉·배재수(2007), 신민정(2011) 등의 논문이 화전정리사업의 전개 과정과 실태 및 성공 요인이나 문제점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의 대다수는 정부 출처의 통계 자료와 정책 내용 그 자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이 지역 사



회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이기봉 외(2007)의 경우, 1974-1979년의 화전정리사업이 성공했던 까닭을 사회적 필요조건과 경제적 충분조건, 기술적 충분조건이라는 분류 아래 분석하여, 사업의 성공을 가능케 한 배경을 거시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민정(2011)은 사업의 성공이 정부의 능력이었다기보다 당시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화전정리사업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발판 삼아, 실제로 화전민이 이주하게 되는 과정 및 노동 환경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화전민의 이주가 마을 공동체에 미친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의 화전농경과 화전민 관련 연구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현황 분석이나 사업 시책 관련 성과 정리가 다수를 이룬다. 화전민 고유의 생활사나 문화적 의의를 다룬 글은 공선옥(2002), 노익상(2000) 등이 있다. 그러나 르포 형식의 마을 답사기이기 때문에 서술의 특성상 화전민 삶의 생애사적 궤적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배영동(2013)의 연구는 경북 영양군 수하리를 연구 대상으로 특정해 마을 주민의 화전 농업 선택 배경과 전승 지식 등을 면밀히 다루어, 화전에 대한 소지역 중심 연구가 부족한 한계를 보완한다.

본 연구는 두천과 소광리 화전 농경의 생태적, 문화적 특성을 다루는 것과 더불어, 1960년대 이전부터 화전을 했던 주민들의 삶 자체에도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화전민 연구는 대부분 그들의 화전 행위에 주목해 이뤄져 온 측면이 있어, 산촌 연구에서 화전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의 삶의 과정은 도외시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통시적 관점으로 마을 공동체의 유지 및 화전민 삶의 방식의 변화 흐름을 쫓아 보고자 한다. 산촌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을 함께 다루는 차원에서, 산림 정책의 집행 이후 산촌민의 생업과 사회관계 및 마을 내부의 분화 등을 세밀하게 다루는 것이다.

###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두천리는 동쪽으로 형제봉, 남쪽으로는 악구산(岳丘山), 북쪽으로는 세덕곡산(細德谷山)으로 둘러싸였다(울진문화원 2013: 903). 소광리는 태백산맥의 지맥으로, 마을의 동남쪽은 세덕산(細德山)이 있고, 서쪽은 백병산(白柄山) 연봉(連峰)이 솟아있으며, 남쪽은 진조산(眞鳥山)으로 둘러싸였고, 북쪽은 세덕산맥(細德山脈)과 백병산맥(白柄山脈)의 연봉(連峰)이 솟아있다(Ibid.: 929-930). 이처럼 삼림이 마을 전체를 감싸는 두천리와 소광리는 오늘날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의 개장으로 각지의 등산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한 산촌마을이다.

본 연구는 두천리와 소광리를 연결하는 삼림지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곳의 금강소나무 군락지는 조선조부터 봉산(封山)으로 지정된, 국가 차원의 보호 대상지였다. 우수한 품질의 소나무가 많은 탓에 일제 강점기에는 집중적인 수탈을 당한 역사도 지닌다. 1959년 국내 유일의 육종림으로 지정된

이후 1985년 천연보호림에서 2001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김충원 2017: 5), 금강송은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를 온 국민에게 향유케 한다는 목적으로 숲길을 개장해 제한적인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삼림이 ‘보호’의 대상만 된 것은 아니었다. 보부상의 십이령길은 두천과 소광을 관통하며 춘양과 봉화 등지의 외부 세계로 나가는 출입구 역할을 했다. 넓은 삼림지대를 갖춰 소광과 두천에 살았던 산촌민은 화전으로 식량을 마련했다. 마을 밖 사람들, 가령 벌목업자와 도벌꾼도 벌채를 위해 마을을 찾았다. 따라서 소광리와 두천리는 산림 자원을 전유하려는 이들을 매개하는 거점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또한 마을의 내부인인 주민은 산림에서의 경제 활동과 종교 생활 등을 두고 지역 공동체 및 국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했고, 이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형태에 변화를 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대상지에서는 삼림의 역사를 통해, 그 역사적 변화를 추동하고, 때로는 이를 감내해야 했던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124명이 거주하는 두천리는 두천1리와 두천2리 행정리로 이루어졌다. 두천1리에는 약 33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밭농사와 송이 채취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가 많다. 두천1리는 한양으로 가는 십이령 길목에 있으며, 이 길로 보부상이 오가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상인들의 숙식을 책임지는 주막이 많았다. 그러나 36번 국도가 닦이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보부상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주막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또한 1968년 울진삼척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화전민 보호를 목적으로 인근 골짜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이 시행되어 8가구 약 60명의 주민이 두천1리로 소개를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두천 2리에는 안말래와 사기골(사기점), 장평 등 세 개의 자연부락이 있었으며, 장평에도 주막이 있어 십이령을 넘는 길손들이 쉬어 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곳 역시 68년도 간첩 사건 이후 떨어진 소개령에 의해 사람들이 떠나갔으며, 국가가 제공한 이주 가옥이 두천 1리에만 있어 2리 주민이 1리로 이사를 가야 했다.

현재 마을 주민 대다수는 농업과 임산물 채취를 주 수입원으로 한다. 울진숲길의 개장 이후에는 부녀회 여성을 중심으로 탐방객을 위한 도시락을 제공해 부수입을 얻고 있다. 두천1리는 숲길 1구간의 출발 지점이기도 해 탐방객들은 트래킹 전날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민박에서 묵은 후 산행을 시작해 이 또한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소광리는 벼농사를 오래 전부터 지어 두천리를 비롯한 다른 산간 마을에 비해 풍족한 편이었다. 1947년 첩첩산중에 건립된 소광초등학교(현 소광2리 위치)가 이를 방증하는데, 큰 길 하나 없는 오지 마을에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골짜기 곳곳에서 모여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점차 인구가 감소하며 총 세 개 리로 이뤄졌던 소광리는 현재 1리와 2리로 구분된다. 흥미로운 점은 마을 전체가 산지로 둘러싸여 화전 경험을 가진 주민도 많았다는 사실이다. 가령 ‘널밭골’이라는 지명은 화전민이 살면서 밭이 많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고, 너삼밭이라는 지명도 화전민이 너삼이 많은 곳을 개척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울진군 2001: 932).

금강소나무도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에 집중 분포하며, 숙종 때 지정된 황장봉산도 소광리 산림에 위치한다. 소광2리는 금강소나무숲길 제3구간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으로, 3구간 내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강소나무를 집중 육성하는 생태경영림도 이곳에 자리 잡았다. 현재 소광1리에는 금강송 에코리움이 건립 중에 있으며, 숙박시설과 농산품 판매지, 홍보관 등을 통해 금강송의 가치를 홍보하고 마을 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면담 및 참여관찰, 문헌자료 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면담은 두천리와 소광리 마을 주민과 울진군청 및 산림청에 근무했던 은퇴 공무원, 울진금강소나무숲길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행했다. 1960-70년대 산림녹화사업 전후 산림의 전유 역사가 주요한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심층면담은 과거의 기억을 술회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주민 인터뷰의 경우, 두천리와 소광리에 어렸을 때부터 거주해 화전이나 산판일, 녹화사업 등

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 위주로 진행했다.

울진군청과 산림청에서 각각 근무한 공무원 출신을 면담해 지역 주민의 기억과는 상이한, 정책 집행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공무원 인터뷰는 화전정리사업과 녹화사업 실행에 대한 질문 위주로 이뤄졌다. 반면 울진숲길 관계자 인터뷰는 ‘현재’ 시점의 숲길 운영과 관련되므로 생애사나 구술사보다 지금의 숲길 운영 방침과 과정, 애로사항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면담은 서울대 IRB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아(승인번호 IRB No. 1703/003-009) 연구 기간 동안 한 명당 2-3회 이상 진행했다.

연구의 전체 수행 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이고, 자료수집기간은 IRB 승인일인 2017년 3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현지조사는 IRB 승인 이전인 예비조사 기간과 본 조사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2016년 7월과 8월 총 4차례에 걸쳐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와 북면 두천리 예비조사를 진행하였을 때에는 현재 마을의 경제활동과 사회관계, 마을 내 조직 등 전체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 마을 주민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금강소나무숲길 1구간과 3구간 탐방객을 관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숲길 트레킹 코스의 특성 및 역사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숲길 해설사 및 탐방객과 가벼운 면담을 실시했다.

본 조사 기간 동안에는 총 8차례 최소 2박 3일에서 최대 7박 8일간 두천리와 소광리 및 울진군청, 울진문화원,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등에서 현지조사를 완료했다. 두 마을에서는 시대별로 변천한 산림의 모습과 연관 지어, 마을 주민들이 산림에서 영유한 삶의 방식과 관습적 조직 및 제도, 규범 등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울진군청에서는 1960-80년대 생산된 군청 산림과 자료 및 현재 군청에서 실시하는 산불감시활동 및 송이 생산 증진 관련 자료집을 요청하였다.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1970-80년대 두천리와 소광리의 조림 실적 및 화전 정리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울진문화원 방문 시에는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산림 문화와 역사를 다룬 문헌과 지도 자료 등을 찾고자 했으나 두천 및 소광 지역에 특정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조사 기간 동안 방문한 울진금강소나무숲길에서는 개통된 숲길 전 구간을 트레킹하며 숲

길 운영 인력 및 해설사와 보다 밀도 있는 면담을 진행해, 현재의 숲길 운영과 애로사항 뿐 아니라 역사·문화·생태 자원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참여관찰의 장소는 숲과 마을이었다. 총 5구간으로 구성된 울진숲길에서 연구대상지가 모두 포함된 구간은 1구간과 3구간, 4구간이다. 연구자는 연구기간 동안 각 구간을 2-3회씩 트래킹하며 금강송 군락지를 포함한 숲의 상태는 물론, 숲길의 형태와 구성, 해설사의 활동 등을 면밀히 관찰했다. 또한 탐방객이 해설사와 소통하는 양상이나 숲길을 걸으며 보이는 특이점 등에 주목했다. 이는 숲길을 둘러싼 각 행위자들의 반응을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해석하려는 시도였으며,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숲해설사 및 탐방객과 가벼운 대화로 비공식적 면담을 병행했다.

번호	거주 마을	성명(가명)	연령대	비고
1	두천1리	배기용	70대	두천1리 산림계장
2		남정희	70대	
3		전민식	70대	
4		오영자	70대	
5		최상원	70대	
6		이석원	60대	
7		박정화	60대	
8	두천2리	전용수	70대	
9		박원철	80대	
10		박인화	70대	
11	소광1리	김순자	80대	
12		최미희	70대	
13		박용현	70대	
14		김옥희	70대	
15		정광운	70대	
16		주영희	60대	

17		나우식	70대	소광1리 산림계장
18		이한길	70대	
19	소광2리	김동수	50대	
20		박영호	80대	울진숲길 해설사
21		장순자	70대	
22		강석중	70대	
23		김원복	60대	소광2리 이장
24		유정식	80대	소광2리 노인회장
25	기타	이옥희	90대	구 두천리 거주
26		이현종	60대	현 산림조합 근무
27		김원호	70대	구 울진군청 근무
28		박윤수	70대	구 산림청 근무
29		정원경	50대	울진금강소나무숲길 관계자
30		최동열	60대	국유림관리소 근무

〈표 1〉 심층면담자 목록

마을 내 참여관찰은 면담이 주로 이뤄지는 면담자의 집과 마을회관에서 주로 행했다. 특히 마을회관은 주민 쉼터 역할을 했으므로, 편안한 분위기에  
서 대화를 나누며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데 용이했다. 두천1리의  
경우, 매주 화요일마다 보건소에서 방문치매교육을 실시해 마을 여성 대다수  
가 참여했다. 연구자는 치매교육을 3회 정도 참관하며 마을 여성들 간 관계  
맺음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주민 다수가 모인 상황을 기회삼아  
그룹 면담을 행해 과거의 기억을 대화를 통해 나누는 과정에서 보다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다.

문헌자료 분석은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자료 및 산림청에서 생산한  
자료 및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숲의 지명과 위치상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는 고지도도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울진문화원에서 펴낸 군지와  
향토사 자료 역시 세밀한 지역사를 파악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자료였다. 국

가기록원 자료는 국가 주도 산림 정책과 관련된 문서가 가장 많으며, 산림녹화사업의 성공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는 물론 1970년대 두천리와 소광리 관련 지도 및 국유림 양여 관련 문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유림관리소는 1970년대 후반 소광리의 화전 정리 현황을 지도와 표 자료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관리소의 동의하에 당시 화전정리 담론을 파악하고, 실제 화전지 정리 현황 파악을 위한 1차 자료가 되었다. 그 밖에도 신문자료는 연구대상지에 한정된 보도를 찾는 것은 힘들었으나, 도벌 사건이나 화전 정리 문제 등을 거시적으로 살피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 지역적으로 빈발하던 산림내 훼손 행위 및 이를 고발, 처벌하는 보도로 당시 산림에 관한 인식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II. ‘별건 산’의 추억

다음 장은 해방 정국에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울진군 북면 두천리와 금강송면 소광리를 따라 펼쳐지는 산림을 주 무대로 한다. 농토가 없거나 부족한 산촌민의 화전 농경 및 대규모 벌채는 산이 ‘별정계’ 되도록 일조한 산림 전유 행위였다. 사전적 의미로 전유는 개인이 혼자 자신의 용도에 맞게 어떤 물리적 실체를 도용 또는 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윤지환(2011)에 따르면 공간에 대한 전유는 공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상상과 실천으로 공간 활용과 생산을 의미한다(윤지환 2011: 253). 산림에서의 전유 역시 주민 개개인이 단독으로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림 내 행위는 마을 차원에서 혹은 마을과 행정의 관계 내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나름의 규율과 원리가 주민의 화전 농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산림과 마을 공간의 사회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화전과 벌목은 산의 물리적 형태 뿐 아니라 생태계의 변화에도 기여한 대표적인 교란 행위였다. 또한 산을 오가고, 그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노동 형태, 경제 및 사회관계의 많은 부분이 산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때문에 주민 개개인과 벌목상, 마을 차원의 산림 전유 양상은 각 행위 주체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준다. 이로써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 놓인 경계가 함의하는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화전과 벌목 이외에도 어린 나무와 나뭇이 자라는 별건 산을 찾는 다양한 목적을 함께 다룸으로써, 마을과 산림의 구분 및 이를 포괄하는 생활세계로서의 산림의 성격을 조명할 것이다.

## 1. 화전을 통한 산림의 전유

### 1) 산전(山田) 부치는 사람들

인간과 자연의 땅이 모두 무법지대였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극빈 상태에 도달했던 소광과 두천 산촌민은 오로지 산에 의지해 생계수단을 마련했다. 사방이 산으로 막힌 오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소유 농지가 없거나 부족한 주민은 화전을 일궜다. 산나물과 칩, 버섯 등을 채취해 끼니를 해결하는 이가 다수였다. 무엇보다 나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었다. 소죽을 먹이고, 땀감으로 쓰기 위해 마을 남자들은 갖가지 나무를 베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국가로 귀속된 일본인 소유의 산까지 합하면 80% 이상이 국유림이었다. 그러나 산림 자원 활용 외엔 별다른 경제 활동 수단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화전과 벌채를 막고, 국유림 입산 금지령을 내릴 순 없었다. 법의 존재란 유명무실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보호하고, 도남벌을 막기 위한 조치로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다. 1955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벌채와 낙엽 채취, 개간 등 산림 훼손행위 일반을 금했고, 이는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었다(산림청 1997). 사람들도 ‘어렵퐁이’ 국유림에서 화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앎이 곧바로 화전을 멈추는 행위로 연결되진 않았다. 화전지를 만들다 산불이 나도 면(面)에서 이를 알고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법이 몰렸다’거나 ‘무법지대에 가까웠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는 까닭이다.

생태적 조건과 경제적 현실도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했다. 두 지역 모두 임야보다 높은 산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평야에 넓은 농토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을 지녔다. 반면 넓은 산림 지대에는 소광천과 대광천 두 계류가 잘 발달했고, 임상도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이 고루 분포했다(배관호 외 2003: 537). 이는 자급자족적 생계유지가 산림생태계에서 이뤄질 여건이 충분했음을 의미한다. 시기적으로도 잦은 피난과 전후의 혼란으로 극빈층에 처한 지

역민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농토가 없는 주민은 자연에서 주식과 부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한 가구당 10명 이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려면 지속적 자급이 가능한 농경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경제 활동이었다. 산림보호조치법이 명시적으로 실시되었다 한들, 군이나 면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볼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도로나 산불감시 시설물 등 기간시설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 주민의 ‘위반’ 행위 일반을 감시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다. 산간지대라는 환경적 특성은 마을의 경제적 조건과 맞물려 주민의 산림 전유 활동을 극대화했다.

### ① 화전농경의 생태학

1950-60년대, 화전농업은 농경 사회의 전통을 유지하는 두천과 소광 주민의 생업의 일부였다. 실제 두 마을을 이루는 자연부락명의 유래만 보아도 화전민의 흔적이 곳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소광2리 널밭골은 화전민이 살면서 밭이 넓다 하여 ‘널밭골’이라 불렸고, 너삼밭의 유래도 화전민이 너삼이 많은 곳을 개척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울진군 2001: 932-933).

기어츠(Geertz 2012[1963])는 화전을 자연생태계의 일반구조에 통합되는 체제이면서 자연생태계의 구조를 유지시킬 수 있는 농경 방식이라 보았다. 즉 “천연의 숲이 수확 가능한 숲으로 변형”되는 것이다(기어츠 2012[1963]: 41-51). 이는 적응(adaption)의 한 방식으로 선택된 화전 경작의 생태적 특성을 강조한다. 즉 화전을 통해 인간의 인위적 개입이 배제된 상태였던 자연은 ‘수확’이라는 인위적 행위가 일어나는 자연 상태로 변모한다. 열대우림과 화전 생태계의 외적 유사성을 분석한 그는 화전경작지가 엄밀한 의미의 ‘경작지’라 할 수 없고, 식량생산이나 다른 유용한 용도의 작물로 구성된 ‘열대림’이라 본 것이다(ibid.: 51).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두천과 소광의 산림에서 화전은 대규모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500평에서 3,000평에 이르기까지 산지의 지리적 조건과 화전 농가의 노동력 여하에 따라 다양한 면적에서 행해졌다. 골짜기 주위 음

지 중 평평하고 경사도가 낮은, 토질이 좋은 땅이면 응당 화전지가 만들어졌다. 적당한 후보지를 선정한 뒤에는 경작 예정지 안 참나무와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의 잡목과 풀을 모두 베어낸다. 기존 식물 군집을 새로운 ‘작물’로 대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하나의 ‘숲’을 만드는 데에는 나름의 용이함이 있었다. 주민들의 잦은 벌목과 산불로 수령이 낮은 나무가 많아, 화전지를 만들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광과 두천을 잇는 샛골, 외텃골, 찬물내기 골짜기에는 대규모 ‘산전’과 작은 논이 가득 들어찼다.

화전지를 선정하는 일은 자연을 향한 산촌민의 감각적 경험 및 생태적 지식을 요구했다.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을 때 ‘적절한’ 토질과 식생 및 경사도, 물가와와의 거리 등이 주요 선정 조건이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땅을 찾기 위해서는 숲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였고, 이는 전수되는 지식이 아닌 개개인이 산을 경험함으로써 체득하는 감각이 있어야 가능했다.

화전민은 소나무가 우점(優占)한 침엽수 지대는 피하는 편이었다. 날카로운 소나무 잎은 거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다. 무엇보다 소나무는 높고 가파른 능선에 많이 자라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화전지를 만드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 잡목 지대를 선호했던 또 다른 이유는 활엽수의 낙엽이 질 좋은 거름 역할을 하고, 어린 나무가 많아 손톱<sup>3)</sup>으로 베기도 수월하다는 데 있다. 다만 소광리는 누에를 많이 쳤기 때문에, 산뽕나무가 우거진 곳에서는 누에의 먹이가 되는 뽕잎을 따기 위해 화전을 피하는 경향도 있었다.

자리 선정 뒤에는 나무를 베어 바닥에 깔아 놓은 뒤 말려둔다. 나무가 다 마른 뒤 불태우기에 돌입하는데, 불이 잘 번지지 않는 여름철에 주로 벌채를 하고 불을 찌른다. 이 과정에서 불이 화전예정지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기술과 주의력이 요구된다.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무기염류 대부분은 불에 탄 뒤 남겨진 잿더미에서 공급된다. 초목에 비축된 영양소는 벌목과 불태우기를 통해 특정한 식물복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기어츠 2012[1963]: 48). 따라서 완전한 연소는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불은 주로 오후에 붙인다. 낙엽을 경작지 경계 아래로 끌어 놓은 뒤, 불의 형세가 커지지 않도록 위에서 아래를 향하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불을 지르면 된다. 이 작업

3) 목재 · 금속 · 석재(石材) · 플라스틱 등을 절단하기 위한 공구

은 가족과 함께 하거나 이웃과 품앗이 형식으로 공동으로 이뤄진다. 짧게는 두 시간, 길게는 반나절이 지나면 숲은 재로 덮인 평평한 토지를 드러낸다.

본격적인 경작은 타오르는 불이 자연히 꺼질 때까지 기다린 뒤 시작된다. 응달이 들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의 풀을 베어 이랑에 놓고 풀거름으로도 썼다. 풀거름은 화전지 외 일반 농경지에서도 흔히 쓰였기에 일 년에 세 번은 풀을 베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비료 자체가 마을에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거름과 풀거름은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했고, 그 결과 오히려 평지의 경작지보다 화전지에서 난 작물의 품질이 더 좋았다고 평가한다. 화전을 경험한 주민은 1-2년 이내의 화전지는 수확량은 일반 평지보다 적더라도 맛이나 품질은 더 나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처럼 화전지 선정부터 경작에 이르는 전 과정은 해당 산지의 생태적 조건에 의지해 이뤄졌다. 두천과 소광의 산촌민은 화전 외에도 채집과 벌목, 양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을 전유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화전 농경은 인간이 산림 생태계 ‘내부’에서 기존 자연 환경과 가장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교환하는 활동이었다. 산에서 자생하는 나물이나 열매가 아닌 ‘작물’이 자라기 좋은 곳을 발견한 뒤에는, 이를 ‘농경지’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 시작된다.

‘작물’은 새로운 숲을 만든 인간이 얻는 전리품일 것이다. 작물이 상품이 되어 단일 경작이 보편화된 오늘과 달리, 자급자족에 급급했던 당시 이 지역 화전민은 화전지에서 다종작(多種作)으로 주곡과 부식을 얻었다. 사람들은 조, 콩, 팥, 메밀, 감자 등을 절기에 따라 파종했다. 윌크(Wilk 1997)는 노동집약적 다종작 체계가 토지가 협소하고 화전지를 만드는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Wilk 1997: 114-115). ‘시장’의 존재 또한 경작지 활용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윌크가 현지조사를 진행했던 남아메리카 과테말라의 케크치족(Kekchi) 화전민은 자급자족 외에도 현금작물 용도로 옥수수를 단일 경작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옥수수를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된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두천과 소광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1960년대까지 큰 시장이 열리는 울진읍과 마을을 잇는 도로가 없었다. 이동 수단도 마땅치 않아 시장에 도착하는 데만 하루가 걸렸다. 긴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 무거운

곡물을 팔만큼 생산량이 충분한 것도 아니었다. 두천과 소광을 잇는 십이령 길을 넘어 봉화로 가는 보부상, 선질꾼도 굳이 두 마을에서 대량의 곡식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평야지대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했기 때문에 두 산골마을은 상품의 주요 구입처라기보다, 쉬어가는 길목 마을로 기능했다. 이는 고지대 산간이라는 마을의 지리적 환경이 작부체계(作付體系)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쳐, 두천과 소광 지역 화전지의 작물은 상품 경제에 편입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름철 새로 만들어진 화전지에 가장 먼저 파종하는 작물은 서숙(조)이다. 본격적인 일 년 농경은 이듬해 2월부터 시작해, 감자를 가장 먼저 심은 뒤 봄철 콩, 팥, 수수 등을 심는다. 소광과 두천에서 화전을 한 주민은 대부분 서숙을 갈았고, 이는 쌀이 귀했던 당시의 주곡이었다. 통일벼가 완전한 주곡의 지위를 점하기 전까지, 논보다 밭이 많았던 두 지역에서 조는 필수 곡물이었다. 콩은 감자를 심은 고랑 사이에 심고, 가을엔 밀이나 보리도 간다. 불감자와 불배추의 접두사 ‘불’은 화전지에 심어진 감자와 배추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었다. 특히 불배추는 화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로, 언제든 심을 수 있다고 한다. 메밀과 팥을 가는 도중 나무가 완전히 타지 않은 곳을 다시 불태운 뒤 지력이 좋아진 땅에 배추씨를 뿌리면 된다.

삼과 아편은 화전지에서 더욱 잘 자라는 품종이었고, 곡물과 달리 상품 작물의 성격도 지녔다. 의식주를 모두 자급자족해야 했던 상황에서, 사 입는 옷은 엄두도 못 냈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삼을 재배했다.

#### 〈사례2-1: 산에서 하는 삼베〉

삼베를 산에서 많이 했지. 구릉진 데. 벌레 안 먹고. 이런 못에 하면 벌레 파먹어서 벗기면 푹푹 떨어지고 베가 곱지 않은데 산에 하는 건 베가 고와. 집에서 만들어도 안 떨어지기 때문에. 산(山)에 건 얹으면서 고와. 공기가 좋아 그런지 벌레가 안 붙어. 일반 땅에서 계속 하면 충(蟲)이 많이 생겨. (나우식<sup>4)</sup>, 소광1리)

일반 경작지에서 삼을 재배할 경우 벌레가 파먹는 경우가 많은데, 산에서

4) 면담자의 성명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재배한 삼은 벌레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퇴비가 많고 습기가 있는 토지에서 생산이 잘 되기 때문에, 갓 만든 화전지는 최적의 삼베 경작지였다. 고온의 수증기로 삼을 찌내는 삼굿과 껌질 벗기기, 삼 삼기<sup>5)</sup>와 길쌈이라는 일련의 과정 끝에 만들어지는 삼베는 지난한 노동 과정과 노동력을 요구하는 상품이었다. 남자들이 삼 심기와 삼기 등을 주로 담당하면 그 뒤 여자들이 길쌈을 하여 완제품을 만들었다. 일반 작물들을 시장에 팔러 가는 경우는 드물었으나<sup>6)</sup> 삼베는 마을 여자들이 직접 나서서 팔았다. 수의와 적삼을 만들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높아 시장에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삼은 대마라고도 불리는데, 줄기에 마약 성분이 있어 기호식품으로 찾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 아편도 이곳 산지에서 공공연하게 재배되었다. 그러나 일제시대부터 아편 재배 및 제조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법제화 되었고, 단속 대상에 속했다. 해방 후에도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아편 생산 및 유통 현황이 드러나면서 지속적으로 아편 재배를 통제하고 중독자를 검거했다(조석연 2012: 310-319). 실제로 두천리와 소광리에서도 이른바 ‘아편쟁이’들이 산에서 아편을 몰래 재배해 밀매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영창에 가곤 했다.

사람들은 화전 행위를 대하는 행정의 태도에 대해, ‘법이 물러서’ 단속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아편 재배와 관련된 행위는 강한 처벌 대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경찰은 산에 들어가 ‘마약 사범’을 잡아냈다.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기른 주민도 이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지했기에 깊은 숲을 재배지로 택했다. 산에 자라는 작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국가의 선택적 용인과 처벌이 따른 셈이었다. 이는 1950-60년대 두천과 소광 사람들의 삶을 산림 생태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며 지리적 조건에 적응(adaption)한 결과로 단순화할 수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산에서의 화전 행위 일반이 명시적으로는 불법이었으나 아편 재배 및 유통, 소지는 적발 즉시 처벌되고, 그 밖의 일반 작물은 적발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작물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불법’에 대한 인식에도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똑같

---

5) 삼을 가늘게 꼬인 상태를 실이라 하고, 실과 실을 잇는 과정이 삼 삼기이다.

6) 마을 여자들은 주로 제사용 식재료 구입을 위해 시장에 나갈 때, 남은 콩과 팥을 조금씩 팔았다고 한다.

은 범법 행위를 하면서도 아편 재배는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인식한 반면, 그 외의 화전 농경은 빈곤을 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생계 활동이므로 오히려 법 바깥에서 구성되는 가능 행위의 영역에 둔 것이다.

## ② 자연, 화전민, 문화

‘화전’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처음 1년 동안의 땅은 ‘부덕(火德)<sup>7)</sup>, 2년 후부터는 화전(火田)이라고 하며 부락 부근의 숙전(熟田)화한 땅은 ‘산전(山田)’이라 칭한다.<sup>8)</sup> 그러나 두천과 소광 주민은 불을 질렀던 땅을 부덕이나 화전이라 칭하지 않고 경작 시기에 관계없이 ‘산전’이라 칭했다. 해마다 농사 짓는 밭을 의미하는 산전을 단기간 경작하는 화전과 동의어로 사용한 점이 특징적이다. 오랜 시간 대대로 사용된 숙전은 산전이 아닌 ‘밭’이라 칭하며 본인 소유의 개간지인 ‘밭’과 본인 소유가 아닌 화전지인 ‘산전’으로 농지를 구분했다.

그러나 경작자의 화전지 소유 여부와 거주지, 화전지가 위치한 산지의 위치 등에 따라서도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조동규(1966)는 화전 경작자의 유형을 화전(火田)과 숙전(熟田)<sup>9)</sup>을 겸하는 겸화전농가(정착농), 화전만을 경작하는 순화전농가(정착농), 경작 기간 중 일시적으로 화전소재지에 기거하다가 지력이 소모되면 휴한(休閑)하고 다른 지역을 전전하는 표농(漂農)인 순화전농가로 분류했다(조동규 1966: 63).

두천과 소광에서도 소유 토지의 면적이 적거나 추가 노동을 할 여력이 될 경우 화전과 숙전을 겸해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평지가 아닌 골짜기에 집을 짓더라도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산지 내 농토와 인접한 지점에 터전을 마련했으며, 자신의 농토(숙전)와 화전지를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

7) 부덕의 ‘부’는 ‘불’에서 비롯한 단어이므로 한자어는 불 화(火)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8)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240&cid=40942&categoryId=31872>

9) 해마다 곡식과 채소를 경작하는 땅



농토와 화전지의 구분은 해당 토지의 역사성과도 관련된다. 각 가구가 소유한 농토는 때때로 주인은 바뀌었을지언정 수세대 동안 농지로 쓰인 오래된 땅이지만, 불을 질러 만드는 화전지는 2-3년이 지나면 지력이 다하므로 경작자는 현 화전지를 버리고 새 땅을 찾아 나섰다. 산지에 있는 밭 역시 원래 화전지였던 곳을 개간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농지가 된 것이지만, 화전과 농사를 병행하는 겸작화전민에게 화전의 장소는 산, 농경의 장소는 밭으로 인식되었다(장예지 2017: 270).

위의 분류는 또한 순화전농가를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정착농과 화전지를 찾아 자주 이동하는 표농으로 다시 나누었는데, 두천과 소광 주민은 화전지를 바꿀 때마다 이사를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정주하면서 화전지를 옮기는 거주 형태를 더욱 선호했다. 국유림에 화전지를 일구는 대다수 화전민은 지력이 다한 땅은 빨리 버리고 새로운 토지를 찾는 전략을 취했으나, 매년 사는 집까지 새로 짓는 것은 아니었다.

#### 〈사례2-2: 정주형 화전민〉

우리 할배가 저 대왕소나무 밑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어서 6남매가 저 나무 아래서 컸어. 저기서 시집, 장가가고 다 했어. 가족이 10명이 넘었지. 방 세 칸 집에서. (김순자, 소광1리)

현재 소광1리에 거주하는 김순자씨는 높은 산골짜기에 거주하며 화전을 했음에도 시집을 가기 전까지 본인의 조부가 지은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소광2리의 널밭골, 큰빛내, 작은빛내, 너삼밭 등의 자연부락은 모두 오래된 화전민촌(村)으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경제활동을 하며 소규모 공동체를 이뤘음을 알 수 있다.

정연학(2005: 5)은 생활수준과 경영형태, 경작지 소유여부, 이동여부, 산의 경사도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화전민을 보다 세밀하게 유형화했다.

분류기준	분류
생활수준	지주화전민/자급화전민/소작화전민
경영	순화전민/겸작화전민
경작지 소유	국유림거주화전민/민유림거주화전민
이동여부	이동화전민/정주화전민
산의 경사도	급경사화전민/완경사화전민

〈표 2〉 화전민의 유형

인용처: 정연학(2005) “화전민의 농경문화”,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위 기준에 따르면, 두천과 소광에서 지주화전민과 소작화전민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두 지역의 화전은 대부분 국유림에서 행해졌고, 식량을 마련해 자급자족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므로 자급화전민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산을 소유한 주민이 대가를 받고 화전을 허용한 경우도 찾을 수 없었다. 화전지를 찾는 사람들은 산주가 명확한 사유림에서의 경작을 꺼렸고, 감시가 거의 없는 국유림을 주로 활용했다. 또한 전체 산림 중 국유림 비율이 80% 이상인 지역 특성상 민유림 거주민보다 국유림 거주민이 더욱 많았다.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물가 근처의 평평한 땅을 찾아 나무와 흙으로 집을 지어 독가촌(獨家村)을 이뤘다. 대가족 형태의 독가촌은 가족 재생산은 물론 화전과 벌목, 임산물 채취 등의 노동과 제사 및 산신제 등을 분담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도 했다.

화전민은 금강소나무 군락지에서 가장 오래된 금강송으로 손꼽히는 수령 600년 대왕소나무가 있는 해발고도 650m 인근까지 터를 잡았다.



〈그림 1〉 대왕송 아래에서 본 산지 © 장예지

그럼에도 이곳에서 화전의 주요 노동 단위는 ‘가구(household)’였다. 대다수 화전지가 국지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자신의 노동력만 있으면 능력껏 화전할만한 땅을 물색해 농토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므로 깊은 숲에 사는 독가촌 주민은 멀리 떨어진 이웃과 공동 노동을 하는 것보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일을 도맡는 편이 더욱 효율적이었다.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들은 7-8세만 되면 농사일을 돕거나 소에게 풀을 먹이는 일을 담당했다.

이곳에서 화전농경은 보통 가족 단위로 행해진다. 때문에 경작지를 만들고 파종하는 기술 등은 대부분 가족 중 어른들로부터 전수 받게 된다. 행여 친구들끼리 화전을 하게 되면 당해 생산된 수확량을 동일한 비율로 분배했다. 대가족제가 자연스러운 마을에서 10~15명이 기본 가족 구성원 수였고, 7-8세 아동도 일꾼 노릇을 했다. 화전지를 만드는 것은 주로 남성의 노동이 투입되었으나 지심 뽑기, 파종, 수확 등은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했다. 물론 이웃 간에는 한 가구씩 돌아가며 불을 지르는 일을 돕고, 농번기 품앗이와 울력<sup>10)</sup>도 행해졌다.

따라서 자녀의 결혼은 노동력을 얻거나 잃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특히

---

10) 일손이 모자라는 집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급한 농사일이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보수나 노동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도와주는 봉사적 노동협동 방식 (출처: 두산백과)

아들이 결혼을 할 경우, 장남은 자신의 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장남과 결혼한 여성은 시가로 들어가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의 형제, 자매의 결혼까지 지원했다. 차남 이하는 부모가 땅을 얻어주고 집을 지어주어야 했다. 그러나 극도로 가난한 가정은 살던 집과 가까운 곳에 오두막을 지어주고 원래 소유하던 농토와 화전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다.

#### 〈사례2-3: 독가촌의 분가〉

한 집에 그냥 살아야지. 방이 두 칸이어도 열셋, 열넷 다 살았어. 삼촌들이 결혼했어도 이사 갈 생각 안하고 결혼해서 살아. 나가 살 데가 없으니까. 요만한 땅 옆에 집 하나 지어서. 농사 같이 지어서 나눠먹기도 해. (김동수, 소광2리)

결혼 후 식구 수는 늘었으나 분배해야 하는 수확량은 한정되었으므로 가구의 부담 자체는 증가한 셈이었다. 딸은 결혼 후 시가로 들어갔지만 아들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분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땅을 사서 분가를 할 만한 경제적 여력을 얻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빈번했다. 상황의 역전은 1970년대의 산업화와 함께 일어났다. 점차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서는 일이 많아지면서 객지에 터를 잡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대다수 화전지는 국유림에 위치했고, 2-3년 경작 후에는 지력이 다한 땅을 버리고 새 땅을 찾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본래 산지에 위치한 사유 경지는 화전지를 꾸준히 개간해 일군 땅이지만, 국유림 내 화전지 경작자는 해당 농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오랜 시간 들여 화전지를 개간하는 것보다 새로운 땅에 불을 놓는 편이 보다 효율적이었다.

화전지를 옮긴다고 하여 터 잡은 집까지 이사를 가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화전을 생업으로 하는 순수화전민은 경지 근처에 나무로 쌓아 올린 토방집을 짓고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정주성이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광과 두천의 화전민은 대부분 골짜기에 독가촌을 짓고 살더라도 농지를 구입해 평지 마을로 나가지 않는 이상 정착하는 것을 선호했고,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마을과 화전지, 본인 소유의 농지, 거주지를 오가는

생활을 유지하고자 했다.

## 2) 화전지에 대한 소유관념

### ① 화전지 소유의 의미

화전민은 과거에도 이땅을 개척한 주인공이였는 동시에 미래에도 그러하여야 할 것이다. …… 재벌에게 주거나 국민에게 개방하거나 결국 화전, 국민 노동자의 혈과 한으로 개간될것이니 - 일이인(一二人)의 재투(財鬪)에게 중간이익을 거취당하고 농노로 사역(使役)되느니보담 차라리 국민본위로 개방하되 … 그들에게 저 자용통을 시켜 개간사업에 착수하라.

…

당국자는 숙려하라! 국림(國林)은 화전민본위로 개방하라고 오인(吾人)은 만흔 기대를 가지는 자다.

〈國有林을 火田民에게 開放하라 (下(하)) 1935.11.15. 동아일보〉

1935년 11월 15일 게재된 위 논평은 일제 강점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산림소유권의 근대적 분화 및 당시 화전민의 불안정한(*precarious*) 경제적 지위를 보여준다. 글의 요지는 국유림 일부를 화전민이 개간하도록 허용하고, 개간조합에서 돈을 융통해 지대를 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소유한 자원(국유림)을 빈민 구제책으로 활용하되, 그 대상인 화전민은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제적 자립을 일궈야 한다는 구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복지의 근대적 문법을 따른다. 국유림과 사유림의 구분이 법적 토대를 근거로 확정되고, 개인이 산림을 점할 권리는 화폐 경제의 원리 내에서 획득 또는 상실되는 것이다.

일제가 새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이전, 조선을 관통하는 산림정책은 ‘여민공리(與民公利)’의 원칙하에 전개되었다. 산림을 개인이 사사로이 점유 또는 소유하는 것을 불허하고, 누구나 왕실의 허가 하에 산림 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사실 조선 후기에 이룰수록 양반가의 산림

사점화가 심해졌으나, 국가는 좀처럼 사점지를 사적 소유지로 인정하지 않았다(최병택 2009: 12-14). 때문에 사점지의 확산과 임야산물의 독점적 이용을 규제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했다(ibid.: 16). 왕토사상에 입각한 조선의 산림 소유권 개념에서 왕은 산림의 선형적 소유권자였던 셈이다.

반면 근대의 소유권 제도는 소유 주체를 명확히 나누고, 소유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다. 1908년 일제가 제정한 삼림법의 핵심도 산림의 소유권자를 분명히 가려내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능선으로 이어지는 산림에 경계를 부여하고, 이것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전유 활동에 사법적 제한 또는 자유가 주어지는 기준점이 되었다. 임야 소유자가 소유 사실을 ‘신고’토록 하여, 조선조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사점지가 ‘사유지’로 규정되고, 왕이 아닌 국가의 ‘국유림’이 창출되기에 이르렀다(ibid.: 48-49). 이처럼 국가와 개인들의 산에 각인되는 명료한 구분은 ‘소유’의 개념이 식민지 조선에서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의미를 함의한다.

해방 이후에도 일본인이 소유한 산림을 국유화하는 한편 일제하 산림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배재수 외 2001: 183) ‘근대적 소유’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법의 언어가 말하는 세계의 상(象)과 현실 세계가 언제나 일치하진 않았다. 근대적 소유 관념에 따르면, 국유림의 절대적, 배타적 권한을 갖는 주체는 오로지 국가뿐이다. 위에서 인용한 논평에서도 화전민의 국림 개간을 허용하되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함을 역설한 정황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 두천리와 소광리 국유림에 산재했던 화전지의 존재는 ‘삼림법’이 명시하는 소유권의 작동과는 상이한 소유 의식을 보여준다. 법의 대상이자 주체 중 하나인 화전민은 그것을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때로는 교묘히 빠져나가 법과 경합하며 화전지를 일군 사람들 내부에서 그들만의 소유 의식을 형성했다. 이렇게 전유한 자연은 마을 내 독특한 사회적 특질을 구현시키는 것이다.

마을 주민 사이에는 국유림 내일 지라도 다른 사람이 경작 중인 밭은 건들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화전경작자 상호간에는 화전지의 경계에 대한 관행적 규범이 존재해”(산림청 1980: 40), 그들의 관계망 내에서 화전지에 대한 모종의 점유권이 인정되고 있던 것이다. 단기간 경작 후, 주인이

떠나가고 남겨진 화전지는 인간의 손이 타지 않는 산나물과 잡풀들이 다시 메웠다. 묵힌 밭에서 나는 더덕, 고사리, 곰치 등의 다양한 산나물은 질이 좋아 마을 사람들은 봄이면 이 곳에서 자유롭게 나물을 채취했다. 화전지의 옛 주인은 묵은 밭의 나물을 배타적으로 취할 권리가 없었고, 이 땅은 정해진 주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다.

휴경한 지 5-10년 정도가 지나면 땅은 다시 지력을 회복해, 화전지를 찾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순간 그 묵밭은 새 주인을 맞이한다. 물론 예전에 이 곳에서 농사를 지은 화전민이 또 다시 경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우선적으로 해당 후보지를 선점할 권리는 없다. 누가 조건 좋은 땅을 발견해 불을 내느냐에 따라 국유림 내 화전지의 간접적 소유권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평평한 지대에 풀과 마른 나무를 깔아 놓았다면, 이는 곧 불을 놓아 화전지를 만들 예정이라는 표시를 의미했다. 서로 간의 암묵적 규칙은 국유림 내 화전지 분포의 질서를 마련했다.

사유림 내부의 화전 원칙은 더욱 엄격했다. 산주를 제외한 주민은 두 마을 권역 내 사유림에서 화전을 할 수 없었다. 산주가 지대를 받고 산지 일부를 내어 주는 소작화전농 사례는 두천과 소광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유림이 그야말로 ‘주인’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 함부로 불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같은 논리라면 국유림 역시 엄연히 국가가 주인으로 존재하는 산림이지만, 이 곳에서의 화전은 매우 자유롭게 이뤄졌다. 이는 곧 화전민과 산림 소유자의 관계성을 반영한다. 대다수 주민은 산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때문에 경작 가능한 국유림을 두고 굳이 ‘아는 사람’ 땅에서 몰래 경작 행위를 하여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 이유는 없었다.

반면 주민의 시각에서 무형의 주체인 ‘국가’는 화전 금지를 법의 언어로만 말했을 뿐, 행위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법의 존재가 곧 그 실효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엄연히 국유림 내 농경이 금지된 행위임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실천으로까지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것보다 마을의 불문율을 따르는 편이 농지를 획득할 가능성을 높였고, 이웃과의 관계도 해치지 않았다. 국가의 법은 아직 사람들의 삶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유림과 사유림이라는 구분은 국가에 의해 구성된 근대적 개념이지

만, 정착 사유림에서 근대적 소유 관계가 더욱 공고히 작동하고 있는 셈이기도 했다. 즉 어떤 대상을 취할 모든 권리는 소유권자가 갖는다는 근대적 소유 관계가 사유림에서 확립된 것이다.

결국 화전지에 대한 소유의식은 농토를 찾는 다른 화전민과의 관계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유림을 일종의 ‘무주공산’으로 보고, 점유 지대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 간에 지켜지는 규범은 법과 구분되는 집합 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린하우스(Greenhouse 2012)는 뒤르켐과 말리노프스키의 법 개념을 비교하는데, 이들에게 법은 사회적 관계의 결속력을 가시화하는 기제이다. 다만 말리노프스키는 법 역시 다른 규칙과 규범, 명령들과 더불어 이러한 응집력을 보여주는 해석적 분류(interpretive category)의 하나로 본다(Greenhouse 2012: 433-434). 이에 따르면, 국가의 존재가 투영되지 않은 국유림 화전지의 소유 의식은 마을 내부 구성원들의 사회적 규범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집합 의식일 것이다. 화전민 개개인이 산림생태계라는 ‘자연 환경’에 자신의 농지를 마련할 때, 사회적으로 형성된 소유 관계는 개인의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바, 농지는 생태적·사회적 특질의 혼합체라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공동체적 질서만 따른다면 개인은 자신의 노동 능력에 따라 최대한 많은 화전지를 만들 수 있었다. 가구(household) 중심으로 이뤄진 화전농경의 규모는 곧 각 가구의 노동력을 나타낼 만큼, 고된 농사일을 견딜 능력만 있다면 최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셈이었다. 이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한 농경지 면적으로 노동력 행사 범위가 한정되는, 소유권 행사에 따른 농업노동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국유림은 국가가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한 농사지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유할 공공재(common)적 성격을 내포했던 것이다. 때문에 내부적 규범아래에서 타인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을 양껏 발휘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는 자본주의가 서로 파문혀 있는(embedded) 사회적 형태를 파괴한다고 보았다(Hann 1998: 33). 화폐가 매개하는 자본주의 거래는 경제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야기한다. 반면 두천과 소광의 국유림 내 화전농경은 경제 원리가 우위에 있다기보다 그 자체가 사회에 투입해 개인과 가구, 공동체의 노동과 토



지 점유의 질서 아래 작동한다. 소유물에 대한 관계는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해, 통합된 집합성(collectivity)을 암시한다는 한(Hann)의 설명이 이에 적용될 수 있다(Hann 1998: 6). 즉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국가 간 경제적 거래 관계를 넘어, 1960년대 두 산촌의 화전은 화전지가 필요한 사람들 간의 산림에 대한 공유 의식이 투영된 행위였다. 이러한 공유 의식은 고립된 산간지역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하지만 타지인이나 새롭게 정착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즉 면(面)이나 산림청에서 군유림 및 국유림 소유권을 주장하고 농경 행위를 금지하면 농지를 일군 개인은 행정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마을 내부의 사회적 원리가 국가의 법 원리와 충돌하면서, 화전은 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어가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원리의 충돌이 대결하면서, 그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표출된 사례도 있었다.

1970년대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조림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의 화전지는 조림 대상 산지에 포함됐다. 조림예정지로 공지가 나면 화전지 주인은 수확물을 얻지 못하고 조림지로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두천2리에 거주하는 전용수씨에 따르면 자신의 화전지가 조림지가 된 것에 분노한 누군가가 남몰래 불을 지르는 바람에 주민 전체가 새벽 내내 진화에 나섰다. 그는 법적 소유권자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이 노력해 얻을 수 있던 작물 수확에 실패한 데 대한 복수로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 〈사례2-4: 조림지에 지른 불〉

화전 부친 주인이 감자, 옥수수 작물을 심었는데...나도 조림해서 불만 많았어. (누가) 횡검에 불 지르기도 했어. 이걸 안 잡히지. 새벽 2시에 불이 나서 온 주민이 나서서 끈 적도 있어. (전용수, 두천2리)

하지만 국가의 근대적 소유 관념이 강한 행정력 동원으로 실체화되면서 마을 내에서 통용되는 화전지 소유 규칙은 근대적 법 규범에 포섭될 수밖에 없었다. 방화범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몰래 불을 내

는 개인적 복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산림 당국의 정당(legitimate) 강제적 명령은 상황을 전복시켰다. 방화범의 정체를 산림 당국이 밝혀냈다면 그는 사법적 제재를 받았을 터이다. 뒤르켐은 형사 제재가 집합 의식을 가시화할 것이라 보았다(Greenhouse 2012; 435). 그러나 산림청이 방화범을 적발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사실 마을 내 집합의식과는 상충한다. 오히려 이때의 범은 마을 내 사회적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안하는 수단이다.

## ② ‘화전지’와 ‘경작지’, 그 이중의 틈

외부인이 우거진 산 중턱에 펼쳐진 옛 농경지의 흔적을 보면, 이곳에서 화전이 성행했으리라 짐작하기 쉽다. ‘임야를 불태우고 곡식을 재배하는 농경법’<sup>11)</sup>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자면 이러한 추측은 합리적이다. 오늘날 숲에 새로이 만들어진 울진금강소나무숲길에 오르는 탐방객은 일반 평지가 아닌 산중에 만들어진 농토와 집터를 화전지와 화전민촌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 ‘화전지의 주인’인 마을 주민은 탐방객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소광2리 자연부락에서 나고 자란 박영호씨는 현재 숲해설사로 일하며 탐방객과 타 지역 출신 숲해설사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을 비판했다.

### 〈사례2-5: ‘화전’과 ‘경작지’〉

화전민이란 것은 내 땅이 없는 사람이 국유지 땅을 개간해서 논밭을 만든 걸 화전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금강소나무)숲길에서 보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지어먹던 땅, 집터가 있으면 ‘화전민이 살았지 않나?’ 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도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땅에는 버젓이 소유자가 있다고 합니다. 화전민이란 건 ‘생존’을 위해 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남의 땅을 화전이라 해서 되나. 화전민 소릴 하면 안 됩니다. (박영호 소광2리)

소광리에서 ‘산에 불을 내고 농토를 만드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으로 인

11) 출처: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240&cid=40942&>

식되지 않았다. 만약 산주가 본인의 산에 불을 지르고 화전지를 만들었다면, 이는 ‘불법적 화전’이 아닌 ‘합법적 경작’이다. 국유림 내에 농지를 조성해도 토지세를 물어가며 농사를 지은 화전지 역시 합법적인 경작지이다. 즉 똑같이 산에 있는 농토일 지라도 그 산이 누구의 산인지, 또는 세금을 납부했는가에 따라 해당 농토의 화전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다. 때문에 젖은터재와 샛재에 포진한 화전터는 모두 ‘사유지’로서, 합법적인 법망 내부에 속한 땅이므로 그 일대를 ‘화전민촌’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된다.

쯩(Tsing 2005)은 인도네시아 메라투스(Meratus) 산림이 인간(human)과 비인간(nonhuman)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사회-자연적 경관(social-natural landscape)을 지닌다고 보았다. 때문에 틈(Gap)은 경관을 인간의 생활공간과 자연 보호 구역, 또는 문화와 야생 등의 장소로 구분할 때 발생한다(Tsing 2005: 175). 소광리에서 탐방객과 주민 간에 나타나는 화전지에 대한 상이한 정의는 인식론적 틈을 드러낸다. 즉 마을 밖 외부인이 생각하는 화전지는 ‘자연’의 공간에 사람이 만든 농토일 뿐이다. 그러나 화전 경험이 있는 주민에게 화전지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땅에 농토를 만든 불법적 행위의 결과물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화전이 성행하던 당시 마을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화전지 소유의 원칙이 있었다. 이는 국유림 내 농경에 국한되는 사회적 규범으로, 국유림을 사유지처럼 활용해 국유림-사유림의 이분법적 구분에 균열을 일으킨다. 그러나 법에 의해 경제적 거래관계로 규정되는 국유지와 사유지의 구분 역시 마을에서 유효했다. 때문에 경작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면 사적 소유를 인정받아야 하기에 ‘진정한 내 땅’에서 행한 모든 농경 행위는 합법적인 ‘경작지’가 되는 것이다.



〈그림 2〉 국유림과 사유림을 분기하는 경계석  
© 장예지

실제로 소광리에서 오랫동안 화전을 했던 강석중씨는 ‘경작’과 ‘화전’을 병행했을지라도 본인의 농경 활동 일반을 ‘화전’이라 칭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화전민과 자신을 구분했다. 초근목피에 의존하는 가난한 사람, 짐승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사람 등 매우 빈곤한 존재로 표상되는 화전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장예지 2017: 268-269).

#### 〈사례2-6: ‘화전’과 ‘경작지’〉

자기 땅 농사지었다가 (68무장공비침투사건 때) 간첩 나와서 나간 건데, 이러니 화전민촌이 아니에요. 국유림에 불 놓은 것이 화전이지. 젖은터는 경작지예요. 세금 냈는데, 왜 화전민촌이라는 겁니까. (강석중, 소광2리)

따라서 본인의 농토와 화전지를 경작한 겸작화전민과 자기 소유의 산지를 가진 민유림거주화전민은 자신을 ‘화전민’이 아닌 ‘농민’으로 자각했다. 본인의 경작지가 있는 이상 생활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행한 화전은 ‘부차적

인' 농업 활동이므로 화전 행위 여부가 곧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던 것이다(ibid.: 269). 결국 탐방객의 시선이 '자연의 화전지'에 머물렀다면, 주민은 이를 '사회의 경작지'라 말하며 자신을 불안정한 지위의 화전민이 아닌 농민으로 위치 지켰다.

틈은 국가의 화전정리법령이 정하는 화전의 정의와 주민이 내리는 정의 사이에서 또 한 번 발생한다. 1966년 제정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1조에 따르면 화전의 정의는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 방법으로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하였던 토지”가 된다. 1965년부터 197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화전정리사업은 국유림과 군유림 뿐 아니라 사유림에도 적용됐다. 사업은 강원도를 시작으로 적절한 신고 조치를 밟아 해당 토지의 경사도에 따라 산림으로 복구하거나 경작지로 개간하고, 화전민을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74년 2기 화전정리사업 시에는 사업 영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신민정 2011: 69).

이처럼 국가는 숲에 산재한 화전지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이곳을 '산지' 또는 '경작지'로 변모시키고자 했다. 또한 그 대상은 산림 소유권자가 누구지와 관계없이, 화전지가 분포한 모든 산림이 해당됐다. 때문에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사유림 내에서도 '불법' 화전지가 존재하면 산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해야 했다. 국가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산림 소유권자의 행위를 관장할 절대적 권한을 가진 셈이었다.

그러나 소광리 주민 편에서 국가의 사업 의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법의 언어에서는 사유지가 화전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도, 세금까지 내고 대가를 치른 '밭'은 주인의 입장에서 화전지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화전지는 사유지와 대비되는 차원에서 국가의 승인을 얻지 못한 불법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화전에 대한 법의 언어가 마을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채, 마을 구성원의 해석에 따라 변용되었음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변용은 결국 일제강점기부터 국가가 추동한 소유권 관념을 사람들이 체현한 결과이기도 했다.

## 2. 벌목과 도벌

### 1) 나무를 베는 산판꾼

혈벗은 산의 외형에 일조한 것은 화전과 더불어 이뤄진 일상적인 남벌이었다. 겨울철 땔감은 물론 가구와 농기구 제작, 집짓기를 위해 마을 남자들은 틈나는 대로 나무를 베어갔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는 나무를 팔기 위해 꼬박 하루를 걸어 울진장에 나갔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데 하루가 걸려 시장에 가는 데만 3일을 써야 했다. 목재를 가공해 판으로 쓰이는 널이나 문짝을 만들어 두면 울진과 죽변의 목상(木商)들이 이를 알고 마을로 찾아와 구매하는 일도 많았다. 지역민에게 나무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생활 자원이었다.

소광과 두천 사람들이 가계의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도벌한 나무의 양은 대규모 벌목으로 나무를 실어간 목상 주도의 산판에 비하면 현저히 적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러 마을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1954년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군용차로 쓰였던 GMC 트럭이 마을 개울과 산비탈을 가로지르며 내달렸다. 산등성이 곳곳에서 대량으로 벌목한 나무를 싣고 가는 차량이었다. 영어가 익숙지 않은 지방민들은 일본식으로 발음해 ‘제무씨’, ‘제무씨끼’ 등으로 GMC 차량을 불렀다.

큰 길 하나 없는 오지 마을 산림을 오르내리기 위해 ‘제무씨’ 차량은 하천과 개울을 따라 마을에 진입했으며, 본격적으로 산에 오를 때에는 직접 산길을 내면서 벌목 지점에 다다랐다.



〈그림 3〉 GMC차량 진입을 위해 길을 낸 모습  
© 장예지

이 길은 엄연히 차량의 이동을 우선하므로 같은 산림에 났던 보부상길과는 성격이 달랐다.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했던 보부상들은 고도가 높아 오르기엔 힘이 들더라도 울진장과 춘양장을 신속히 오갈 수 있는 길을 선호했다. 때문에 좁고 험한 보부상길은 거대한 GMC 차량이 다니기엔 부적합했기에 별목 허가권을 산 목상은 산판 노동자를 동원해 새로이 길을 낼 수밖에 없었다. 산판꾼은 나무를 베기 전 길 닦는 일부터 맡아 이에 대한 노임을 따로 받았다. 하천 따라 높은 고도까지 길을 내는 것 역시 막대한 노동력을 요했고, 비가 와서 길이 유실되면 보수 노동을 반복해야 했다.

#### 〈사례2-7: 산판길 닦기〉

옛날엔 산판길이라 했지. 산판길을 사람 써서 닦았어. 이 길이 보부상길은 아냐. 보부상길은 차가 못 가잖아. 악산(惡山)이 많으니까 도로를 내기 힘들지. 길을 닦을 수 있는 형편이면 돌아서라도 찾길을 닦았어. 보부상길은 지름길로 간 거야. 조금 힘들더라도 빨리 가는 길. (전민식, 두천1리)

해당 지대의 별목을 마치면 나무길 사용 빈도가 줄어들어 대부분의 길은 별목꾼의 발길이 끊기며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반면 여러 목상에 의해 오랜 기간 이용된 산판길은 산림청이 산지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임도’가 되어



산불 진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보부상길과는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만들어진 길일 지라도, 임도와 보부상길은 유사한 속성을 공유했다. 잉골드(Ingold)는 수송기(transport)와 도보여행자(wayfarer)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려내는 이동의 선을 비교했다(Ingold 2007). 수송기는 공간을 양분하는 지점들을 가로질러(across) 연결시키는 데 주력하지만 도보여행자의 비정형적 이동은 수송기와 달리 목적지를 예비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움직임은 환경을 향한 그의 인식이 보내는 즉각적 반응으로, 움직임은 곧 그 자신 자체다(Ingold 2007: 76-78). GMC가 낸 임도와 보부상길은 모두 수송기의 길에 해당한다. 보부상길이 시장과 시장, 상인과 상인의 연결에 주력했다면, 임도는 인간과 자연물 자체로서의 나무의 연결을 매개한다. 산에서의 GMC는 나무를 ‘수송’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무자비하게 하천과 샛길을 뚫어내며 벌목 예정지에 도달한 것이다. 때문에 보부상이 빠르고 효율적인 연결을 위해 높고 가파른 비탈길을 택하는 반면 GMC 차량이 내는 길의 한계는 그 무게와 규모를 견딜 수 있는 지점으로 제한된다.



〈그림 4〉 과거 산판길이었던 임도 © 장예지

주민들의 기억에서 GMC 차량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1970년대 초반까지도 마을을 오갔지만, 도별이 엄격히 금지된 뒤부터 급격히 사라졌다고 한



다. ‘자유당 시절’ 이후에는 개인이 직접 GMC를 불하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산림녹화사업과 벌목량 감소 등으로 ‘나무차’ 역할을 한 GMC도 점차 사라져 갔다. 다만 임도는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무를 베어 갔던 차량은 이제 나무를 심고, 심은 나무를 기를 목적으로 묘목과 비료를 수송하게 되었다.

산판(벌목)은 벌이가 마땅치 않은 마을 남자들에게 요긴한 일거리였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톱질이나 도비<sup>12)</sup>질을 할 줄 알거나 나무를 끌어 내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지원할 수 있었다.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벌목을 허가 받은 각지의 목상들은 벌목지점 인근 마을에서 산판일을 할 인부를 모집했다. 마을 내 젊은 남자들은 가까운 산지 뿐 아니라 삼척, 정선, 영월, 철암 등 곳곳을 다니며 산판으로 돈을 모았다.

산판은 수확이 끝나가는 가을철과 겨울에 많이 했다. 농사철이면 농토에 나무를 집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무 재질도 겨울에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상품 가치도 높았다. 노동은 구역별로 이뤄졌다. 주로 안면이 있는 마을 이웃과 한 팀을 이루고, 타지에서 온 산판꾼은 다른 구역을 맡았다. 구역 면적에 따라 7~15명 정도가 톱질, 도비질, 나무 틀 짜기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벌목 대상이 된 나무는 주로 일본잎갈나무(낙엽송)와 잣나무, 소나무 등으로, 건축 용재로 쓰일 수 있는 나무면 모두 베어 갔다고 한다.

벌건 산에서 물난리는 산사태를 일으킬 위험 요소이다. 그러나 목상에게 비 오는 날은 운수 좋은 날과 다름없었다.

#### 〈사례2-8: 비 오는 날의 산판〉

물난리 한 번씩 나면 목상들은 형제 맞은 거야. 젊은 사람 얻어다 (나무를) 물에 띄워서 옮긴까지 내려가. 차 안 쓰고. 나무가 어떻게 내려가든지, 밑에서 다 받아서 가. 비 오면 팔자 고치지. 물에서 다 해야 하니까 (산판꾼) 일당도 많고.

(이옥희, 현 하당 거주)

물이 불어나는 가운데 벌채한 나무를 내려끄는 일은 더욱 위험하고 노동

---

12) 통나무를 짊어 잡아당기는 기구

강도도 높았다. 그러나 빗물 덕에 숲의 표면이 매끄러워져 나무를 굴러내려 보내는 것이 용이했다. 하루로 내려온 나무는 하천을 따라 목재가 모이는 항구까지도 갔으니 운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었다. 산판꾼도 비오는 날에는 노임을 더 많이 받았다. 홍수는 토사 유출과 산사태를 일으켜 화전지와 평지 농토의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지만, 벌목업자는 쓸려 내려가는 토사물과 함께 쉽게 나무 운반을 하는 역설이 발생했던 것이다.

마을과 골짜기 곳곳에서 산판이 벌어졌지만, GMC가 들어갈 수 없는 고도가 곧 대규모 벌목이 불가능해지는 경계이기도 했다. 벌목이 조직적으로 성행했던 일제강점기와 1960-70년대에 500년 소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소나무 보존을 위해 일부러 베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베어내지 못할 만큼 높고 가파른 곳에 뿌리내렸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도 목재로서의 상품 가치가 낮은, 이른바 ‘못생긴 나무’라 불리는 것들도 벌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림 5〉 벌목에서 살아남은 ‘못생긴 소나무’ © 장예지

산판꾼들은 일급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산판에 나설 때마다 달라

졌다. 본격적인 작업 전 해당 구역에서 벌목 가능한 나무의 굵기와 수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후 수치화해, 이에 상응하는 일급을 얼마로 산정할 지를 두고 산판꾼들과 목상은 협상에 나섰다. 이런 방식으로 일당은 목상이 제시하는 최저가와 산판꾼이 원하는 최고가 사이에서 산정되었다. 높은 액수를 받으려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나무를 벌목해야 했다. 원칙적으로 목상은 산림청이 허가한 일정 헥타르 이상의 나무를 벨 수 없다.

매일같이 산판꾼과 목상이 마을로 유입되면서 생긴 변화도 있었다. 두천리의 경우, 보부상의 발길이 뜸해지고, 전쟁으로 쇠퇴한 주막거리에 다시 활기를 일으킨 존재는 외지에서 온 목상과 산판꾼들이었다. 목상들이 일반 가정집과 계약을 맺고 인부들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부들이 직접 쌀을 주면 그 대가로 밥을 지어주기도 했다. 3대 째 두천리에서 주막을 운영했다는 이옥희씨는 방 두 칸을 목상에게 내주어 수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그들의 숙식을 해결해 주었다. 비 오는 날 나무를 운반할 때에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식사를 제공했다고 한다. 오랜 시간을 목상과 타지 산판꾼과 동고동락하다보니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사례2-9: 목상과의 친분〉

산판꾼들이 떠날 적에 엄청 큰 소나무 적송을 싣고 와서 우리 집에 댔어. 몇 년 동안 신세 진 데 대한 대가로. 이 나무 가지고 집 지으라고 준거야. ...GMC 타본 적도 있어. 식구나 한가지니까. (이옥희, 현 하당 거주)

#### 〈사례2-10: GMC의 추억〉

GMC 차를 타고 울진시장 가려면, 특별한 뺑이 있어야 했어. 조수(GMC 운전수) 껏발 좋아요. 조수가 좀 약하다 싶으면 그냥 차에 올라타기도 하고, 밥집 아줌마라던가 뺑이 있어야 타고 갈 수 있어요. (배기용, 두천1리)

이옥희씨는 목상에게 선물 받은 소나무로 두천리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 그가 주막을 운영하며 주로 상대한 사람들은 타지 출신 목상과 산판꾼이었다. 때문에 같은 마을 주민인 독가촌 화전민보다 외지인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골짜기에 사는 화전민은 주막에서 숙식을 해결할 일이 없고, 산에서

자주 내려오는 편도 아니기에 그들의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을 정도로 차가 귀했던 60년대, GMC 차량을 타는 주민은 나름의 위세가 있었다. 두천리 토박이인 배기용씨에 따르면 아무나 GMC에 올라탈 수 없었고 운전수나 목상과 친분이 있어야 차를 얻어 탈 수 있었다. 이옥희씨와 같이 목상과 지속적 관계에 있는 주민들만이 아무런 대가 없이 GMC를 타는 편의를 누렸던 것이다. 그래서 조수의 ‘꼳발’이 좋은 까닭도 선택적으로 차에 태워 줄 사람을 정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소광리와 가까운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500년 대왕소나무 아래에도 함바집이 들어서 산 속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주민이 있었다. 험준한 지대에까지 함바집이 들어선 것을 보면, 당시 군락지 인근에서 벌어진 벌목 규모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광리 역시 산판꾼들이 실 새 없이 오가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주막을 운영해 수익을 얻는 주민이 있었다. 타지 출신 산판꾼 중에는 아예 마을에 정착한 이들도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었다고 한다.

막대한 양의 나무들은 십이령 고갯길을 빠져나갔다. 두천리에는 제재소가 있어 잘려나간 나무는 바로 목재가 되어 마을을 빠져나갔다. 해상으로는 죽변항에서 서울, 부산, 대구 등지로 나가거나 육상으로는 봉화군에 위치한 춘양역으로 반출되었다. 두천과 소광의 나무들은 수출용으로도 쓰였으나, 많은 양의 소나무가 당시 한창 개발 중이던 광산의 광산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굴을 만들 때 지지할 나무 대부분을 각지 벌목상과의 거래로 충당했다. 때문에 1950-60년대 벌목의 황금기는 태백과 영월, 정선 등지 탄광지대의 성장과 함께한 셈이다. 실제로 탄광촌의 발전은 해당 마을 내부의 사회경제적 분화를 일으켰고, 철암과 같은 지역은 그 급격한 성장의 결과로 외지인 마을로 변모했다(채수홍 2004: 73-74). 이는 두천과 소광에서도 일정 부분 나타나는 변화였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온 벌목상을 위시해 간부급 직원과 외지인 출신 산판꾼들이 대거로 마을에 몰려들었다. 새로운 계층의 등장으로 마을 내에도 사회경제적 분화가 발생했다. 전술했듯 목상과 일꾼을 대상으로 한 함바집, 숙소가 생기고 주민 일부도 아예 산판꾼으로 나서서 마을을 너머 각지를 돌았다. 점차 목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집단이 형성되고, 이에 속

한 주민은 농업에서 벗어나 외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 2) 합법적 벌목과 불법 도벌의 불온한 경계

시대를 막론하고 나무가 필요한 사람들은 벌목에 나섰다. 1937년 중일전쟁 후 일제는 군수물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목재 벌채와 공출을 ‘공익’으로 규정하고, 무차별적 벌목을 장려했다. 그 이전만 해도 삼림조합을 조직해 사유림 식림을 강제하고, 산림 보호 명목으로 조합비를 거두며 금벌(禁伐) 주의에 나섰다. 그러나 정책 목표 변경과 함께 조선총독부는 국유림 벌채를 강화했다(최병택 2010: 130-131). 금벌 기간의 벌채 행위는 곧 도벌이었으나, 군사적 이익을 위한 정책 변경은 과거의 불법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결국 ‘나무 베기’라는 특정 행위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달리 하였고, 목상과 군인/관료, 주민이 만들어내는 도벌의 고리는 양자의 경계에 균열을 가했다.

1950-60년대 초반까지 군인은 적극적으로 도벌을 행한 주체 중 하나였다. 한국전쟁 종전 후 남겨진 군부대 병력은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였지만 국가는 이들을 책임질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재 자원은 가난한 나라가 돈을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었다. 이승만 정권기인 이른바 ‘자유당 시절’, 정부는 각지의 목상들에게 국유림 내 목재를 벨 수 있는 벌채 허가권을 내주었다. 이때부터 군부대 다수는 이른바 ‘후생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벌목에 가세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며 권력을 획득한 군의 도벌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부대원이 아닌 군 간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악폐로 전락해, 군 도벌에 대한 사회 여론도 악화되었다. 국방부는 1957년 후생사업을 폐지하고 실태조사반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군인의 도벌은 1960년대까지도 지속됐다(임송자 2007: 114-115).

울진에 주둔한 군부대도 일정 액수를 받고, 벌채 허가권을 가진 목상에게 GMC 트럭 대부와 더불어 운전기사 역할을 할 군인도 함께 차출시켜 주었다. 전후에도 복무 기간이 남았던 군인들은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군생활의 일부로 GMC를 몰게 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군인이 목상과 결탁해

직접 도벌에 나서 나무 운반을 전담하는 경우도 많았다. 군인들은 1959년 육종림으로 지정된 소광리 인근 금강소나무군락지에도 들어가 좋은 나무를 많이 베어갔다. 대략 3,600입방(m<sup>3</sup>) 면적에서 나온 나무는 GMC 2대가 싣고 갈 정도의 양이었다고 한다.

울진 읍내는 물론 서울 대도시에서 온 목상들은 국유림 영역 일부의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일정액을 산림청에 지불했다.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포함해 넓은 면적의 국유림이 목상의 차지가 된 것이다. 사유지 벌목은 나무를 팔기 원하는 산주에게 비용을 치른 뒤 이뤄졌다.

그러나 원칙은 언제나 깨어지는 것이 산판의 법칙이었다. 목상의 벌목은 군(軍) 뿐 아니라 관료 집단과의 끈끈한 유착 관계 하에 이뤄졌다. GMC 차량에 집적된 나무들 중에는 영림서(營林署)<sup>13)</sup> 관료의 묵인 하에 도벌된 나무가 가득했다.

#### 〈사례2-11: 관료와의 결탁〉

도벌도 많이 나갔어. 허가 받은 것의 반을 더 해갔으니까. 간수<sup>14)</sup>들한테 목상들이 대접하고 도박 뒤통 대 주고 그랬어. 산림주사 꾀발 날렸지. 파출소장한테도 돈 주고. (나우식, 소광1리)

영림서 직원들은 공공연하게 뇌물과 접대를 받고 도벌한 나무가 마을 밖을 나가도록 묵인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고 한다. 도벌을 감시하러 산림간수들이 나오면 술과 담배는 물론 도박에 쓸 돈까지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가 100입방(m<sup>3</sup>) 이내로 벌목할 것을 허가했다면, 목상은 일꾼들을 동원해 300입방 정도의 나무를 취했다. 그래서 약속했던 100입방 이내의 나무는 정부에 넘기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들이 취해 추가 이득을 챙겼다.

도벌은 국유림 뿐 아니라 사유림에서도 빈번했는데, 산주와의 계약 하에

---

13) 1967년 산림청 발족 이전부터 관할구역내의 국유임야 및 귀속임야에 대한 관리·경영 및 대부·조림·보호·산림토목 등의 업무를 수행한 조직이다. 1948년 8월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농림부에 소속되었으며, 1967년 8월에는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4) 간수, 산림주사 등의 표현은 모두 영림서 직원을 일컫는다.

벌목을 함에도 국유림에서와 같이 계약 면적을 훨씬 상회하는 만큼의 나무를 베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산주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쉬운 대로 목상에게 돈을 받았고,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송이버섯의 상품 가치가 낮아 송이가 잘 자라는 곳의 소나무를 베어도 커다란 금전적 피해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사례2-12: 목상과의 친분〉

도벌 많았지. 나무 베면 영림서에서 검사를 다 해.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영림서에서 검사를 해야 돼. 나무 베어서 재놓으면 검인 도장 다 찍고, 이거 없으면 (나무가) 못 나가. (이옥희, 현 하당 거주)

막대한 양의 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었다. 도벌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정부의 허락 하에 벌채된 적정량의 나무에는 ‘검’이라는 도장이 찍혔고, 이 표시가 있는 나무들만 숲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울진군 관할 영림서 직원은 도벌로 채취한 나무에도 ‘검’ 도장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죽변 해변과 춘양 등지로 나무가 반출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군·관·목상의 유착은 이곳만의 일이 아니었다.

1964년의 지리산 도벌 사건 역시 220명의 도벌단을 적발한 대규모 산림범죄였다. 군부대와 헌병대에서 후생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무단 벌목에 협조한 일이 밝혀졌고, 농림부 고위층과 국회의원까지 연루되었다는 기사도 보도된 일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농림부 산림국장과 전 영림서장 선에서 종결되어 고위층이 관련되었다는 심증만 확보했을 뿐 도벌 가담자들의 면면을 완전히 밝혀내진 못했다(임송자 2017: 121-126). 도벌은 국가의 묵인 또는 허용 하에 이뤄진 셈이었다. 산림 관련 법령이 불법이라 통제된 행위를 국가가 ‘승인’하는 방식은 곧 검인 도장을 통한 합법적 나무 만들기였다. 이는 불법 행위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 국가의 승인을 상징하는 ‘검(檢)’ 표시는 도벌을 합법 벌목의 영역으로 다시 포섭하여, 합/불을 명확히 가르는 법의 형태에는 손상을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을 합법화하는

관료의 행위는 분명 양자 간 경계를 흐뜨리지만,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도벌의 현장에서 주민의 역할은 이중성을 띤다. 그들은 낮에는 산판꾼으로, 밤에는 도벌꾼으로 나섰다. GMC 차량에 무분별하게 집적된 합법적인 나무와 불법적인 나무는, 국가 공인의 ‘합법’ 목상에 의한 불법적 벌목 행위와, 이들에게 나무를 파는 개별적인 도벌꾼들의 합작에 이해 베어져 나갔다. 두천과 소광리 남성들은 목상의 모집 하에 산판에 참여한 한편 감시를 피해 가며 품질 좋은 소나무를 따로 베어 울진읍과 죽변 등지로 나가 목상이나 제재소에 팔곤 했다. 제재소 입장에서는 목상에게 나무를 사는 것의 1/2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의 나무를 구할 수 있었기에 도벌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웨들리와 아일렌버그(Wadley & Eilenberg 2005)는 인도네시아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도벌 과정에서, 롱하우스(longhouse)로 구성된 지역 커뮤니티에 주목했다. 지역 커뮤니티들은 벌목 지대가 국유림임에도 지역에서 행해왔던 전통적 자치권을 주장했고, 벌목 회사들과 협상을 벌이며 ‘도벌’에 가담했다(Wadley & Eilenberg 2005: 24-27). 반면 두천과 소광에서 주민의 산판 및 도벌 행위는 모두 개별적 성격을 띤다. 벌목상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나무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주민들이었지만, 이들이 국가 또는 산주와 경제적 계약 관계를 맺고 산림에 들어온 이상, 벌목은 남성의 개별 노동 영역에 속했다. 사실상 산림을 전유했던 당사자들의 자치권은 벌목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일단 벌채 대상지 및 일정이 정해지면 그 곳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일용직 노동자’로서 산판꾼이 되거나 한밤중 나무를 파는 도벌꾼이 되어 이득을 취했다.

밤에 마을을 몰래 빠져나간 나무에는 ‘검’이 찍히지 못했다. 완벽한 불법 목재였다. 산에서 자란 나무는 이 도장으로 인해 ‘상품’으로 ‘승인’된 사회적 성격을 부여받는다. 불법 목재는 승인받지 못한 상품이기에 헐값에 팔려 나간 셈이었고, 비공식적 영역에서 개별화된 형태로 거래될 수밖에 없었다. 똑같은 도벌목일 지라도 어떤 위장을 했는가에 따라 상품적 가치가 달라진 것이지만, 나무가 목상의 손에 들어오면, 일전에 목상이 집하한 GMC 차량의



‘합법화된’ 나무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는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 의해 합법과 불법을 오갔던 사회적 나무는 자본주의 상품 세계로 진입한다.

### 3.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경계

#### 1) 생활세계로서의 산림

허쉬(Hirsch 1995)는 공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전자가 어떤 행위를 예비하는 ‘가능성’의 공간이라면 후자는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변환되는 영역이라 보았다. 이 때 공간에서 장소로의 변형에는 사람들의 경험과 문화적 규칙이 작동하고, ‘경관(landscape)’ 역시 문화적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장소로의 변환에 의해 등장한다(Hirsch 1995; 정현목 2013: 113-114에서 재인용). 두천리와 소광리를 에워싼 숲은 그 자체로 마을과 동떨어져 독립된 생태계를 이루는 공간이 아니었다.

산과 마을 사이에는 지리적·인식적 경계가 존재하나 이것이 공간을 이분화하는 기준이 되진 않는다. 장소는 항상 다른 장소들과 연결된 상태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이것은 단지 정적인 위치가 아니라 그 안에 근본적 운동을 담는다. 즉 장소의 안과 장소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멜파스 2013: 22-39). 산림과 마을 역시 연결 관계를 맺는 두 장소로, 지표면 위에 고정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시장에 가고 소를 먹이기 위해 숲에 길을 냈다. 또한 아무렇게 심어진 나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자 벌목업자의 지휘 아래 대량 벌채를 감행했다. 화전지를 찾기 위한 가난한 농민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숲을 ‘자연의 공간’으로, 후자를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문화를 창출하는 ‘사회적 장소’로 정확히 이분화할 수는 없다.

허쉬의 논의에 따르면 경관은 사람들 간의 문화적 상호작용에 의해 구축된다. 그러나 썩(Tsing)이 제시하는 사회-자연적 경관(social-natural landscape)은 인간과 다양한 비인간종이 공간을 공유하며 형성하는 복합적 경관을 의미한다(Tsing 2005: 174-175). 허쉬가 오직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경관 만들기에 주목했다면, 짙은 인간을 ‘포함’한 여러 주체 간 관계에 천착한 것이다. 실제로 산림의 지세와 토양 등의 생태적 조건으로 길을 내거나 화전, 벌목, 채취를 하는 행위에는 필연적인 제한이 존재했다. 법적 제재도 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숲의 ‘주인’이 되어 쉽게 전유하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기후의 변화, 지리적 요건 등 여러 변수를 던고 산림에서 나는 자원을 모두 취하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두천과 소광 주민은 이러한 환경의 일부로서, 자신들의 행위 영역을 구축해 나갔다. 산촌민의 다양한 실천과 이에 결부해 작용하는 산림 동식물의 생태계 간 상호작용은 장소성을 드러내는 운동의 성격을 지녔다. 상업과 농업, 사회 활동이 모두 일어나 이 공간에서 숲과 인간이 빚어낸 장소는 곧 또 하나의 생활세계였다. 이에 다음 논의에서는 산림을 가르는 길들과 당시 주민들이 산에 대해 가진 관념을 통해, 산이 어떻게 생활세계가 되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과 사회적인 것의 경계를 소묘해보고자 한다.

### ① 보부상과 마을 주민의 길



〈그림 6〉 울진-봉화 옛 보부상길 © 중앙일보

두천리에서 소광리를 두르는 ‘산’은 수송기와 도보여행자가 만든 다채로운 길의 교차와 결절에 의해 생활세계가 되었다. 두천리와 소광리를 관통하

며 울진 북면과 봉화를 연결하는 교통로인 십이령은 이 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옛길로, 수송기를 닮아 있다. 십이장은 해안지방인 울진 죽변의 흥부장과 읍내장, 봉화의 내성장 등의 지방 장시를 상호 연결했다(김도현 a 2010: 68). 전국 단위의 조직체를 가진 보부상단은 20세기 초반까지 이 길을 이용했고, 1904년 보부상의 전국적인 조직 해체로 지역단위의 소집단인 선질꾼<sup>15)</sup>이 보부상의 역할을 대신했다(ibid.: 77-78).

죽변 해안에서 출발한 상인은 오징어와 간고등어, 소금, 미역 등을 채겼다. 울진 읍내장과 춘양장 등에서 팔고 나면 다시 쌀이나 콩을 짚어지고 십이령을 올라 죽변 흥부장에 팔았다. 교통이 열악했던 당시 보부상과 선질꾼은 해안과 내륙의 상업에 잇는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이다. 보부상과 선질꾼이 만든 수세월의 발자국은 상거래 지역의 거점을 ‘연결’하기 위함이었기에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최단 거리를 선호했다. 수송기적 경로는 곧 두천과 소광을 따라 이어지는 산림에 새로운 환경을 창안하는 그들의 방식이기도 했다.

지름길로 통하는 높고 가파른 재에는 크고 작은 쉼터와 주막이 생겨났다. 목적지 지향성이 강한 십이령길은 50-60명의 보부상단에게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 주는 장소가 두천과 소광리 주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보부상의 쉴 곳은 곧 ‘점’으로서, 각 점들이 선을 만들어 울진부터 춘양, 봉화를 이었으며, 이는 곧 수송기의 길이 이야기하는 주민과 보부상단의 사회적 관계를 맺기를 투영한 장소다.

소설 『객주』에 묘사된 소광리 셋재의 비석거리는 당시 이곳에 선정비나 공덕비가 즐비했을 만큼 길손들의 내왕이 번다했음을 보여준다. 두천리에서 3대째 주막을 운영했던 이옥희씨는 선질꾼을 상대했고, 그의 시어머니는 주로 보부상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했다. 주막은 두천리와 소광리 마을은 물론, 산지에 위치한 장평 등지의 자연부락과 바릿재, 셋재, 넓재 등의 고개에도 한 집씩 있었다. 쉬어가는 길목에 위치했던 주막에서 선질꾼들은 밤이면 휴식을 취하며 노름을 하거나 다음날 신을 짚신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40-50명씩 무리를 지어 다녔는데, 많은 물자를 이동시키다보니 산에서 도둑

---

15) 선질꾼은 수십 킬로그램의 물자를 지고 이동해야 했으므로, 쉴 때도 지게짐을 지고 서서 쉬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을 만날 염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부상을 상대하는 상인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 준비를 목적으로 시장에 갔기에, 시장을 가는 횟수가 한 달에 두 번이 채 넘지 않았다. 가난이 전부였던 시절에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일 자체가 흔치 않았으며, 험준한 산길을 꼬박 하루 걸려 시장에 가는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지방 장시의 발달이 오지 산간에까지 영향을 미쳐 시장 중심의 상권이 소지역 곳곳을 연결할 수는 없던 것이다. 선질꾼들은 지나가는 고개에서 종종 화전민에게 대마와 콩을 사곤 했지만, 화전민을 포함한 주민들은 선질꾼에게 직접 물건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먼 곳에서 온 그들의 물건은 거래 가격이 높았기에, 쉽게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다. 보부상과 선질꾼은 그 자신이 ‘점 조직’이 되어 직접 이동함으로써 대규모 중앙 시장을 연결했고, 십이령 산길은 ‘선’이 되어 상업 세계로서의 장소성을 얻었다.

도부꾼은 주요 거점에 포함되지 못한 두천과 소광에 상거래를 유인해, 보부상단이 배제한 소지역을 연결하는 주체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상거래는 도부꾼을 통한 물물교환 형태 활발히 이뤄졌다. 도부꾼은 한국전쟁 이후 남편을 잃은 여성이 주를 이뤘는데, 생계를 위해 미역이나 어물을 지고 십이령을 넘어가 곡식과 바꾸어 이를 시장에서 판매했다고 한다(김도현b 2010: 128). 또 이들의 이동 경로인 ‘울진읍 - 셋재 - 소광리’ 역시 십이령길의 일부이지만 도부꾼은 무리를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니며 시장이 아닌 가정에서 면대면으로 두천과 소광 사람들을 마주하고 거래 관계를 맺었다.

#### 〈사례2-13 : 도부꾼에 관한 기억〉

여기서 돈을 벌어도 시장에 안 쓰니 돈이 많아. 여기(소광리)가 부자촌이었어. 울진서 미역, 고기를 팔러 여기 왔어. 망태기 이고 오면 도토리랑 바꾸는거지. 울진 사람들이 오면 고기(생선)랑 도토리, 콩, 팥을 바꿔. (주영희, 소광1리)

따라서 이들의 경로는 수송기의 길을 따르면서도, 도보여행자의 길을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보부상단과 선질꾼은 정해진 시기에, 일정한 인원이 엄격한 자체 법도 아래 동일 지점을 이동하지만, 도부꾼은 십이령길에서 이탈

해 여러 샛길을 다니며 평지와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만나 물물교환에 나서기 때문이다. 소광리 산길에 도달한 도부꾼은 교환을 모두 마칠 때까지 최종 목적지를 상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목적지들 간 연결을 도모하지 않는다. 비규정적인 이들의 경로는 정태성을 떠는 십이령길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십이령이 닿지 않아 대규모 거점이 포섭하지 못하는 소로(小路)를 낸다. 이 또한 산의 지표면과 관계 맺는 새로운 방식이다.

두천과 소광의 화전민, 소를 먹이러 나선 아이들, 나물을 뜯으러 온 여인들은 모두 도보여행자다. 이들도 때때로 십이령을 넘나들지만, 질 좋은 토지와 식생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마을을 오가는 장사꾼이 아닌 ‘거주자’들이 창안하는 생활 세계는 자신만의 감각으로 공간을 이해하며 만들어낸 길들로 가득 차 있다. 불을 지를 산지 및 소가 좋아할 풀과 나물 등 비인간종(non-human)과 관계 맺으며 형성한 여러 갈래의 길은 쩡(Tsing)이 말하는 사회-자연적 경관을 구성하는 일부다. 보부상과 산촌민의 사회적 관계 맺기가 수송기의 길 위에서 이뤄졌다면, 산림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는 불규칙적으로 뻗어나가는 선들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이 선은 자연과 사회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를 지워내며 산림 공간 내에 복수(複數)의 사회-자연적 장소를 만들어냈다.

## ② ‘산’에 대한 종교적 관념

돌과 나무, 성황당 등에 제사를 지내며 건강과 안녕을 비는 기원의 공간 또한 산림이었다. 분명 사람들은 산에 사는 산신이 개인과 가족, 마을의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산신의 세계와 인간 사회는 엄연히 분리되었고, 의례는 양자를 교통하는 매개였다. 자연-사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생활 세계에서, 산에 대한 관념, 종교는 경계를 재소환한다. 샛재 성황사는 십이령이 물자와 사람의 교통로였음을, 즉 산이 곧 길이었음을 적확히 보여준다. 보부상단은 우거진 숲에서 야생동물로부터 몸을 보전하고, 도둑의 피해를 입지 않고 성공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기원하려는 목적으로 성황사를 지었다. 소광리 토박이 박영호씨는 성황신이 산에 사는 신, 산신과 동일한 신

이라 보았다. 대관령 화신을 셋재로 모셔와 보부상의 주도로 건립한 제당이 었다. 성황사 내부에는 보부상과 선질꾼의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진 현판이 걸려있는데, 성황사 건립 후 중수(重修)에 자금을 댄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이 중에는 일본 사람의 이름도 포함되었다.



〈그림 7〉 셋재 성황사 © 장예지

성황사 내부 기록에 따르면, 1868년 중수 이래 현판은 1916년까지 작성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보부상 조직이 와해되면서 과거 보부상단에 속했던 사람들끼리 셋재 성황사를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고, 선대 보부상 조직원들을 추모하는 처소로 쓰려는 목적 등으로 이곳을 지속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질꾼이 보부상의 뒤를 이어 제당 중수와 운영에 관여해 종교적 구심체 역할을 연속적으로 행한 것이다(김도현a 2010: 87-97). 산중턱에 위치한 성황당은 그 위치만으로 과거 이 지역 산림이 당시 이곳을 오간 이들의 삶과 깊이 결부(embedded)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과 산신을 매개하는 장소가 신이 거주하는 산에 있다는 점에서 이 곳은 관념으로서의 자연이 존재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



〈그림 8〉 보부상단원 이름이 빼곡한 성황사 내부 현판  
© 장예지

중국 성황신앙의 영향으로 고려 초기부터 전국에 설치된 성황당은 외래 신앙이지만 성황신은 산신신앙에서 믿는 산천신과 유사하다(신종원 2002: 76-78). 경상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대부분의 고개 마루에 있는 제당에서 모시는 신령은 ‘산이나 고개이름+성황신’이라 표기한 신령을 모신다(김도현a 2010: 96). 셋재 성황사가 모시는 조령성황신(鳥嶺城隍神) 역시 동일한 원리를 따라 이름을 짓고 산신을 모신 것이다.

산신제는 보부상 뿐 아니라, 마을과 각 가정, 그리고 벌목작업지에서 모두 지내던 의식이다. 두천과 소광에서 산신제를 지냈던 주민은 1년에 한 번 씩 지낸 마을 서낭제와 각 가정에서 지내던 산신제를 분리해 기억했다. 소광 1리는 무당으로부터 좋은 날을 받아 당해 장례나 험한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만 데려가 마을 서낭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두천리에서도 정월대보름마다 서낭당에서 마을 제사를 지냈다. 이 때에는 한 해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물론 소가 잘 크고, 가정에 우환이 없는 일 등을 바랐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공간 중 한 곳인 산에 관련된 기원은 따로 하지 않았다. 가령 나무나 나물이 잘 자라게 해 달라는 식의 기도는 흔히 하는 종류가 아니었다. 똑같이 산신을 믿었으나, 성황사와 달리 서낭당은 모두 마을의 평지 지역 인근에 세워졌었다. 마을 공동 신앙으로서, 의례는 다수가 모이기 용이한 넓은 지대에서 치른 것이다.





〈그림 9〉 두천2리 서낭당 © 장예지

마을 제사와 별도로, 1970년대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산신을 믿고 제사를 지내는 이들도 다수 있었다.

〈사례2-14: 산신제〉

나무에 금줄 치고, 4월 초파일날 가서 (산신제) 해. 이견 같이 안 해. 믿는 사람만 하지. 서낭당은 동네 사람이 같이 하고. 산신도, 내가 믿는 나무가 있어. 일단 처음 어떤 나무를 정해서 처음 시작한 뒤에 쪽 제사를 지내. 금강소나무숲에서 하는 거 아냐. 본인 믿는 데가 있어. 닭, 개 소리 안 나는 골짜기 멀리 들어가야 돼. (강화자, 소광2리)

소광리 자연부락 빗내에 살았던 강화자씨에 따르면, 오늘날 이 숲의 명소가 된 500년 소나무나 대왕소나무는 20세기 초중반 이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나무가 아니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예를 바치기도 했으나, 현재 금강소나무숲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은 소나무는 정작 제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마을 사람 전체가 사적으로 산신제를 지내는 것도 아니었고, 원하는 사람이 나무나 돌 등 자신의 수호물을 정해 소규모 의례를 치르며 가족의 건강함과 풍년 등을 기원했다. 수많은 목적으로 나무를 베어 가던 시절이었지만, 누가 모시는 나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나무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사례2-15: 베지 못하는 나무〉

절 받은 나무는 베면 안 된다고 그랬어. 목상도 감히 그걸 베지 않아. 보통 배짱으론 힘들지. 모시는 거 아니라도, 또 너무 큰 나무는...(잘 안 베었어). 옛날에, 동네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뿔나무로 쓰려고 했대.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베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날 꿈에 어떤 머슴이 아줌마 다리를 베고 잤더니 그 아주머니 다리가 나았다더라. 그 머슴이 산신인 거지.(임민옥, 두천1리)

너무 큰 나무, 또는 주민 중 누군가 모시는 나무를 베지 않는 것이 마을 사람들 사이의 불문율인 셈이었다. 마을 공동 의례인 산신제, 베지 못하는 나무의 발생은 길과 더불어, 자연이라는 관념 세계가 마을 구성원 사이에 구축하는 관계성을 반영한다. 연속과 분절을 반복하는 길이 그 곳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의 규칙을 마련했듯 ‘산’에 대한 관념의 종교적 측면은 마을을 ‘공동체’로서 결속시키고 특정 식물에 대한 약속을 만든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벌목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던 시기였음에도 ‘베어지지 않는 나무’에 대한 모종의 규율이 작동했다. 나무를 벨 수밖에 없는 벌목 현장에서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시작해야했다. 무엇보다 강도 높은 노동 현장에서, 특정 구역의 나무를 모두 베는 것을 산신에게 알려 안전을 도모해야 했다. 이에 산판에 돌입하기 전, 돼지머리를 올리고 목상과 산판꾼은 제사를 지냈다. 일 할 사람이 무탈하게 전 작업을 끝내게 해 달라는 염원이 담긴 의례였다. 그 밖에 큰 도로를 닦거나 산림도로를 낼 때도 입산제(入山祭)를 드렸다. 이는 나무를 취하기 전 산에 행하는 ‘신고’와도 같았다.

그러나 매년 신고 의식을 치르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분명 산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인간보다 높은 존재로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를 의례로 실체화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가령 화전을 위해 불을 놓을 때에는 딱히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없었다. 서낭당에서 마을 제사를 지내거나 가정신앙으로 산신제를 지낼 때에는 농업의 번성을 기원하나 여러 경제 행위가 일어나는 산림에 대한 소원은 청하지 않는다. 또 300년 이상 오래 산 소나

무라 하여 귀하거나 신성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었다.

〈사례2-16: 산신제〉

지금도 금줄 매 놓은 나무 큰 게 있어요. 그건 안 건드리지. 교회 다니면서부터 거기 안 다녀. 4월 초파일날 남 못 보게 아버지랑 새벽 일찍 갔었는데. ...나무 잘 자라게 해달라...이런 것까지 생각할 것 없었어. 농사 잘 되고 아들 잘 되게 해 달라 이런 거 빌지. (김기명, 두천1리)

〈사례2-17: 산신제〉

나무, 송이 잘 자라게 해 달라 이런 건 없어. 그냥 자연으로 크는 건데 뭐. 비료 주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기도 힘든데...금강송 같은 데 빌지도 않아.(이한길, 두천1리)

때문에 언제, 어떤 행위를 할 때 산에 ‘신고’를 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기준은 자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죽음’ 뒤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장례 관습은 인간 사회와 대비되는 ‘자연’의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시킨다. 산은 망자의 거처이기도 했다. 생명 회귀의 공간을 우리말에서 산소(山所)라는 일반 명사로 부르는 까닭도 산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최원석 2014). 묘를 쓰기 전, 상을 당한 집은 땅을 파내는 일을 산에 알리고자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창파제라 하여 땅을 팔기 전 짓는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다 쓴 뒤 산신제를 연이어 드리는 방식이다.

잉골드(Ingold)는 환경(environment)과 자연(nature)의 개념을 비교하며, 전자는 우리 자신을 세계 내 관계 가운데 위치지운다면, 후자는 그러한 관계를 소거한 채 우리와 세계를 분리시키는 관점을 취한다고 정의했다(Ingold 2000: 2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천과 소광 사람들은 산림을 자신의 삶과 마을 공동체가 유지 및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장소성을 부여했다. 잉골드의 정의를 차용하면 다양한 길이 교차하는 생활세계이자 초자연적 존재인 신에게 기원하는 종교적 관념이 내재하는 숲은 나 또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배제되는 ‘자연’이 아니다. 오히려 숲은 의식주가 이뤄지는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함께 얹혀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환경’의 일부다.

## 2) ‘독가촌(獨家村)’과 마을(村)

처음으로 인간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본 처녀들과 아이들, 그것들은 자연이었던 것이다. - 민속학자 손진태<sup>16)</sup>

문학 작품과 오지 기행문, 역사 기록 등에서 화전민은 원시성을 갖는 존재로 표상되곤 한다. 위에서 인용한 문구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순수한’ 화전민의 모습을 담아낸다. 김사량의 소설 『태백산맥』은 갑신정변에 실패한 주인공이 동학에 현혹된 화전민들을 구제하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나 이를 이루지 못하자 그의 장남이 화전민을 이끌고 새로운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그린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화전민은 구제 받아야 할 대상, 혹은 평지의 인간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원시적 존재로 그려지곤 한다.

전형적인 산촌 오지인 두천과 소광리에도 골짜기마다 화전농이 살았다. 명확한 주인이 없는 ‘나라의 땅’인 국유지에 집과 밭을 두고 사는 이들은 가난으로 인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기억하는 주민도 있었다. 빈곤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닌, 생계수단을 구할 수 있는 마을 ‘뱃’ 산으로 가난한 농민을 내몰았다. 이로써 화전민은 마을보다 ‘자연’에 가까이 거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오브라이언(O'Brien 2002: 484)은 화전 농경자를 자연-문화 이분법 구도에서 ‘자연’의 측면에 두는 방식은 곧 식민지적 이미지를 내재한 사회적 위계를 전제한다고 보았다. 그의 논의를 따르면, 수많은 이들이 산을 오갔음에도, 화전민 가족이 사는 고지대 산림은 마을보다 열등한 장소로 인식된 것과 같다.

스콧(Scott 2015[2009])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왕국과 산악민이 각각 문명과 야만의 상징으로 표상됨을 지적했다. 하지만 두천과 소광 주민의 삶에서 고지대인 ‘산’과 평지인 ‘마을’에 대한 공간적·인식적 경계는 언제나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진 않았다. 주민들은 화전민을 언급할 때 ‘독가촌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독가(獨家), 즉 단독의 가구에 마을을 뜻하는 촌(村)을 더해 만든 독가촌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정의만 보면 마을이 한 가

16) 남근우, 2000, “‘신민족주의 민속학’의 방법론 재고”, 『역사민속학』10: 147-171

정(household) 자체로 의미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윌크(Wilk 1997)는 벨리즈(Belize)의 케크치족(Kekchi)에 관한 민족지에서 노동 집단으로서의 가구(Household)의 역할을 부각했다. 육아와 재화 및 식량의 분배, 권리와 재산 상속 등이 모두 가구 중심으로 이뤄져(Wilk 1997: 205), 케크치족 사회의 분석 단위를 ‘가구’로 상정했다. 독가촌 역시 영농가족으로, 3대에 이르는 가족 7-15명이 한 집에 살며 의식주를 영유했다. 화전으로 대부분의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나무로 집을 짓거나 소를 키우는 일, 삼베로 옷을 짜는 일 등이 가족 구성원 간 관계 내부에서 행해졌다.

#### 〈사례2-18: 독가촌의 생활〉

한 가족이 화전을 같이 하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하고. ... 한 가족에 7-8명이 한 집에 살았어. 열 살 위부터 일 다 해. 소 먹이기도 하고. 나무는 베고 가져오기 힘들니까 남자들이 하지만 집안일은 그래도 여자들이 하고. (오영자, 두천1리)

#### 〈사례2-19: 독가촌의 생활〉

한 집에 그냥 살아야지. 삼촌, 할아버지...우리 집엔 열둘까지 기억나는데. 방이 두 칸이어도 열 셋, 열 넷 다 살았어. 삼촌들 결혼했어도 이사 갈 생각 안하고 결혼해서 살아. 나갈 데가 없으니까. 요만한 땅 옆에 집하나 지어서. (김동수, 소광2리)

나무로 지은 독가촌 가구의 집은 구불구불한 산지에서 비교적 평평하면서도 물가가 가까운 곳에 자리한다. 이 집의 ‘문(門)’은 인간이 거처하는 장소와 그 바깥을 연결하면서도 분리한다(Simmel 1994: 7). 독가촌 사람에게 바깥은 밭이 있는 노동의 공간이면서도, ‘자연’ 그 자체이기도 하다. 특히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문 밖의 광활한 공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장소로 변모한다. 남편이 집을 비우고, 아이들과 밤을 보내는 아내가 밖에서 나는 호랑이 소리에 기겁했다는 이야기, 맹수가 눈을 번뜩이며 집 쪽을 쳐다보다 조용히 갔더라는 마을 여성들의 무용담은 동물이 거하는 야생의 공간으로부터 가족을 분리해, 다시금 자연과 인간의 장소를 구분

하는 문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10〉 대광천 옆 독가촌 집터 모습  
© 장예지

하지만 ‘마을’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독가촌은 하나의 자연부락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도 했다. 자연부락은 법정리와 달리 인위적 경계에 따라 형성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하나의 취락집단을 형성하고, 이 취락이 자연부락을 형성하거나 몇 개의 소취락이 자연부락을 이룬다. 여기서 하위자연부락의 최소 구성단위가 집(家)이다(최재석 1987: 178). 울진군지에 기재된 두천리와 소광리에 포함되는 자연부락은 다음과 같다.

법정리	자연부락명
두천2리	안말래, 사기점, 장평
소광1리	뒷실, 솔평지, 보부내, 옥생이, 장군터, 텃골
소광2리	원터, 흙다리, 널밭골, 평밭거리, 큰빛내, 작은빛내, 너삼밭

〈표 3〉 두천과 소광의 자연부락 (출처: 울진군지)

자연부락의 규모는 저마다 달랐다. 가령 소광리의 흙다리는 1947년 설립

된 삼근초등학교 소광분교가 1954년 소광국민학교로 승격되어, 많을 때에는 103명의 학생이 있었고(울진군 2001: 931-932), 100가구 이상 살았다는 주민들의 기억이 뒤따랐다. 반면 보부내나 옥생이는 천변(川邊)과 골짜기에 띄엄띄엄 마을을 이뤄 살았고, 이마저도 1960년대 독가촌 이주계획에 따라 이주했다. 빗내 역시 대광천 인근 산속 마을로, 계곡마다 집이 떨어져 있었으나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이곳에서 군과 간첩 간 전투가 있는 후 이주정책에 따라 마을을 떠났다(울진군 2001: 929-932). 두천1리의 사기점에도 4가구가 살았고, 장평도 10가구가 거주하던 작은 마을이었다(ibid.: 903).

산촌 마을의 경관을 묘사할 때, 산의 지세와 주거지의 형상을 분리하며 마을을 산이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곤 한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 군데군데 산재한 두천과 소광의 자연부락은 해발 650m 이상의 지대까지 분포했다. 농토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이가 터 잡지 않은 곳을 찾아 더 높은 산림지대로 올랐기에 한 부락 내에서도 각 가구는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마을의 경관이란 산을 후경(後景)으로 두어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지 및 산지 계곡부에 펼쳐진 가옥과 농지를 모두 포괄하는 형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먼 골짜기에 홀로 사는 가족이 다른 마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실제로 교통, 통신과 단절된 화전민 가구는 면사무소나 인근 시장에 가는 횟수가 현저히 적었다(한상복 1966: 47). 그러나 독가촌민의 생활이 마을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스콧(스콧 2015[2009]: 120)은 산맥과 평지를 대비하며, 언어, 주거 양식, 친족 구조 등에 대한 산지의 생계 방식이 평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20세기 초중반 두천리와 소광리를 이루는 자연부락과 독가촌은 이미 국가 행정 체제에 편입되어 있었고, 상포계나 산림계 등으로 상호 연결망을 갖췄다.

#### 〈사례2-20: 계원의 조건〉

독가촌 사람들도 상포계원이었어. 그런 계들 다 했어. 결혼할 때 가마 타는 가마 계도 있었고. (강석중, 소광2리)

서낭당 제사나 마을 잔치가 열리는 시기는 먹을 음식이 가장 많은 때이므로 고지대에 거주하는 가족들도 내려와 잔치 음식을 나눴다. 학교 역시 독가촌의 자녀가 평지 마을이나 타 자연부락 아이들과 교류하는 주요 공간이었다. 두천리 주막거리에는 노름을 하러 나온 화전농도 많았다고 한다. 결국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인식은 주거지 간 물리적 거리보다, 서로 간 소통망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통망은 그 규모가 작을수록 연결성이 높고, 이웃 간 상호작용 빈도도 높기 때문이다. 두천과 소광을 떠나지 않은 주민에게 옛 주소지를 물으면, 사람들은 으레 무정골(현 두천리)과 빛내(현 소광리), 셋재(현 소광리) 등의 자연부락명으로 답한다. 이는 자신이 “두천리”나 “소광리” 사람이라는 데 앞서, 보다 소규모로 구성된 자연부락에 대한 소속감이 더욱 뚜렷함을 보여준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그들의 영토(country)를 지표면 자체가 아닌, 선(line)들이 맞물리는 네트워크(interlocking network)로서 구역이 분할되는 형태로 상상한다(Chatwin 1987: 62; Ingold 2007: 80에서 재인용). 품앗이와 울터를 함께 하는 이웃 관계 역시 거주지 각각을 직조하듯 연결하는 자연부락 네트워크의 산물이다. 잉골드(Ingold)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공간 인식을 채트윈(Chatwin)이 제시한 ‘네트워크’라기보다, 르페브르(Lefebvre)가 고안한 ‘메쉬워크(meshwork)’, 즉 그물 연결망에 가깝다고 보았다. 야생 동물과 가축, 사람들의 ‘움직임’이 직조하는 환경이 만드는 그물 모양의 패턴이 곧 메쉬워크이다.(Lefebvre 1991: 117-118; Ingold 2007: 80에서 재인용).

자연부락의 경계는 확실히 획정되지 않는다. 거주지와 농토를 연결하는 점점의 총체, 즉 삶이 일어나는 지점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곧 메쉬워크의 일부가 된다. 그러므로 연결을 매듭지을 ‘완결’은 무의미하며, 궁극적인 종착지점도 갖지 않는다(Ingold 2007: 81). 사람의 발자국이 곧 자연부락의 일시적 경계를 이룬다면, 국가가 나서서 지정하는 행정부락은 지도 위에 표시하기 용이한 단순화된 경계를 요한다. 행정부락과 자연부락의 관계를 보면, 하나의 자연부락이 곧 행정부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몇 개의 자연부락이 한 행정부락을 형성하는 예도 있다(최재석 1987: 179). 두천리와 소광리

는 후자의 사례로, 몇 개의 자연부락을 하나의 법정리로 통합한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설정된 법정리는 인위적 경계를 기반으로 하며, 산간지역인 울진 서부의 각 리의 경계는 산맥을 중심으로 정해졌다. 이때의 경계는 명확한 시작과 끝을 지닌다. 이를 정하는 기준도 ‘자연물’로서의 산림의 능선이다. 자연부락은 평지와 산지에 걸쳐, 각 지형의 지세와 물의 흐름, 농지의 분포에 따른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다. 때문에 자연과 사회의 경계는 다시 한 번 흐려진다. 그러나 이를 포섭하며 구성되는 법정리는 자연부락의 메쉬워크의 범위에 한정을 가하고 경계가 되는 산맥은 생활권의 일부가 아닌 행정의 편리를 위한 지리적 분할 수단이 된다.



### Ⅲ. ‘강대국’을 꿈꾸는 푸른 산

3장에서 다루는 산은 강력한 안보와 높은 경제 수준을 달성한 ‘강대국’을 표상하는 푸른 산의 경관이다. 1968년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을 기점으로 두천과 소광의 산림의 경관에도 선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번 논의의 시작점도 이 공비 사건에 가 닿는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국가가 강력한 법과 명령 수단을 이용해 주민과 마을의 자유로웠던 산림 전유 행위에 통제를 가하기 시작한 까닭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70년대를 적기(適期)로 수행된 갖가지 산림 및 화전민 관련 법령과 제도, 주민 자치조직의 설립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취약지 대책사업과 화전정리사업 및 산림녹화사업, 조림대부림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주민 개개인, 그리고 마을 차원에서 국가와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성도 드러난다. 이것이 산림의 전유에 직접적으로 일으킨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두천과 소광 사람들의 전략은 종전과 다른 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특질을 구성했다. 푸른 산의 등장은 자연과 사회의 경계에 근본적인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했다. 산과 마을의 경관이 분리되어 산림이 강력한 시각적 상징물로 자리 잡았고, 산림을 오가는 주민은 산림 도덕을 수호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요구받게 된 것이다.

## 1. 공비로부터 국민을 ‘구하되’, 화전은 ‘금하라’

### 1) 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의 취약지 대책사업

대간첩대책본부 본부장 유근창 중장은 3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무장공비가 지난 2일 밤 동해 경북 울진군 북면 주인리 해안에 침투, 양민 3명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 대간첩대책본보는 5일 하오 6시 현재 무장공비 3명을 사살하고 식량 등 많은 소지품을 노획했으며 작전을 펴고 있는 강원도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해 4일 낮 12시를 기해 을중사태<sup>17)</sup>를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1968.11.06. 경향신문 “蔚珍(울진)에 武裝共匪(무장공비)30명”

북한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을 15명씩 조를 편성, 침투시켜 군복·신사복·등산복 등으로 위장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10월 30일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해안에서 1차 침투가 있었고, 2차 침투는 11월 1일 북면 고포 해안에서 발생했다. 3차는 11월 2일 삼척 원덕면 월촌리 고포 해안으로 침투하였다<sup>18)</sup>.

지난 1968년 1월 무장 게릴라 31명이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습격한 1.21 사태 이후, 또 다시 북의 대규모 습격이 단행된 데 대해 남한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이 남한의 산악지대와 농촌에서의 게릴라 활동가능성을 탐색해 본 것으로<sup>19)</sup>, 이 곳에 소규모 혁명부락을 만들어 베트콩과 같이 남한 내부에서 저항세력의 기지를 만들려는 시도였다(이동욱 2015: 162). 무장공비 침투가 발각된 뒤, 공비의 침입 경로를 따라 울진과 삼척의 해안-산악지대 중심으로 군의 대규모 토벌 작전이 펼쳐졌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한국군은 12월 28일까지 계속된 작전에서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해 120명 전체 소탕에 성공한 것으로 기록되었다(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listSubjectDescription.do>).

17)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 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할 사태를 말한다.

18)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http://www.archives.go.kr))

19)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http://www.archives.go.kr))

두 차례의 안보 위협은 국가가 산악지대 거주민과 산림을 인식하는 데 대한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두천리는 1995년 덕구온천으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를 확포장하기 전까지는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가 마땅치 않았을 정도로 고립된 산지에 위치했다. 소광리 역시 80년대가 되어서야 전기가 들어왔을 정도로 행정의 시선에서 배제된 지역이었다. 1960년대까지 자유롭게 국유림 내 산림자원을 취하고, 대대적인 화전경작이 가능했던 것도 고립된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특수성은 국가의 간섭에서 보다 자유롭게 마을의 자치 영역을 확장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했고, 산림 자원의 전유도 그 일환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몸을 숨기기에 용이한 깊은 산지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 남한의 중심부에 도달하려 했던 공비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 독가촌 화전민과 농민, 상인들의 삶의 장소인 산림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생활공간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주민 개개인과 마을 차원에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했던 산림은 한순간에 적지(敵地)로 변모했다.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했던 대상이 이제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지대로 인식되면서, 국가의 목표는 적을 제거해 다시 산림을 ‘순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 되었다. 이는 곧 국가의 눈에서 벗어나 있던 산에 사는 화전민이 국가의 시야에 포섭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식물만이 거주하는 ‘순수한 산림’에 화전민의 농토와 집은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당시 공비의 임무는 크게 지하당 구축과 부락별 해방촌 구축, 군사·정치·경제 등 정보 수집 및 위조지폐를 이용한 빈민촌의 양민 포섭과 유격전 전개, 민중봉기를 위한 선전활동 등이었다(이동욱 2015: 101). 울진에 상륙한 북한군은 울진군 북면 주인리 고수동의 화전민 자연부락을 첫 번째 공작지로 선택했다. 7가구 18명이 거주하는 작은 화전민촌을 유격기지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쓴 마을 청년들의 신고로 사태가 발각되었다. 울진에서 접수된 첫 신고였다(ibid.: 135-146). 위조지폐와 선전활동으로 화전민을 충분히 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북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화전민의 “투철한 반공정신”에 힘입어 안보를 지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국가 행정력의 손에 미치지 않는 존재였던 화전민

은 이제 안보의 최전선이 된 산림에서 국가의 시선에 정면으로 포착되었다 (장예지 2017: 272).

두천과 소광을 잇는 보부상길은 공비들의 침입로이기도 했다. 울진에서 춘양까지 최단 길이로 연결된 보부상길은 신속한 이동을 추구하는 군사도로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했다. 이 길을 따라 기차역에 도달해 강릉, 서울 등지로 나가기에도 용이했다. 간첩루트가 된 숲길의 운명을 두고 여러 말들도 오갔다. 소광리 자연부락인 빛내에 사는 어느 지방 간첩이 북과 교신을 하고 있었다던가, 한국전쟁 이후 월북한 저명인사가 이 길의 존재를 북에 알렸다는 등 진위를 알 수 없는 뜬소문이 마을을 감쌌다. 잉골드(Ingold)가 고안한 수송기(transport)의 길과 유사했던 보부상길은 공비들에 의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되어, ‘서울’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품는 군용도로 기능했다. 그러나 지역민과 소규모 장사꾼들이 만든 샛길, 즉 도보여행자(wayfarer)의 수 갈래의 길은 매번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군용도로 쓰일 수 없었다.

공비의 존재는 가장 먼저 주민들에 의해 가시화되었다. 무장공비침투사건을 겪은 두천리와 소광리 주민 중에도 간첩을 목격하거나, 간첩의 특이한 행동에 대한 소문을 접한 주민이 여럿 있었다.

#### 〈사례3-1: 간첩 목격담〉

옥방(소광2리 자연부락)에도 간첩 왔었지. 그때 온 산에 다 왔어. 말은 안 해봤지만 멀리서 봤어. 자유롭게 댕졌지, 그 사람들. 군인, 순사들이 잡으러 오고... (간첩은) 행동이 달라.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막 와서 살림 가져가고 그러니 (간첩인 줄) 알지. (최미희, 소광1리)

#### 〈사례3-2: 간첩을 둘러싼 소문〉

나 군에 있을 때, 고정간첩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 꼭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더라. 여기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령 같은 거 받은 게 아닌가...그 땐 라디오가 귀했잖아. 나중에 어디 가서 잡혔나보더라고. (강석중, 소광2리)

두천리는 보부상이 숙식을 해결하는 주막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낯선 외지인의 왕래가 잦은 마을이었다. 일반적인 농촌과 달리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이곳에서도 간첩의 행동은 수상한 데가 있었다. 시골 오지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트랜지스터라디오를 들고 다니며 한 달 가량 산을 오가는 사람, 평범한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게 낡은 구식 군복을 껴입은 사람 등이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돌이켜 보면 트랜지스터라디오를 든 남자는 무전을 시도하는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마을에 등장한 낯선 자가 간첩일지 모른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주민들은 간첩을 상대로 이를 확증하려 하지 않았다.

골짜기 자연부락이나 독가촌에 거주하는 화전민은 평지에 사는 주민보다 더 빈번하게 간첩과 마주했다. 공비 입장에서 이들은 빈민촌의 양민으로, 유격활동과 민중봉기를 위해 포섭할 목표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비의 실제 ‘임무 수행’과 그 대상이 된 주민의 실제 기억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공비가 마을 주민에게 준 위조지폐는 원래 빈민촌 양민을 포섭해 남한의 경제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돈을 줌으로써 주민의 환심을 사서 경계심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민중 대상의 선전 활동도 북한군의 임무 중 하나였다. 그러나 두천과 소광에 잠입한 공비는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위조지폐를 받은 주민은 이를 자신이 제공한 식사에 대한 대가라고 여길 뿐이었다. 군에 잡힌 간첩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 지 진술해 조사를 받은 주민도 있었다.

#### 〈사례3-3: 위조지폐를 건넨 간첩〉

간첩들이 일주일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먹을 게 다 떨어지면 내려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다 주시오’ 하는 거야. (간첩인지) 알면서도 안 주면 위험하니까 주는 거지. 돈도 막 퍼 줬. 가짜 돈을. … 가짜 돈을 뭉태기로 주고, 간첩이 붙잡혔어. 누구 집에 가서 돈을 줬다 (진술)하니까 조사했어. 한 집은 한국 돈이랑 똑같은 줄 알았대. (장순자, 소광2리)

위조지폐는 식량이 부족할 시 주민으로부터 장이나 쌀을 얻기 위해 쓰였다. 낮에는 산 속에 숨어 독가촌과 마을 주민의 동태를 확인하고, 밤이 되면 조용한 틈을 타 고추장이나 음식을 훔쳐가 피해를 보는 일도 잦았다. 하지만 간첩이 주민에게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해코지 한 경우는 없었다.

간첩을 대면한 경우는 있어도 그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은 없고, 간첩과 상호 작용하는 것은 먹을 음식을 구할 때뿐이었다. 그럼에도 주민에게 공비는 두렵고 낮은 대상이었다. 공비의 외양은 “옷도 거지처럼 희한하게 입고”, “말투도 동무, 동무 하며 우리와는 다른” 기묘한 존재였다. 또 공비가 폭력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지만 다른 마을에서 입은 피해나 공비를 둘러싼 추측성 소문이 마을 내에 퍼지면서 그에 대한 두려움은 증폭되었다. 그 와중에 군은 밤낮없이 수색작업을 벌였기에 산 속에 숨어든 공비와 독가촌 주민, 그리고 군은 한 공간에서 위태로운 동거를 한 셈이었다.

적의 침투 이후, 공비와의 동침을 시작하면서 공비와 군, 주민 각각이 인식하는 산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맨 처음 두천과 소광의 산림에 잠입한 공비에게 이곳은 다음 목적지를 예비하는 ‘경유지’이자, 화전민촌을 유격대로 만들 ‘군사지역’이었다. 그러나 국군과의 대치 상황에서 몸을 숨겨가며 교신을 시도하고, 위조지폐를 건네 식사를 요구하는 공비에게 산은 식사와 잠자리를 처리할 아지트, 즉 ‘생활의 공간’이 되었다.

산림이 ‘일상’의 장소로 기능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의 상호 작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했다. 헬기까지 가세해 국군이 공비 축출에 나선 이유도 이와 맞물린다. 국군의 군사 활동은 연일 이어졌다. 군은 두천과 소광에서 공비의 침입지에 단기간 주둔하며 간첩 소탕에 나섰다. 헬리콥터는 빠른 시일 내로 공비를 생포 및 사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수풀이 우거진 산지 ‘내부’에서 군인 개개인이 공비를 찾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그 ‘바깥’인 하늘 위에서 숲을 완전히 내려다봄으로써 공비의 움직임을 손쉽게 포착했다. 이는 곧 국가가 울진군 오지의 산림을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이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몇몇 주민은 실제로 붙잡혀 간 간첩을 목격했으며, 헬기가 타살한 공비를 매달고 가던 장면을 회상하기도 했다. 공비는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매일 밤 조명탄을 쏘며 군은 그들을 찾아 나섰다. 이때 현재의 금광소나무 군락지 인근에서 공비를 대거 사살 및 생포한 ‘대광천 전투’가 발생했다. 당시 소광1리 이장은 쌀을 받는 대가로 수색에 나선 군인의 숙식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당시에는 마을 남자들도 군복을 입고 군인과 함께 작전

에 참여할 정도로 소광리의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두천리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보부상길도 68년을 기점으로 폐쇄되었다. 무장공비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부상이나 주민이 혼자 길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봉화로 가는 보부상 중에는 군인에게 타살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산 속에서 군인에게 발견되었으나 잠시 서있으라는 군인의 지시를 어겨 총살을 당한 것이다. 생활세계의 일부였던 ‘길’은 이제 다다를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사례3-4: 술한 조사를 받으며 간 시댁〉

간첩사고 나고, 9월인데도 눈이 얼마나 왔는지. 결혼하는 날. 남편 집 쪽으로 가지. 가마타고 오면서 얼마나 붙잡고 조사를 하는 지 애먹었죠. 무전을 다 치고...  
(장순자, 소광2리)

침투사건 이후 결혼을 하게 된 장순자씨는 남편이 있는 빗내로 가야 했다. 제대로 된 큰길도 없는 산골에서 의지할 길은 산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에 올라야 했는데, 가는 길목마다 군인의 신원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서나 영창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목적지에 가는 이유부터 경위 등을 소상하게 말했고, 겨우 시가에 도착해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 공비와 주민 간 내통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군은 공비를 잡기 위해 무고한 민간인부터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길을 오가는 행인 역시 자신이 온전한 ‘국민’임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온갖 신문에 성실히 응해야만 했다.

이동식 경작(화전농업)을 제거하려는 국가의 정책은 근대에 이르면 정치적 안보와 자원 관리를 위해 더욱 강화된다. 행정 체계에 편입되지 않고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식 경작자들을 잠재적인 체제 전복자로 여긴 까닭이다(스콧 2015[2009]: 152). 두천과 소광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숲에서의 심문에 순순히 응한 것도 결국 자신의 ‘국민됨’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였다. 생활공간을 빼앗긴 독가촌 사람이나 마을 주민은 모두 자신의 존재까지 철저히 입증해야 했던 것이다.

화전민 소개령이 떨어지면서 공비와 주민의 위태로운 동거는 막을 내렸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취약지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산간 독립가옥 이주정착 및 집단화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공비의 행동 거점지가 되는 주요 산지를 ‘취약지’로 선정해, 이 곳에 거주하는 독가촌 가구와 자연부락 거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목적이었다. 이제 길은 폐쇄되고, 생활공간에는 ‘취약지’라는 딱지가 붙었다. 분단 시대 ‘외부의 적’의 침입은 한 소지역의 생활세계 전반에 균열을 일으킨 것이다.

아래의 사진은 소광리 자연부락 거주민을 위한 이주촌 가옥으로, 한 가옥당 두 가구가 거주하도록 설계되어, 총 22가구가 이 곳에 입주했다. 이는 산으로부터 사람들의 공간을 지워내는 첫 시작이기도 했다. ‘대광천새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은 마을이 ‘안전한’ 평지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 집을 떠났다. 정부는 자기 소유 농지가 없었던 독가촌민에게 별다른 생계 수단을 제공하지 못했고, 본래의 화전지로 돌아가는 일이 금지된 이상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들이 예전에 살았던 산림 지대를 취약지라 명명했으나 역설적이게도 취약지는 그들에게 있어 최선의 터전이었다.



〈그림 11〉 이주사업으로 정부에서 제공한 가옥 형태 © 장예지

두천리 이주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옥 네 채에 8가구가 이



전했다.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통근 생활을 하며 낮에는 산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밤이 되면 군의 통제 하에 내려와 산이 아닌 ‘마을’에 있어야 하는 규칙을 지켰다. 주민이 받는 통제는 국가의 적과 마주한 상황적 특수성으로 정당화됐다. 당시 두천리 이주촌은 사유지에 건립되었으나, 사유지 주인은 땅을 임대해 준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 이주촌 주민으로부터 1년에 쌀 몇 되를 받는 것 외엔 국가 차원의 보상도 전무했다.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독가촌민은 소광리 이주민과 마찬가지로 마을을 떠나 도시 노동자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한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 등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맞물린다(신민정 2011: 99). 물론 도심 노동시장의 확대가 두천과 소광리 주민의 이주를 추동한 일차 요인이라 확증할 수는 없다. 다만 삶을 지속할 최후의 공간인 산림을 떠나면서 제공받은 집 외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 밖으로의 이주는 합리적인 선택지였다. 국가가 주도한 ‘이주촌 마을 만들기’는 산지와 분리되는 사회적 공간의 창출이었으나, 일상의 유지가 불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산 바깥으로의 이주는 곧 마을 바깥으로의 이주를 야기한 것이었다.

## 2) 화전정리사업과 그 틈새

전국적으로 시행된 화전정리사업은 산림 ‘훼손’ 행위인 화전지를 정리함으로써 산림을 자연의 경관으로, 마을을 사회적 경관으로 분리하는 국가 프로젝트였다. 두천리와 소광리에서 이 프로젝트는 68년 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 화전민을 이주시키는 취약지 대책사업과의 연계 가운데 본격화됐다. 하지만 대규모 국가 사업이 소지역에 침투할 때, 사업의 목적과 지역에서의 실제 실천 양상 사이에는 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의 틈은 국가가 사업에 투사하는 담론과 이를 실체화하는 관료, 그리고 담론의 실천 주체인 화전민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두천과 소광의 주민이 기억하는 화전 금지의 맥락과 서사를 중심으로 ‘틈’의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3-5: 소개령 이후 멈춘 화전〉

골짜골짜 사람이 살았어. 화전민 아니라도 자연부락에. 68년도 무장간첩 나와서 소개를 시키면서 비로소 나온 거지. 간첩들이 밥 해달라면 밥 해줘야 되고 그랬으니까. 정부에서 소개민 집 지어준거지. 그러니까 화전이 없어졌지. (최상원, 두천1리)

두천과 소광 주민은 196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화전 금지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기억한다. 즉 소개령 이후 골짜기마다 거주하던 사람들이 산을 ‘비우고’, 군인과 영림서는 이들이 다시 입산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68년 이전에도 화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산림 행위이긴 했으나 금지 법령이 무색할 정도로 일상화된 농경 활동의 일부였다. 화전을 금하는 근본 원인 역시 ‘산림환경 황폐화’에 있었다면, 68사건 이후에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산림을 사람이 없는 ‘공터’로 두어야 했다.

〈사례3-6: 금지된 화전〉

무장공비 나오고서는 화전을 아예 못하게 했지. 영림서에서. 산에 들어가면 혹시 다칠까 못 들어가게 한 거야. 옛날엔 여기 사람들이 많았지. (소광초등학교) 학생들이 150명 됐으니...골짜골짜 화전하며 살아먹었지. (박영호, 소광2리)

무장공비의 존재를 겪어낸 주민의 경험 역시 다시 산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낳기에 충분했다. 익숙한 공간에 나와 생김새가 닮은 ‘적’이 침입한 순간,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사회적 공간이었던 산림은 혼돈에 잠긴다. 좁은 샅길로 이어진 깊은 숲은 언제, 어느 곳에서 나타날지 모를 적이 숨어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숲은 ‘사회’와 분리되어, 인간에게 친절하지 않은 ‘본래의 자연’으로 되돌아가버렸다.

〈사례3-7: 간첩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 여럿이 모아놓고 사는 것보다 (낯지). 개개인이 가서 살면 무장공비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무서워서...자기 목숨이 끝나는데...사람들도 그 때부터 화전을 할 생각을 못 해. 산에 들어가면 큰일 나지. 두려움이 엄청났어. (배기용, 두천1리)

반면 법리의 영역에서 화전정리는 두 차례에 걸쳐 수행된다. 1966년 제정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은 1기 화전정리사업인 1965년 강원도의 ‘화전정리 10개년 계획(1965-1974년)’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되었다(산림청 1980: 116-125; 신민정 2011: 73에서 재인용). 이후 2기 사업은 1기 당시의 한계를 보완해 1974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실시된다. 울진군은 1963년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편입됐으므로 사실상 1기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68년도 무장공비 출몰로 강원도 삼척, 정선, 영월 등의 지역과 경상북도 울진 일대 화전민을 집단이주 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두천리와 소광리에서는 화전정리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층위로 취약지 대책사업이 먼저 시작된 까닭이었다.

화전정리사업의 원 취지는 화전이 야기하는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을 보전하는 데 있었다. 아무렇게나 불을 지르는 조방적이고 약탈적인 화전 농법은 언제나 산림 문제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다(강원도 1976; 김동수 1974; 산림청 1980; 이기봉·배제수 2007). 때문에 화전을 일으키는 경작자 역시 산림 환경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표상되었다. 화전민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법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화전지 정리 후 재입산을 금지하고, 강제 하산 명령을 내리거나 행정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작물의 몰수는 물론 벌금 또는 구속 조치도 취해질 수 있었다(신민정 2011: 88).

오브라이언(O'Brien 2002: 489-490)은 화전민이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주체일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 순응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그려짐을 지적하는데, 이는 각 사회의 위계를 상정해 원주민 사회를 전통적, 원시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식민주의적 관점과 상통한다. 화전정리사업의 목표도 결국 화전지의 성격을 자연의 공간(산) 또는 사회적 공간(경작지) 중 하나로

명확히 확정하는 데 있었다. 정체가 모호한 어떤 공간에 식별 가능한 지위를 부여해 국가의 관리 영역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이로써 ‘원시적’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화전민을 이주시키는 작업을 병행해 ‘자연’에 가까운 존재였던 그들이 발전하는 ‘사회’의 영역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구제’한다.

두천과 소광의 화전 농경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무장공비 사건 이후, 국가의 이주 사업과 화전 금지 조치도 구제 행위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마을에서 화전이 완전히 ‘근절’되기까지, 국가의 전략이 언제나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비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다시 산을 찾았는데, 그 양상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었다. 취약지 대책사업과 맞물려 실시된 화전정리사업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궤도에 오르는 데에는 일종의 과도기가 필요했다. 이 시간의 ‘틈’에서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자신의 생활 환경을 마련했다.

물론 공비 출몰 직후에는 주민 누구도 선불리 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화전지 뿐 아니라 자신의 농토가 산에 있더라도 얼마간 경작을 멈추고 땅을 묵힐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비가 나타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소개민의 경우, 두천리에서는 일종의 ‘출퇴근’ 생활처럼 낮에는 산에서 농사를 짓고 밤이면 마을로 내려오는 규칙적인 패턴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화전과 경작은 일부 허용되었다 해도 ‘화전민의 거주’는 철저히 금지되었다. 하지만 화전지와 거주지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화전은 더욱 빠르게 사라졌다. 국지적으로 드문 드문 떨어져 있는 화전지를 매일같이 오가며 경작을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개인이 들이는 노동력에 비해 생산성도 높지 않았다.

소광리의 화전민 이주촌 ‘새마을’은 국가의 전략이 두천리 이주촌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생활의 본거지인 빛내 등의 골짜기를 떠나면서 산 속 농토는 아예 버려졌다. 통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농토와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화전지와 이주촌을 오가는 것을 점차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마을에 떠나거나 남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은 가족이 살아갈 방도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됐다. 얼마간의 농토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떠날 수 없었고, 화전 단속의 강화로 땅이 없던 빛내 주민에게 이

주 가옥은 오갈 데 없는 섬과도 같았다.

무장공비 사건이 수습되고, 일상적 삶이 가능해지면서 소개 대상이던 주민 중에는 다시 자신이 살던 자연부락으로 돌아가는 이도 있었다. 거주지의 일시적 소멸을 감당할 여력이 없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마을을 떠난 상황이었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라는 공식이 두천과 소광에서 적용되는 방식이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였던 68년 간첩 사건은 산림을 전유하는 지역민의 방식에도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화전은 물론 입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다시 평화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화전을 멈추게 되었다. 주민들의 기억에서 화전을 관두게 된 사정 중에는 국가의 계획이 실효를 거둔 경우도 있었으나, 그와는 다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정도 속했다. 화전을 ‘못하게 된 것’과 ‘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후자는 자연·수동성·전통성에 사로잡힌 존재로 통용되는 화전민 내러티브가 설명하지 못하는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 〈사례3-8: 화전을 그만 둔 이유〉

시할머니가 치매가 왔어. 85세에. 87세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멀리는 못 가고 이 동네(현 소광2리)로 온 거지. 일단 우리 동네(빛내)랑 한 가구잖아. 그래서 이 집 사서 온 거야. 3년 있다 (도시로) 떠나려고 했는데 35년째 이 땅에 살게 된 거야. 소개 되고 화전을 해도 되긴 했어도 이미 다들 떠났으니까. 내가 산 땅만 해도 크니까 (굳이) 화전을 안 한 거지. (장순자, 소광2리)

시할머니의 병세 때문에 정착을 택한 장순자씨-박영호씨 부부는 화전과 경작을 병행했으나 돈을 모아 농토를 매입하면서 화전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도시로 떠날 생각도 있었으나 마을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자 자연스럽게 소광리에 머물게 되었다. 경제력을 갖추면서 화전 경작은 필수 수단이 아닌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남겨진 것이다. 결혼 전 소광리 자연부락 셋재에 살았던 김옥희씨도 간단명료하게 화전을 그만 둔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결정은 산림청의 단속이나 법령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 두천리 남정희씨의 사정도 이와 비슷했다.

〈사례3-9: 화전을 그만 둔 이유〉

화전 금지는 안 했어. 허락은 안 해도 해먹고 싶은 데로 해 먹었지. 해 먹다가 하기 싫어서 나왔어. 소 먹이고 돈 벌면서. (김옥희, 소광1리)

〈사례3-10: 두천리에 정착한 계기〉

무장공비 나왔을 땐 원래 있던 땅 버리고 나왔지. 보상은 무슨 보상. 그러니 몇 해를 왔다 갔다 하다 살 수가 없어서 논, 밭은 사서 내려온 거지. 그 땅은 고스란히 묶어있어. (남정희, 두천1리)

남정희씨 가족이 살았던 무정골은 마을에서 20-30분만 걸어가면 될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다. 시어른 대(代)부터 소유하던 농토를 일궈 온 가족이 생활했으나 소개령 이후에는 땅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소개령이 해제되자 남정희씨 가족은 다시 무정골로 돌아갔지만, 그 뒤 마을 근처의 땅을 매입하면서 산을 나오게 되었다. 소광리의 새마을 주민이 겪은 어려움과 달리, 남정희씨가 임시로 살았던 두천리 이주가옥은 본래의 터전인 무정골과 멀지 않았다. 그들 가족에게 무정골 토지는 ‘되돌아갈 곳’이었고, 이는 남정희씨 가족이 마을에 남는 길을 택한 가장 큰 이유였다. 결국 되돌아갈 곳 없는 화전민이 도시로 떠난 사정은 도시가 가져다 줄 ‘부(富)’에 대한 기대 이면에 자리 잡은, 생을 잇는 터전이 사라져가던 당대의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의 언술에서 드러나는 ‘자유로운 선택’의 내러티브는 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화전민을 그려냈던 관료의 시각과 대치된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뒷받침한 ‘높아진 경제력’은 1970년대 당시 국가가 보급한 통일벼로 인한 농업 생산량의 비약적 증가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였다. 화전 금지 조치와 통일벼 보급 사이의 직접적 인과 관계는 없으나, 통일벼로 경제적 이익을 보면서 화전을 ‘안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농민은 자신의 경작지와 거주지가 멀어질 경우, 잡초와 해충 때문에 작부체계를 바꿀 수밖에 없다(Nations & Nigh 1980: 14-15; Wilk 1997: 115에서 재인용). 농경지와 거리는 다종작보다 단기-집중적인 단일 경작을 추동하는 것이다(Ibid.: 같은 쪽). 앞서 보았듯 간척사건 이후 이주촌 사람들

은 산에 있는 화전지나 경작지와 거리가 멀어져 기존 화전지에서의 다종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후 통일벼의 보급으로 밭인 화전지가 아닌, 평지의 논에서 더욱 높은 생산성으로 주식인 벼를 수확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화전지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논에서 통일벼 중심의 단일 경작으로 더 나은 수익을 취하자 화전지를 버리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가의 제재로 화전을 ‘못 하는’ 반면, 통일벼 재배 이후에는 ‘안 하게’ 되었다는 박인화씨의 모호한 설명이 타당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사례3-11: 통일벼와 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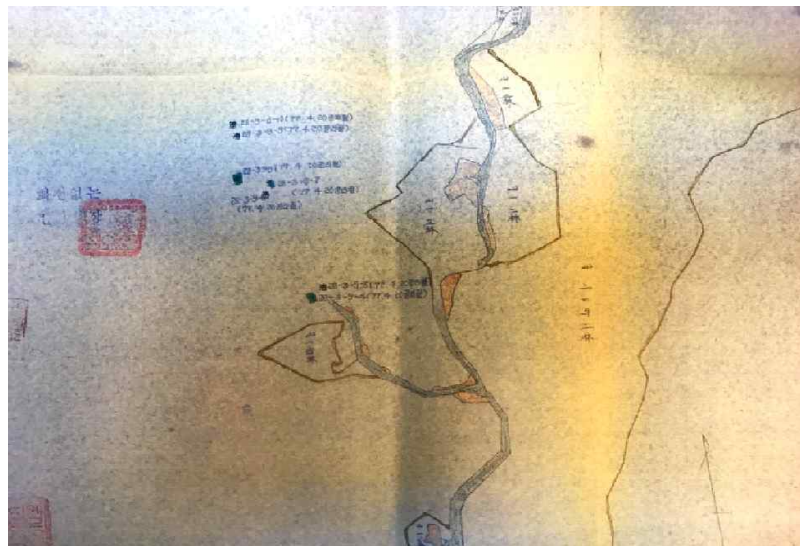
옛날에는 사는 게 힘드니까 산에 불 놓고 산전하고 이르는 건 ‘못하게’ 하나까 안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통일벼가 나오면서 먹는 게 넉넉하니까 저절로 ‘안하고’,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안하고. (박인화, 두천2리)

결국 197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기까지, 두천과 소광의 순화전민과 점작화전민이 화전을 완전히 그만둔 배경에는 식민자적 시선으로 지역민을 바라본 국가의 전략과 새로운 작물의 도입, 외부 노동 환경의 변화가 다층적으로 얹혀 있었다. 화전정리사업은 산촌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의 물결 가운데 산림이라는 생활 세계와 마을을 분리시키는 기제의 일부에 속했다.

화전정리 및 화전민 이주 장려는 국가가 바라보는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보여준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국가는 자연적 존재로 표상된 화전민을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다른 사람들과 모여 사는 사회적 존재로 전환해 자연과 사회의 구분을 선명히 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자연’뿐인 산림과 농경지 및 가옥이 즐비한 마을로의 공간적 분화에 의해 가능했다. 통일벼는 근거리 단일 경작 확대에 기여해 분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국가의 목적을 지역민이 자신의 일상에 그대로 투사한 것은 아니었다. 종래의 산림 전유 양식을 버린 저마다의 개별적인 이유가 그 예다. 그들의 선택이 국가의 논리에 곧바로 순응한 것이 아닌, 생존 방식을 전략적으로 찾는 가운데 법적 제재와 타협하고, 새로운 외적 변화를 맞닥뜨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한

삶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화전정리사업은 행정의 관리 영역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던 화전지를 식별 가능한 영토로 재조정하는 작업이었다. 능선과 계곡을 따라 덩어리진 형태로 식별되던 산림에서 파편화되어 산재해 있는 화전지를 찾아내는 일은 화전지 현황 및 화전민 실태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사업에서 식별은 곧 문서화된 형태로의 기록을 의미했다. 문서화는 자연을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 포섭하고, 국가가 꾸준히 주입하려 했던 ‘근대적 소유 관념’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림 12〉 화전정리 완료구역을 표시한 지도  
(출처: 울진국유림관리소 화전정리대장)

이제 산림청과 지자체는 화전 정리 지역의 지번부터 면적, 소유자를 상세히 기록해야 했다. 산림으로의 복원 또는 경작지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를 완료한 토지는 평면화된 관리도면에 표시되었다. 위 관리도는 1977년 정리가 완료된 소광리 지역의 일부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간략한 지번과 정리 후 바뀐 토지 용도를 서로 다른 색깔로 구분한 지도에는 산림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식생과 지세 등은 모두 생략한 채, ‘관리 대상’만을 단순한 삼각형, 사각형 폴로 그려냈을 뿐이다. 또한 화전정리대장에는 지역별 산림



청 공무원과 읍면 지사체장의 특별 지시 내역과 읍면관리도 작성요령을 상세히 제공해, 전 지역 차원의 기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리(里)별로 기입하는 화전정리기록카드에는 해당 화전지의 소유자를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 이로써 국유림과 군유림, 사유림 등의 구분을 가시화하여, 각 산의 주인에게 ‘책임’을 부과했다. 주인이 소유의 대가로 다해야 할 의무는 ‘조림’이었다. 산림황폐화의 주범인 화전지를 몰아냈으니, 나무가 다시 번타를 채워야 했다. 국가는 이를 산림 생태계의 회복 시간에 맡기기보다, ‘산림녹화사업’이라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밀고 나갔다. 화전정리사업과 산림녹화사업의 접점이 곧 ‘조림지’(구 화전지)였고, 땅에 대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화전민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농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국유림 내에 온존했던 화전지를 향한 농민의 모종의 소유 관념은 설 자리를 잃어 갔고, 그 곳에는 배타적 소유권을 점하는 국가와 지자체, 산주개개인이 나무를 심었다.

두천과 소광에서 발견되는 조림지의 넓은 면적이 과거 산판을 하거나 화전경작을 한 흔적이 있는 곳이었다. 가을철 산판을 했거나 화전지였던 곳에 봄이 되면 다시 주민이 들어가 산림청 직원의 삼엄한 감시 아래 조림이 시작된 것이다. 낙엽송을 심은 뒤부터는 그곳에 다시 화전을 할 수는 없었기에 화전정리와 녹화사업은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관계였다. 그러나 화전지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조림을 시작하진 않았다. 예정지를 정하고 실제 작업에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담당할 국가의 대리인인 관료는 화전지 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비록 화전지에 대한 일시적 점유 기회를 잃게 되더라도 해당 토지를 일궈낸 자를 소환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산과 가장 가까이 거했던 농민과 산의 관계를 인정하는 내적 연결망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주인이 떠난 화전지와 아직 주인이 남은 화전지는 조림예정 통보가 내려진 뒤에는 어김없이 ‘조림지’가 되었다. 화전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새로 심어질 나무들이었다. 현재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보관 중인 소광리의 화전정리기록카드에는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년간의 화전지 조림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火田整理記録カード

所有権		火田		整理状況		電 ( 燈 物 )		備考	
番 地 住 所 姓 名	番 地 住 所 姓 名	面積	年 度	年 度	年 度	年 度	年 度	年 度	年 度
187 <sup>21</sup>	744 <sup>13</sup>	350	16	16	16	16	16	16	16
		300							
		400							
		200							
		700							
		450							
		450							
		1,000							
		400							
		40							
		350							
		300							
		300							
		200							
		150							
		150							
		150							
		150							
		100							

〈그림 13〉 화전정리기록카드: 소광리의 예  
(출처: 울진국유림관리소 화전정리대장)

기록은 임야 지번별로 화전지의 면적과 화전지 소유자의 주소, 이름은 물론 조림 시기와 면적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기할 점은, 분명 국유림 내 개인의 농경활동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화전지를 만든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빠짐 없이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 및 산림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 〈사례3-12: 화전지 조림〉

화전민들 안 떠난 곳엔 조림 못 하지. 안했지. 빈터가 되면 조림을 하고, 한창 농사짓는 땅에는 안 하지. 전부 국유림 들어가서 밭 일구는 게 화전민인데. 농사 지어먹는 사람 있는 데는, 먹고살기 위해 하는데. 화전지 주인한테 조림할거다 공지를 하지. 농사짓는 중이면 거의 안 하고, 떠난 뒤엔 알릴 필요도 없고. (이 석원, 두천1리)

보통 사유림 내 화전지 조림은 산주에게 통지한 뒤 행해졌다. 국유림의 경우에도 사람이 떠나 묵은 밭에는 바로 조림을 실시했지만 아직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쉽게 나무를 심지 못했다. 경작자로서는 국유림에서 농사를 지은 입장이었기에 조림을 막을 만한 명분과 수단이 없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마땅치 않은 사정을 봐주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때문에 한창 경작중인

땅보다 화전민이 버리고 간 빈 터에 우선적으로 낙엽송을 심는 일이 많았고, 해당 토지를 경작한 화전민은 수확한 뒤 다시 농경을 하진 못했다. 결국 화전정리사업과 산림녹화사업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 시책으로, 화전 정리로 새롭게 나무를 심을 면적을 마련하면, 양묘(養苗)와 전국적인 주민 동원을 통해 녹화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화전지에 대한 조림 식수는 대부분 낙엽송이라 불리는 일본잎갈나무였다. 속성수로 분류될 만큼, 낙엽송의 강점은 빠른 성장속도에 있었다. 가늘지만 높이 솟아오른 낙엽송은 화전을 하려는 사람들의 재진입을 막는 데 유용했을 것이다. 나무로써 사람을 밀어내어 숲을 ‘자연’의 장소로 만드는 데 낙엽송은 탁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림 14〉 낙엽송 조림지 모습 © 장예지

1968년부터 급물결을 타고 일어나는 두천-소광 산림에서의 변화는 취약 지대책사업과 화전정리사업, 이후 연속적으로 시행된 산림녹화사업과 대대적인 통일벼 보급 정책 간의 긴밀한 직조(interwoven)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국가의 거대 프로젝트가 자체의 공동체 원리와 개별적 삶의 양식을 지속하던 소지역에 침투하면서 촉발하는 마찰(friction)은 인간과 자연이 맺었던 종래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켰다.

산촌민의 길이자 농토, 놀이터, 의례 장소가 놓였던 산림은 국가의 시선

에서 사회성이 소거된 ‘텅 빈 자연의 공간’이었다(Tsing 2005: 201-202). 따라서 목표는 국책 사업의 직조물로서 산을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모습으로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의 논리가 언제나 ‘국민’의 삶의 논리와 동일시되진 않았다. 공비의 위협 속에서 어린 낙엽송 묘목이 산에 오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에 협력하면서도 다시 산의 농토를 찾거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떠났다. 산림 공무원도 국유림 화전지의 ‘주인’을 찾았다. 문서에 나열된 사업의 목표와 시행 방식은 명료했을지라도, 그 선명함이 지역민의 복합적인 삶을 완전히 잠식하진 못한 것이다.

## 2. ‘법’의 집행으로 ‘문명화’되는 산림

### 1) 법의 언어가 말하는 산림

법은 한 사회의 문화적 특질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규범과 같은 사회적 약속으로부터 동떨어져 단독의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보하난(Bohannan 1965)은 법을 “규범의 이차적 제도화(Doubl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orms)”라 정의 내렸다. ‘제도화’는 법을 규범 또는 관습과 구분하는 기제로, 비법적(非法的) 제도라 할 수 있는 규칙이나 규범을 재진술(restatement)한 형태가 곧 법이다(Bohannan 1965: 35).

실제로 박정희 정권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불어 닥친 근대화의 바람은 오지 산촌에까지 깊숙이 침투하였지만, 이를 주입한 언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 법제화된 산림 정책 중 일부는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배기에 걸쳐 이어진 각 마을별 산림 보호 규약을 일정 정도 승계한 측면이 있었다. 조선조의 규범이 ‘법’의 모습으로 제도화한 형태다. 이 절에서는 조선의 송계와 일제의 애림계, 그리고 1961년 조직된 산림계 사이의 연계성을 통해, 법의 이중적 제도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조선은 왕토사상 아래 산림을 “온 나라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물(산림조합 2012: 34)”로 규정했다. 비록 관료와 양반 집단의 산림 사점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 문제가 있었으나, 조선은 국법으로 엄연히 산림의

사적 소유를 금했다. 통치 이상에 따른 공동의 전유물인 산에 대한 필연적인 조치였다. 조선 후기 다수 출현한 ‘송계’는 산림 사점(私占) 행위를 방지하고자, 촌락민이 공동 규약에 의거해 산림을 이용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례가 많았다(최병택 2009: 13). 향약에서 더욱 발달된 모습을 띠는 송계는 부락민이 단결해 주변 산림을 함부로 베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적으로 조직되었다. 지방에 따라 금송계, 송금계, 산림계, 애림계, 순산계 등 다양한 명칭은 각 지역마다 산림계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산림조합 2012: 38-39).

일제는 1930년대 자연촌락에 존재했던 송계를 ‘애림계’라는 이름으로 관계 조직으로 재편했다(최병택 2008: 307). 마을 자치조직을 식민지 국가가 취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일제의 애림계가 조선 후기의 송계를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계승한 형태라 보긴 힘들다. 무엇보다 일제는 조선이 ‘삼림’을 이해한 방식과는 다르게 이 공간을 정의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할 당시 삼림을 “지상에 수목이 울창하게 존재하는 곳과 수목의 성장이 예상되는 곳(朝鮮總督府 1924: 7면; 최병택 2012: 146에서 재인용)”이라 규정했다. 일제는 삼림 공간에서 인간의 존재를 지워내고 ‘자연물’의 성장 장소로 산을 타자화하나, 조선의 산림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전유 대상이 된다. 즉 조선의 정의(definition)는 모든 백성의 산림 활용에 방점을 두지만, 일제의 정의에서 산은 나무가 자라는 자연의 장소로, 사회적 이해관계는 배제되어 있으며 이때의 나무 역시 식민지에서는 수탈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과 일제가 삼림을 대상화하는 상이한 시각을 반영한다. 산을 자연의 대상으로써 사회와 분리한 일제는 토지 및 임야의 소유권을 정확히 분할하기 위해 「삼림법」을 제정하고 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조선은 ‘전유’를 앞세웠다면, 일제는 ‘소유’를 산림이 인간과 맺는 관계의 토대로 삼은 것이다.

일제의 애림계는 법의 이중적 제도화의 발현태(態)이긴 하나, 이는 관습의 자기 복제의 결과물은 아니었다. 자체 규약에 따라 모두가 영유하는 ‘공용림’을 지켰던 조선의 송계 소속 촌락민은 일제의 지배 아래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산림이 아닌, 국유림과 사유림 등 소유권자가 명확한 산림을 지키게 되었다. 식민지 정부에 의해 확립된 근대적 소유권으로 개인과 국가의 권리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애림계는 송계가 하던 산림 보호 역할을 계승했다. 애림계와 송계는 모두 마을 차원의 산림 자원 활용을 위해 보호에 나섰다. 그러나 송계의 활동이 마을 주민의 공동 소유 의식이 반영된 발로라면, 애림계의 역할은 국가의 ‘대리인’에 가까웠다. 식민지의 문법은 그 이전 시대의 관습을 국가의 법 토대 위에서 새로운 근대 이데올로기에 따라 변용한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애림계 설립 논의는 대두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중앙에서도(道), 군(郡), 마을 산림계로 이어지는 일원적 산림조직망을 구성해 식림을 행하려 했는데, 이는 일제시대 체제와 사실상 동일했다(최병택 2006: 37; 최병택 2008: 310-311에서 재인용). 1951년 제정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산림계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어, 지방주민에게 산림계를 조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부여했다(ibid.: 312). 부락의 자율적 조직이던 송계는 식민지배기를 거쳐 해방 후에는 국가의 명령에 따른 법적 강제성을 갖춘 제도로 변모했다.

1960년 군사정권이 들어오며 1961년 제정된 「산림법」이 명시하는 산림계 역시 근대적 국가의 법령을 계승한다. 다만 박정희 정부가 더 중시한 것은 산림계를 통한 농민들의 부역 동원이었다(ibid.: 325). 황폐화 정도가 심한 산림을 인근 촌락민이 보호하도록 한 조치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산을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산림계 활동은 주민 동원의 ‘산림녹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인 셈이었다. 백성들의 자유로운 전유의 공간이라 규정되었던 산림은 식민지배와 해방을 겪으며 완전한 ‘자연’의 공간으로 법적 정의가 내려졌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동의 안전한 전유를 위해 산림을 ‘보호’하려던 관습적인 자치 조직은 국가가 강제하는 법적 조직이 되었다. 송계-애림계-산림계로의 계승은 시기에 따른 변주를 거듭하는 법의 이중적 제도화가 일어남을 보여준다.

두천과 소광도 녹화사업을 위한 산림계를 조직했다. 다만, 1리와 2리로 분구(分區)된 두천리의 산림계는 그 조직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해방 뒤 두천2리는 애림계를 조직한 바 있는데, 이는 일본이 남기고 간, 이른바 적산(敵産)을 관리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후 1967년 정식 발족한 애림계는 국유림 일부를 대부해 조림하는 ‘국유림조림대부’를 통해 산림 자원의 혜택을

보고자 했다. 일제에서 1960년대로 이어지는 법의 이중적 제도화가 일어난 것이다. 두천2리의 애림계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뒤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소광리와 두천1리의 산림계는 전국적인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 차원의 산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조직이었다. 산림계는 산불 감시와 조림, 사방 등 녹화를 위한 사업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했으며, 산림계원이 곧 마을 주민일 정도로 산촌민 전체가 산림계원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측면은 박정희정권의 산림통제가 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는 바, 산림녹화사업 성공의 저변에 있는 강한 행정이 어떻게 마을에 침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녹화’를 위한 금기, 그리고 동원

화전을 전면 금지하고, 사람들이 비운 자리에 나무를 심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법’에 기초한 실천이었다.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마을에 ‘법이 없었다’며, 산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1961년 산림 내 행위를 통제하고, 자연을 보전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산림법〉 제정 이후, 1973년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을 수립했다. 이로써 화전정리와 산림녹화는 쌍을 이뤄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비로소 법이 마을에 들어선 것이다. 강력한 통제와 금지, 그리고 산림계원인 전(全) 주민 동원은 법의 존재감을 마을 곳곳에 드러냈다.

산림 정책의 성공은 치산녹화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선명하게 보여주듯, ‘녹색’의 산림이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의 눈앞에 실현시키는 데 있었다. 녹색과 뚜렷이 대비되는 황폐한 산림은 일종의 ‘오염 상태’를 의미했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러한 조치는 곧 나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식수할 수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을 창안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공간의 창안이란 일련의 ‘금지 행위’를 지정하는 일이기도 했다. 먼저 사람들의 화전과 도벌 행위가 사라져야 했다. 매일같이 나던 산불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금지 조치의 효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장소가 생기면서 나무를 베고 불을 내던 사람은 나무를 심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화전지는 나무가 아닌 작물의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녹화사업의 방해물에 불과했다. 이내 화전은 ‘산림황폐화’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다. 두천과 소광에서 조림사업은 간첩사건 이후 화전정리사업과 함께 대대적으로 시작된 바, 조림과 화전정리는 상호간의 연동 작용으로 서로의 목적에 잘 부합했다. 즉 산림을 ‘오염’의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화전을 정리한 곳에 다시 사람들이 입산할 수 없도록 빨리 자라는 낙엽송을 조림하는 것은 산림을 ‘나무’의 자리로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이로써 화전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조림지가 채워나갔다.

이미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는 행위 역시 금지되는 것이 당연했다. 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벌목이 지속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이에 벌목을 허가받은 목상은 조림비를 예치해야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일종의 의무 조림으로, 벌목 면적당 조림 가능한 식수량을 산정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림청에 예치하여 벌목 후의 조림을 담보하는 것이다. 화전지와 더불어 벌목 구역은 곧바로 새로운 조림지가 되었다. 목상들이 조림을 위해 예치한 입목대금으로 산림청이 묘목을 구입하고, 주민들은 부역으로 나무를 심는, 일종의 분담 체계가 성립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도벌이었다. 의무 조림을 실시한다고 해도, 국지적으로 도벌을 행하는 주민의 행위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개개인의 도벌을 막기 위해 강구한 것이 ‘보탕조사’였다. ‘보탕’이란 도끼로 통나무를 조각낼 때 받치는 나무 기둥을 지칭한다. 나무를 쓰지 않는 가구는 없었으므로 어느 집이나 이 보탕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보탕 위에 나무를 쥘어 생긴 가루가 흩날려 있으면, 이는 곧 해당 가구가 나무를 보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산림녹화사업으로 벌채 금지가 확산되면서, 사법권을 갖는 산림간수의 권력은 나날이 커져갔다. 영림서<sup>20)</sup> 직원은 가가호호 방문해 나무를 떼거나 모아둔 흔적이 있는 지 수색했다. 숨겨 놓은 나무를 들키면 정도가 심할 경

---

20) 산림청의 국유림 관리기관으로 현재는 동, 서, 남, 북, 중부 산림관리청으로 개편되어있다. 주요 업무는 관할구역내의 국유임야 및 귀속임야에 대한 관리, 경영 및 대부, 조림, 보호, 산림토목 등이 있다. (출처: 산림임업용어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우 영창에 갈 수도 있었다. 소량의 잡목을 땔감으로 쓴 것은 봐 줄 수도 있었지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소나무는 결코 베어선 안 됐고, 낙엽 채취조차 금지되었다. 연료부터 농기구 및 건축 자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됐던 나무는 언제든 원할 때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산불이 번지면서 태우는 산림 면적의 넓이에 비하면 화전과 도벌이 입히는 피해는 국지적인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작 마을주민은 산불에 크게 민감하지 않았다. 산에 불이 피어오르는 광경은 매일같이 마주하는 익숙한 풍경의 일부였다.

#### 〈사례3-13: 흔했던 산불〉

불 여기저기 막 났지. 막 질렸어. 비가 와야 불이 꺼지지. 비 안 오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안 꺼. 불타면 얼마나 좋은데. 고사리 잘 나고. 옛날엔 불나도 신경 안 썼어. 단속을 안했당께. 박정희 대통령이 단속하고 녹화하니까 됐지 그 전엔... (정광운, 소광2리)

정광운씨의 기억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전의 산불은 ‘통제 대상’이 아니었다. 작은 불은 예삿일이었던 데다 큰 불이 나도 오늘날과 같이 행정이나 소방이 나서서 진화를 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피해를 입힐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주민들이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화재 진압 시설이나 재난 시 연락망이 미비한 열악한 상황에서 마을 차원의 진화는 한계가 있었다. 맞불을 놓거나 개울물을 퍼 나르는 재래식 방식으로 조금이나마 불을 막아보는 정도였다. 때문에 산불에 가장 취약한 이는 숲 속 독가촌에 사는 주민이었다. 화전지 개간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큰 불로 번지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또한 담뱃불이나 번개로 인한 자연 산불은 작물이 자라는 화전지를 태우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한 경우 가옥까지 모두 불 타 줄지에 살 곳을 잃어버리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그림 15〉 1950년경 불에 탄 나무 © 장예지

하지만 산불이 산촌민의 삶에 적대적이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잿가루가 덕분에 영양분이 풍부해져 질 좋은 산나물이 가득 자랐다. 또한 굳이 화전지를 만드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적당한 평지를 골라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다. 오히려 녹화사업 성공 후 숲이 우거지자 나물이 햇빛을 받지 못해 많이 자라지 않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녹화사업에 착수한 관료의 눈에 산불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막는 방해물이었다. 불을 이용해 화전을 부치고 나물을 채취하던 마을 사람의 삶과는 대치된 채, 치산녹화기에 불은 산을 ‘오염’시키는 대상으로 강조된 것이다.

산촌 사람들은 이 ‘오염’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다. 산림계를 중심으로 마을 전 주민이 ‘윤번순산제(輪番巡山制)’에 따라 산을 지키는 규칙이 두천과 소광에도 뿌리내렸다. 산불감시는 부역의 일환이었으므로 봄·가을철이면 마을 주민은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한 달에 1-2회 감시 활동에 나섰다. 각 마을 사람들은 당번을 정하여 하루에 두 명 씩 짝을 이뤄 국유림 내에 설치된 전망대에 올라 산불이 나는 곳이 있는 지 감시했다. 순산 당번은 산불 지점을 발견하면 한 명은 전망대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급히 마을로 내려가 비상전화로 신고해 진화에 나섰다. 이러한 정기적 활동 외에도, 산불이 나면 주민들은 어김없이 동원되었다. 한창 농사를 짓던 와중에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쫓아가거나 조림 작업 중에도 불난 곳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까운 구역 사람들은 모두 불이 나는 골짜기로 향했다고 한다.

〈사례3-14: 불끄기의 기억〉

불났다 하면 너 나 없이 모여 들어야지 뭐. 사방(砂防) 하다가도 어디 불 났다하면 쫓아가야 되고. 박정희 죽던 해에 통일벼가 실패해서 하나도 먹을 게 없는데 사방하러 갔다가 불났다는 연락 받고 그걸 켜어. 나락 타고, 산타고 올라가는 (불을) 켜어. 농사는 틈타서 하고. 씨 뿌리다가도 불나면 급히 가고. (오영자, 두천1리)

건조한 계절, 인간의 실수나 자연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불은 사실 산에서 으레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산불감시자의 활동은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기온과 바람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번져나가는 불을 ‘감시’하여 이를 인간의 통제 범위 하에 두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불을 감시하는 행위는 곧 사람의 활동을 제어하는 기제이기도 했다. 흔한 소각 활동과 화전지 개간은 물론 산불조심기간인 3월에서 5월까지의 입산에도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골짜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보이면 입산 이유를 알아두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시원의 역할이었다. 결국 통제되는 자연이란 곧 인간의 특정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일이었고, 이는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의 행위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국가의 지침에 따라 마을 주민은 돌아가며 산을 ‘지킨다’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고, 이를 규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불을 내던 사람은 불로부터 산과 마을을 지키는 사람으로 분하게 된 것이다.

현재 두천1리 산림계장인 배기용씨는 1970년대 치산녹화사업 기간 약 10여 년 간 산림보조원으로 일했다. 두천리 토박이인 그의 부친은 대상(大商)으로, 마을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배기용씨 역시 마을 대소사를 도맡았으므로 각종 사안에 대한 행정 처리에 능했다. 이에 두천과 상당, 하당, 덕구리 일원의 조림 상황을 영림서 직원과 함께 감독하는 일에 적합했다. 그의 주요 업무는 인원 동원으로, 각 호당 한 명씩 마을 주민이 조림에 참여하도록 적정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조림은 약 5년에 걸쳐 완료되었는데, 각 작업은 영림서 직원의 엄격한 지휘 아래 이뤄졌다. 조림 초기, 각 마을은 집집마다 한 명 이상이 나와 조림에 참여해야만 했다. 조림은 봄에 시작하므로 농사철과도 겹쳤지만 조림

일정이 공지되면 가족 중 한 명은 예외 없이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산에서 나무를 심어야 했다. 마을 인근 뿐 아니라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먼 곳의 산까지도 조림을 하러 나섰다. 조림 참여자는 마을 단위로 모여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동리별 반장은 이장의 지시 아래 전 가옥을 돌며 조림 일정을 사전 공지해야 했다. 독가촌 주민도 예외는 없었다. 때문에 반장은 행정구역상 두천리 경계 안에 있는 자연부락과 독가촌 사람들도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마을 구석구석을 오가며 사람을 모았다.

산림 공무원은 측량판을 들고 다니며 조림 규모를 책정한다. 대다수 조림 예정지는 국유림으로, 그 중에서도 산림 황폐화 정도가 심각한 화전지와 벌목지에 해당했으므로 화전지와 벌목지 면적을 산출한 뒤 조림 규모를 예측했다. 산림 소유 주체별로 조림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도 달라졌는데,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담당하지만 군유림과 사유림은 읍진군 차원에서 조림을 실시했다. 국유림 비율이 높은 두천과 소광에서 무상 지원에 의한 사유림 조림은 흔치 않았고, 주민이 참여한 조림 대부분은 국유림에서 이뤄졌다. 사유림 산주는 조림용 묘목을 사고 인부를 고용할 여력이 없었다. 다만 70년대 이후 강한 단속 기조로 사유림 내부 도벌도 현저히 줄었다. 때문에 인위적 힘을 가하지 않고도 바람을 따라 날아온 솔씨가 자라 약 40년 간 훼손 없이 숲을 키울 수 있었다.

각 마을마다 영림서 직원인 ‘산림간수’<sup>21)</sup>의 지도 하에 남자들은 양묘장에서 마을로 온 묘목을 지고, 여자들은 가방을 매고 해당 조림지로 이동했다. 평창, 용문, 춘양 등에 위치한 묘목장에서 나무를 키워 각 지방 국유림관리소로 옮겨지면, 묘목은 다시 마을로 향했다. 산판으로 매일같이 소나무가 빠져나가던 과거가 무색할 만큼, 어린 묘목들이 다시 산으로 올라간 것이다. 나무를 심는 노동은 고된 일이었다. 일렬로 선 사람들은 정해진 묘목을 모두 심어야 했다. “우리 조림하러 가서 나무 못 심고 그러면 쫓겨내고 그랬어요.”라며 당시의 엄격한 분위기를 회상하는 주민도 있었다.

나무를 심는 전 과정에는 일종의 성별 분업이 작동했다. 남자가 묘목을

---

21) 일제 강점기 산림을 지키던 하급 관리를 일컫는 말이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산림청 직원을 산림간수라 부른다.

웁기면 여자는 심는 일을 하는 등의 분담이 이뤄졌다. 구덩이를 파고, 심고, 묻는 일은 효율적인 분업 체계에 기반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무의 생장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을 요한다. 한 달 정도 모여 묘목을 심는 것으로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5년 여 간 나무를 키우는, 나뭇의 ‘재배’ 과정이 필요했다. 묘목을 심기 전 사람들은 잘려나간 나무의 잔가지와 풀들을 모두 정리해 나무를 위한 ‘밭’을 정비한다. 이때 가장 큰 방해물은 아무렇게나 엉킨 칩덩굴이었다.

〈사례3-15: 조림 경험〉

풀 베러 한 달씩 갔어. 고등학교 방학 때. 칩냉쿨도 없어야 돼. 나무 감아서 못 자라게 한다고. 무조건 없어야 돼. 나무를 죽이니까. (오영자, 두천1리)

땅속의 칩은 나무가 깊숙하게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하므로 칩을 캐는 것은 물론 제초제를 사용해 아예 칩이 자랄 수 없는 토양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이듬해부터 3~4년 간 묘목 사이에 자란 ‘잡풀’과 ‘잡목’을 베어낸다. 이로써 ‘자라야 하는 나무’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모두 제거했다. 인간이 심는 묘목과 달리, 그것과 경쟁하는 수종은 ‘잡초’나 ‘덤불’로 불리며 무용한 대상으로 치부된 셈이다. 그래서 잡풀을 벤 뒤에는 비료를 주어 일정 정도 나무가 자라면 해당 조림지에서의 활동을 완료했다.

더구나 화전지 조림에 사용된 수종은 대부분 낙엽송이었다. 속성수이기 때문에 빠르고 높게 자라는 낙엽송은 당시만 해도 전봇대로 쓰였고, 건축용 재료도 유용했다.



〈그림 16〉 사방에 편재하는 낙엽송 조림지 © 장예지

두천과 소광을 잇는 산림에 심긴 주요 수종은 경제수종과 속성수였다. 이는 산림녹화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보여준다. 소나무, 낙엽송 등은 건축 용재로 쓰기에 적합했고, 잣나무나 밤나무 등 유실수도 산촌 생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는 수종이었다. 이른바 ‘경제조림’이라 축약될 70년대의 조림 기조는 소수의 수종으로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목적을 함의했다. 더불어 오리나무와 아카시아나무 등의 속성수도 단기에 대량의 나무를 심고자 하는 당시 치산녹화사업의 성과를 완수하는 데 일조했다. 다양한 수종으로 생물다양성에 일조하는 숲의 모습은 이 때 당시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경관이었다.

두천리의 경우, 두천2리에는 밤나무 단지가 조성되었지만 그 외의 유실수나 연료림<sup>22)</sup>은 없었고, 통틀어 낙엽송과 잣나무를 가장 많이 심었다. 소광리도 이와 유사했다. 소광2리 주민이 공동으로 키워 이익을 나누고자 밤나무 군락지를 만들려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소홀로 묵히게 된 땅이 있었다. 그 밖에는 낙엽송과 잣나무가 압도적으로 많이 심어졌다.

22) 연료채취를 목적으로 조성된 산림을 뜻한다.

두천리, 소광리 조림내역

(단위 : ha, 명)

연도	개소	수종	면적	소요인력
계			566.29	2,265.16
1974	울진.금강송.소광.36-가(산11)	소나무	51.00	204.00
	울진.금강송.소광.36-가(산11)	리기테다	9.00	36.00
1975	울진.북.두천.12-다(산33)	소나무	1.00	4.00
	울진.북.두천.17-가(산72-1)	소나무	5.00	20.00
	울진.북.두천.18-가(산72-1)	소나무	1.00	4.00
1976	울진.금강송.소광.35-가(산11)	낙엽송	0.05	0.20
	울진.금강송.소광.36-가(산11)	낙엽송	0.05	0.20
	울진.금강송.소광.38-다(산11)	낙엽송	0.80	3.20
	울진.금강송.소광.39-나(산1)	낙엽송	0.30	1.20
	울진.금강송.소광.39-다(산1)	낙엽송	0.23	0.92
	울진.금강송.소광.40-라(산29)	낙엽송	0.22	0.88
	울진.금강송.소광.42-나(산29)	낙엽송	0.90	3.60
	울진.금강송.소광.43-가(산29)	낙엽송	0.16	0.64
	울진.금강송.소광.43-나(산29)	낙엽송	0.46	1.84
	울진.금강송.소광.43-라(산29)	낙엽송	0.47	1.88
	울진.금강송.소광.47-나(산29)	낙엽송	0.68	2.72
	울진.금강송.소광.52-다(산157)	낙엽송	0.08	0.32
	울진.금강송.소광.52-나(산157)	낙엽송	8.40	33.60
	울진.금강송.소광.52-사(산157)	낙엽송	2.90	11.60
	울진.북.두천.12-라(산33)	낙엽송		

			25.00	100.00
1977	울진.금강송.소광.37-가(산11)	잣나무	35.0	140.00
	울진.금강송.소광.39-가(산1)	잣나무	4.0	16.00
	울진.금강송.소광.39-나(산1)	잣나무	3.0	12.00
	울진.금강송.소광.47-나(산29)	잣나무	10.0	40.00
	울진.금강송.소광.47-라(산29)	잣나무	24.0	96.00
	울진.금강송.소광.47-바(산29)	잣나무	8.0	32.00
	울진.금강송.소광.52-나(산157)	잣나무	20.0	80.00
	울진.금강송.소광.52-라(산157)	잣나무	10.0	40.00
	울진.북.두천.18-가(산72-1)	잣나무	10.0	40.00
	울진.금강송.소광.26-가(산11)	소나무	0.1	0.28
	울진.금강송.소광.30-나(산11)	소나무	0.3	1.16
1978	울진.북.두천.18-가(산72-1)	소나무	1.0	4.00
	울진.북.두천.18-다(산72-1)	소나무	5.0	20.00
	울진.금강송.소광.39-다(산1)	낙엽송	5.0	20.00
	울진.금강송.소광.45-가(산29)	낙엽송	5.0	20.00
	울진.금강송.소광.47-다(산29)	낙엽송	11.0	44.00
	울진.금강송.소광.51-가(산157)	낙엽송	5.0	20.00
	울진.금강송.소광.52-가(산157)	낙엽송	4.0	16.00
	울진.금강송.소광.52-나(산157)	낙엽송	6.0	24.00
	울진.금강송.소광.32-가(산13)	낙엽송	1.5	5.92
	울진.금강송.소광.33-가(산45)	낙엽송	0.2	0.60
	울진.금강송.소광.38-나(산11)	낙엽송	0.1	0.40



	울진.금강송.소광.40-나(산29)	낙엽송	0.1	0.40
	울진.금강송.소광.40-라(산29)	낙엽송	0.2	0.80
	울진.금강송.소광.42-가(산29)	낙엽송	0.2	0.80
1979	울진.북.두천.18-가(산72-1)	낙엽송	0.8	3.20
	울진.북.두천.18-다(산72-1)	낙엽송	1.2	4.80
	울진.금강송.소광.39-나(산1)	잣나무	0.3	1.20
	울진.금강송.소광.39-다(산1)	잣나무	2.0	8.00
	울진.금강송.소광.42-가(산29)	잣나무	1.0	4.00
	울진.금강송.소광.42-나(산29)	잣나무	0.7	2.80

〈표 4〉 두천리와 소광리 조림내역 (제공: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에 대한 두천과 소광 사람들의 ‘봉사’는 점차 경제적 성격을 띠기에 이르렀다. 원래 조림 초기에는 노임을 받기는커녕 밀가루 소량을 보급 받으며 무급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한다. 마을 남자들 입장에서는 산판으로 돈을 버는 것이 의무적으로 임하는 조림보다 훨씬 나았던 셈이다. 그러나 일당이 3,000원에서 5,000원 등으로 오르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조림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대규모 사방사업과 조림은 단기나마 많은 고용 인원을 필요로 했다.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인근 산촌 사람들은 작업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덕택에 손쉽게 일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었다.

조림 기간이 길어지면 산림간수는 마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방민과 함께 생활했다. 두천리에서 산판꾼과 목상을 상대했던 주막 주인 이옥희씨는 70년대 이후에는 영림서 책임자와 외지에서 온 일꾼을 고객으로 맞이했다고 한다. 또한 소광리 인근의 금강소나무군락지와 같이 마을에서 동떨어진 깊은 숲에 있을 때에는 간이 함바집을 만들어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도 필요했다. 그러나 지역민과 산림간수의 공동생활은 언제나 긴장감을 낳았다. 직원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사법권을 남용해 주민을 위협하는 일이 심심치 않았다.

〈사례3-16: 산림간수의 권력〉

벌목 후 조림, 뒷정리는 다 주민 몫이었어. 나무 떼는 사람이 약자야. 너네 다 나와! 해 가지고. 내 농사짓는 데 바빠도...(산림간수) 닭도 잡아줘야 돼. (조림) 안 나가면 보탕조사 하니까. 산림간수 중에는 너 나무 했으니 네 딸 내놔라 그러면 내놓기도 했어. 안 그럼 감옥 가니까. (박용현, 소광1리)

조림을 나오지 않은 가정은 보복성 보탕조사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림간수를 극진히 대접하고, 행여 눈 밖에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소광리 박용현씨가 말하듯 심한 경우 몰래 나무를 했다는 이유로 딸을 내어 주는 일도 있을 정도였다. 산림간수가 마을에 오는 날이면 닭을 잡아 잔치를 해주고, 두천리 이장은 보탕조사로 적발된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파고다’ 담배를 몰래 넣어주기도 했다. 술한 산판으로 좋은 나무는 모두 반출되는 한편, 주민은 조림 부역과 보탕조사에 시달리니 사실상 좋은 나무는 취할 수도 없을뿐더러 무가치한 잡목을 구하기 위해 “빨갱이보다 무서운” 산림간수의 눈을 피해 산에 올라야 했던 시대였다.

### 3) 국유림 소유권을 둘러싼 경합: 애립계와 오동산계

녹화사업은 법이 명령하는 근대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마을에 공고히 다지는 기제이기도 했다. 전술했듯 1960년대 초반과 그 이전만 해도 국유림에 대한 법적 소유의 관념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 오히려 화전농은 그들 사이에 통용되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일종의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ence)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 초 구상한 산지개혁은 일제 식민지 정부가 실패한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했다. 마을 공동체는 이제 ‘무단’이 아닌, 법적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마을 차원의 산림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다만 국가가 제시한 법의 언어는 여전히 일제의 삼림령을 계승한 형태였다.

산림계에 조림을 명령하거나 국유림을 대부하는 조치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바 있다(최병택 2008: 323). 삼림령 7조에 따라 “조림을 위하

여 국유 삼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에 성공한 때는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국유불요존임야(國有不要存林野)<sup>23)</sup>를 대상으로 조림대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이우연 2010: 312-313). 그러나 최병택(2009: 76-77)에 따르면, 대부자가 식림을 행하고 조선 총독부가 이를 감독해 식림이 성공하면 소유권을 양도해야하지만, 실제로 양도가 이뤄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조림대부 대상지인 불요존림은 해당 국유림에 특별한 연고자가 없는 제1종 불요존림과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을 제2종 불요존림으로 나뉘었다<sup>24)</sup>. 이 중 후자의 연고자가 조림대부를 신청할 시에는 원래 해당 임야의 주인이기도 했던 연고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해야 하나, 조림 성공 후에도 국유림으로 존치되는 일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림대부제도의 형식과 내용이 산림법 입안 시 그대로 계승되었다(배재수 외 2001: 189). 무상양여의 주체가 조선 총독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대체된 것 외엔, 조문도 동일했다. 본 절에서 다룰 애림계와 오동산계 역시 이 제도를 활용해 조림대부지를 마을의 공용림으로 전유하고자 했다. 국유림 내에서 자유롭게 자원을 채취하고 화전지를 만든 과거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즉 제도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임야의 소유에 대한 근대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의 전략이기도 했다. 1960년대 이전, 마을 내부의 사회적 원리와 국가의 법 원리가 충돌했다면, 조림대부제도 참여는 자연을 전유하는 데 있어 마을의 규칙이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됨을 보여준다. 울진군 평해읍과 근남면, 북면 소속의 몇몇 마을도 이에 호응해, 조림에 성공하면 산림을 환원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보호, 관리에 나섰다.<sup>25)</sup>

두천2리의 애림계는 해방과 녹화사업을 기점으로 두 차례 조직된 바 있다. 해방 후 발족한 첫 애림계는 당시 일제 소유의 적산(敵産)<sup>26)</sup>을 관리하기

23) 조림대부, 매각, 교환 등에 의해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임야

24) 1908년 〈삼림법〉 19조에 의한 소유권 신고를 제출하지 않아 국유지가 된 곳 등이 연고자가 없는 국유림인 제2종 불요존림에 해당한다(최병택 2009: 79).

25) 본 장에서 다루는 오동산계는 울진군 평해읍 소속 산림계로, 연구 대상지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천2리 애림계와 대부림 관련 소송을 함께 진행했고, 국유림을 둘러싼 주민과 국가의 경합 과정을 유의미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장에서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6) 두천과 소광 주민들은 일제가 소유했던 산을 ‘적산’이라 지칭했다.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적산은 본래 동유림(洞有林), 즉 마을이 공유하는 촌락공유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제가 소유했던 토지의 흔적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두천2리 국유림 중 일부의 토지소유자 연혁을 보면, 1922년에는 사정<sup>27)</sup> 임야였으나, 1965년 소유권보존을 이유로 소유권이 변동된 임야가 있다. 이 토지는 1908년 법률 제 1호 구 산림법 제 19조의 규정<sup>28)</sup>에 의해, 부락 소유림이었으나 지적을 제출하지 않아 1922년도에 국유림으로 귀속되고 말았다.

1908년의 임야조사사업당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임야는 모두 국유로 편입된다는 규정 때문에(최병택 2009: 48) 당시 한반도는 넓은 면적의 산림이 국유로 편입되었다. 실제로 1911년까지 임야 소유권 신고가 이뤄졌는데, 면적으로 보면 조선 내 전체 임야 1,600만 정보 가운데 신고 임야는 220만 정보에 불과했다. 소유권 신고에 필요한 지적도를 의무자 본인이 측량 및 작성해야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꺼렸고, 소유권 신고 이후에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까닭이다(ibid.: 49).

두천2리의 전용수씨도 “측량할 때 세금 무서워서 신고 많이 못했었지”라며 동유림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던 마을 사정을 전했다. 결국 해방 후 미등기상태가 된 산림은 1965년에 다시 ‘소유권보존’이라는 변동사유에 의해 국유로 등기를 마쳤다. 국가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922년 국유림 귀속이라는 기록을 통해 인정받은 셈이므로 새롭게 등기를 하여 식민지 정부가 귀속시킨 국유림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물론 1922년 당시에는 신고 되지 않은 전 임야를 국유림으로 편입시키자 전국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일제는 1926년 “조선 특별 연고 산림양여령”을 제정했고, 울진군내 여러 산림계는 특별연고자라는 지위로 산림자원을 무상 양여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부락 소유림의 특별연고자는 개인이 아닌 부락이었으나 당시 부락은 등기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부(部)”, “면(面)”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하고 “면유림”으로 명의 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27)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따른 토지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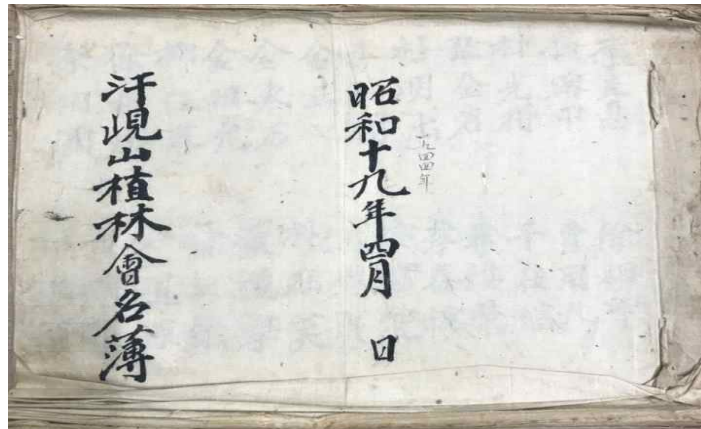
28) “삼림 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해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

사실상 국가 소유의 임야로 기재되어 마을 주민의 공동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기초가 1961년 산림법 제정 시 그대로 이어져, 불유존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자의 무상양여 가능성이 열렸다. 군사정권의 산림법 개정 이후, 두천2리는 초기에는 마을 원로를 주축으로 5명이 애림계를 재조직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두 번째 애림계였다. 이 조직이 조림한 산림은 모두 1965년 12월 ‘소유권보존’ 사유에 따라 미등기 지대였던 임야를 국유림 자격으로 등기를 마친 곳이었다. 때문에 1965년 이전 이 산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는 점은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다. 일제가 시도한 소유권의 분명한 분할은 해방 후 혼란으로 좌절된 듯 보였으나, 법적 소유권자를 명확히 하는 ‘등기’라는 제도적 절차가 실효성을 갖추면서 다시 국유와 사유의 경계를 획정했다. 일제에 의해 한 차례 소거되었던 마을 차원의 산림 ‘공유권’ 또한, 국유인 조림대부지에서의 주민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게 되었다.

애림계 초기 구성원들은 마을 주민을 점점 애림계원으로 포섭해 입목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 액수를 내고 가입하는 일을 권했다. 애림계는 오리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등 땀감에 유용한 수종과 낙엽송을 특히 많이 심었고, 소나무도 일부 심었다고 한다. 밤나무 단지도 일부 조성했으나 관리 부실로 지금은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마을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림과 산불감시, 사방(砂防)이 지속된 바, 향후 주민이 일군 조림지를 마을 산으로 넘겨받기 위한 목적이 컸다.

울진군 평해읍 평해1,2,3리, 오곡1리, 수곡리, 거일2리, 상달 1,2리 일곱 마을이 이룬 오동산계의 연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족할 당시에는 행정구역상 다섯 개 마을이 연합해 대부림 조림에 나섰다. 현재는 이름을 바꿔 다섯 개 마을이 관리하던 산이라 하여 오동산계라 부르지만, 한현산식림회명부(汗峴山植林會名簿)가 본래의 조직명이었다. 해당 산림의 주요 골짜기인 한티재를 한문화하여 ‘한현산’이라 부르던 것을 현재 오동산계 계장이 개명한 것이다.



〈그림 17〉 한현산식림회명부 © 장예지

현 오동산계 계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계가 조림한 조림대부지는 본래 조선 시대부터 해당 마을에 거주했던 부락민들의 공동 소유 동유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동유림에 대한 세금을 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동유림이 국유림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1926년의 조선특별연고산림양여령에 의거해 1933년 당시 산림계원이 대부를 받아 임야를 관리했고, 1959년 지금의 오동산계가 해방 후, 대부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조림대부계약을 맺었다. 이는 1961년 산림법 제정으로 시행된 조림대부제도보다 빠른 시기이지만, 50년대 대부림 관련 법령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일제하에서 맺은 대부계약의 연속선이 해방 후에도 온존할 가능성만 추측해 볼 수 있다. 1959년 당시에도 오동산계는 입목대를 치르고 산림청에서 묘목을 지원받아 식수했다. 오동산계는 특별연고자로서, 일정 시의 “조선국 유산림 미간지 및 산림 산물 특별처분령”(1962년 산림법 제정 당시까지 시행)에 의해 대부료는 무료였으나 나무 값은 계원이 경비를 거둬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특별처분령에 의해 1933년부터 1959년에 이르는 대부림 조림이 나림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오동산계 계원인 다섯 마을 주민 역시, 대부림을 무상양여 받으면 임산물을 자유롭게 채취하고,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식민지배 이전, 자신의 선대들이 향유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산림 자원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두 산림계의 기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산림청

은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를 통한 민유화 방안을 1970년 폐지했고, 그 이전에 조림대부를 받은 사람들이 무상양여 신청을 했을 경우, 무상양여 여부를 산림청장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배재수 외 2001: 191-192).

네팅(Netting)은 스위스 협곡 지대의 퇴르벨(Törbel) 부락이 고산 지대를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연구해, 이 지역 공동체 소유의 특성을 밝혔다(Netting 1972; Netting 1976). 공동체 소유는 “특정 형태의 자원에 대하여 전체 공동체 성원들에게 자원이 파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존 장치를 엄수하도록 강제하며, 이 자원이 다수 구성원들에게 활용되어 최적의 산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Netting 1976: 145; 오스트롬 2010[1990]: 130에서 재인용). 산림을 사점화려는 양반 및 관료 계급으로부터 ‘공동’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송계나 마을 재산 산림은 모두 공동체적 소유를 토대로 했다. 사점 세력 증가는 곧 산림 이용에 대한 배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공동체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동 소유는 네팅이 말한 공동체 소유의 가치와도 상통한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임야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 정의 내렸고, 조선인들이 ‘근대적 소유권’ 관념을 이해하지 못해 ‘타인’의 소유지를 함부로 이용해 산림 황폐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최병택 2009: 14). 식민자의 시각에서 피식민국 고유의 관습은 인정되지 못했고, 공용림을 ‘무법지대’라 판단해, ‘근대적 법’을 수단으로 제국의 의지에 따라 산림을 전유하려 한 것이다.

1961년 조림대부제 실시 이후 국유림 무상 양여 규정을 폐지한 군부정권의 조치 역시 국가의 적극적 전유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애림계와 오동산계는 국가 산림 정책의 수혜를 입고자 발족하긴 했으나, 단순히 녹화를 위한 동원 대상은 아니었다. 마을 주민들 역시 대부림 제도를 활용해 마을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림청장은 ‘자유재량’에 따라 애림산계와 오동산계의 완전한 공동체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1985년부터 애림계원은 다른 마을의 피해 산림계원들과 자비를 지출해가며 수 년 간 소송에 나섰으나 결국 패소하고 만다.

제5공화국 집권여당이던 민정당 대표위원에게 보낸 진정서에 따르면,

울진면 읍내리나 상산 2리 산림계 등은 조립대부림을 무상양여 받은 선례가 있으나 두천 2리를 포함한 7개 산림계의 뜻은 좌절되었다. 1991년 최종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은 네 가지 이유로 오동산계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먼저 해당 임야가 조선조부터 선대들이 소유한 동유림이었는데에 대한 증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밖의 다른 증거가 없는데다 1908년부터 1934년 사이 일제가 임야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당시, 해당 임야는 연고자가 없는 임야로 확인되므로 이미 국유로 확정되었다. 또 조립 성공 시 무상 양여한다는 조건에 대해, 일부 증언의 효력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부족도 근거로 들었다. 대부산림의 무상양여 여부는 산림청장이 자유재량권을 갖기 때문에 조립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양여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도 명시했다. 온정, 기성 등 울진군내 3개 산림계는 무상 양여 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오동산계 임야를 무상양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논리다.

두 산림계의 패소를 확정하는 근거는 결국 증거 및 증언 불충분과 산림청장의 자유재량에 따른 결정이라는 데 있었다. 해당 대부림이 옛 마을 재산이었다는 오동산계의 주장이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문서화된 기록이 필요했다. 선대부터 이어져 오는 산에 대한 관습적인 소유의 ‘의식’이 법의 언어로 번역될 수는 없었다. 반면 문서화되기 어려운 산림청장의 자유재량은 법의 규정에 의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유림의 최종적 소유권을 두고 경합하는 국가와 마을공동체 사이에서, 법정은 국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렇게 보존된 국유림의 존재는 곧 국가가 산림을 전유하는 데 자유재량을 발휘하기 위한 영역이 보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지점에서 기존의 관습으로부터 법이 창출된다는 법의 이중적 제도화(Bohannon 1965)에는 균열이 발생한다. 십여 년 넘게 진행된 재판은 피로감을 주었고, 이미 금전적 손실을 본 주민들은 재판을 포기했다. 법적으로 오동산에 대한 과거의 자치규약 및 문서화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집합의식’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분수림<sup>29)</sup>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그들

---

29) 산림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분수를 목적으로 산림소유자(국가 또는 개인)와 시·읍·면



의 피해를 보전해 주었다. 1980년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해, 조림대부를 분수림으로 전환하여 산림에서 나는 수익을 주민이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배재수 외 2001: 192).

두천 2리는 애림계원이 각자 입목대 비용을 지출해 무상 노동한 것은 인정받아 해당 산림의 70%에 해당하는 입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무가 심어진 ‘땅’에 대한 권리는 얻지 못했으나 주민이 손수 키운 나무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취하는 셈이었다. 이에 전 국유림의 벌목이 금지되었음에도 애림계원은 조림대부림에서 나는 자원을 독점적으로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들어 애림계 회의 끝에 나무에 대한 소유권도 산림청에게 이전해, 그 보상으로 약 2억여 원을 받아 애림계원 모두에게 균등분배 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애림계는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고 한다. 오동산계는 임지의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면 입목만이라도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하였고, 임지는 여전히 국유림 소속이지만 계원들이 심은 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았다. 이후 2003년 조림대부지 입목 매도로 산림청이 오동산계에 나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뒤 임지와 입목은 모두 국유로 넘어갔다.

소유는 지속성을 담지한다. 식민지배 이전 한현산(오동산계가 관리하던 산림)이 오랜 세월 해당 마을의 소유였듯, 마을 재산으로서 공유되는 산림은 마을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배병일 2016: 286). 하지만 당시 산림청은 두 산림계 계원이 갖는 ‘나무에 대한 소유권’도 국유로 이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마을과의 협의를 시도했고, 계원들 또한 여기에 응했다.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입목의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실리에 따른 선택이기도 했다. 마을은 공동 소유에 대한 권리를 계원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교환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임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한 것이다.

---

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조림을 실시한 국유림 또는 민유림.

### 3. 경관의 분리가 낳은 새로운 도덕

#### 1) ‘자연 경관’과 ‘마을 경관’의 분리



〈그림 18〉 마을과 산림의 경관 © 장예지

경관은 문화적 과정으로 나타난다(Ingold 1994: 738).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자연 경관’ 역시, 외적 요인이 배제된 순수한 자연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화전정리사업과 연이은 산림녹화사업은 기존 산촌 경관을 ‘마을’과 ‘산림’의 경관으로 분할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특히 두천과 소광의 경우에는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 1968-69년의 취약지 대책사업이 더해져 화전민의 집단적인 대규모 이동이 활발했다. 화전정리사업 초기와 달리, 1970년대에 이르면 사업 시행 방식이 보다 정교해지고, 행정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그 결과 예상시기보다 더 빨리 전국적으로 화전정리를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화전지가 조림지로 변함과 동시에 터전을 잃은 화전민이 대거 농촌마을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음을 의미한다.

자연경관은 사람들이 산림을 비우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새롭게 창안되었다. 골짜기 곳곳에 위치했던 자연부락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면서 쇠퇴했고, 가구 수가 많은 평지를 중심으로 마을이 재편됐다. 평야 인근으로 논밭을 사서 내려오거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아예 마을을 떠나면서 산과 마을은 점차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림녹화는 이러한 분리의 기저에서 새로운 ‘발전경관’을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진종현(2016)은 녹화사업이 목표하는 ‘푸른 산’의 이미지를 ‘발전의 내셔널리즘’을 집약하는 상징경관이라 보았다. 실제 치산녹화10년계획의 실적은 조림과 육림, 사방 면적 및 양묘 수량 등 수치화된 형태로 표현되어, 발전하는 국가의 일면을 표상했다. 무엇보다 울창하고 푸른 산의 모습은 발전과 근대화, 선진국에 다가가는 미래상을 보여주었다(진종현 2016: 543). 산림 내부에서의 거주와 벌목, 방화, 입산 등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흔적을 지우고 나무를 심은 국가의 프로젝트가 함의하는 ‘발전’의 의미는 곧 마을 주민의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데서 비롯했다. 자유롭게 산에 오간 생활은 부정되었고, 만약 이를 지속할 시에는 산림 공무원과 경찰의 제재를 받게 되는 ‘억압적 법(repressive law)’의 원리가 발전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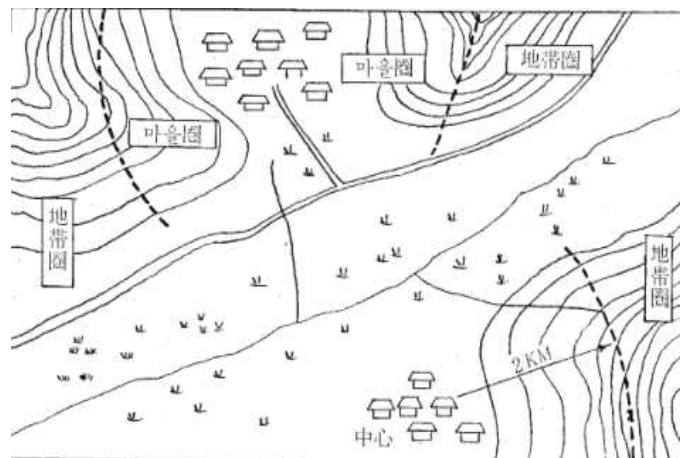
따라서 두 산촌의 경관의 분할은 법에 힘입은 발전 담론이 두천과 소광리에 스며든 결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진보와 합리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내재한 서구식 계몽주의적 발전 담론은 원시와 문명, 전통과 근대, 자연과 문화 등의 이분법을 추동한다(O'Brien 2002: 490-491). 박정희 정권의 산림녹화사업 역시 원시적이고 황폐화가 심한 오지의 산림을 강력한 국가가 나서 문명화, 근대화된 형태, 즉 울창하고 푸른 숲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데 방점을 둔다.

이로써 정립되는 사람이 사는 마을과 동식물이 사는 숲의 경계는 공동체와 그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로 작동한다. 안승택·이경묵(2015)은 ‘경계로서의 공동체’ 개념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상징적 준거점으로서 경계를 사고한다(안승택·이경묵 2015: 404). 속성수 묘목이 들어찬 산은 이제 마을과의 접경에서 산림계를 포함한 각종 자치 기구의 활동과 새마을 운동이 벌어지는 마을공동체와 구분되고, 마을의 존재를 실체화한다.

그러나 마을과 바로 면하는 산을 ‘바깥’이라 규정할 수만은 없다. 완전한

안도, 밖도 아닌 공동체 ‘외곽의 경계지대’는 공동체 조직의 일부로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영역을 이룬다(ibid.:406). 녹화사업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산림 또한 공동체의 경계를 드러내는 외곽의 경계지대라 할 수 있다. 대표적 예가 두천2리의 애림계가 관리했던 산림이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촌락공용림의 관습이 대부조림이라는 ‘법’으로 제도화되면서 애림계가 가꿨던 산은 두천2리에 ‘속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때 두천2리 애림계원이 산림과 맺는 관계는 종전의 생활 세계이자, 마을의 ‘내부’였던 장소가 아니라, 마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공간으로 규정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973년 생산된 국토녹화10개년계획에 따르면, 산지 경제권 조성은 산림 녹화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즉 모든 산지를 마을권과 지대권으로 구분하여, 마을 주민이 자원화할 수 있는 마을권 산지를 주민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9〉 산림의 분할 (출처: 국토녹화10개년계획)

〈그림 19〉에서 볼 수 있듯 ‘마을권 산지’는 거주지와 농경지가 밀집해 있는 마을의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 ‘권역’의 존재로 인해 마을의 ‘중심부’가 식별될 수 있었다. 이에 내무부는 산림 관리 주체의 조립 권을 설정하는가운데 마을권 산지를 마을 ‘중심’의 2km내외로 지정해, 그 책임권자를 주민 일반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곳은 언제나 마을 산림계원의 관계 하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깥’에 있다고 보기도 힘든 경계지대에 위

치한다. 이는 또한 사회적 공간과 자연의 공간의 경계 사이, 둘 중 하나로 포섭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쩡(Tsing 2005)이 제시한 ‘틈’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분명 녹화사업으로 경관은 두 층위로 구분되나,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종의 상호작용마저 단절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치산녹화계획의 중점 시책에는 입산 통제, 농촌연료 대책, 목재수급계획 및 국민식수 등이 있다(배재수 외 2007: 22). 이 중 ‘입산 통제’는 경관의 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의 금기행위다. 조림지가 대대적으로 생겨나면서, ‘입산 금지’의 기조도 본격화됐다. 어린 나무의 성장을 도모하고 화전을 막기 위해 주민이 필요한 나무를 베어가는 것을 철저히 억제하는 ‘제도적’ 움직임이 강화된 까닭이다. 사실 마을에서 조림지 입산금지는 가벼운 홍보에 그쳤지만, 마을 주민도 다른 생계 수단이 생기면서 굳이 어린 나무가 있는 곳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이에 경관의 분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 1970년대까지도 나무는 생활에 없어서 안 될 절대적 자원이었다. 때문에 평일엔 조림을 하고, 공무원이 쉬는 일요일에 감시를 피해 나무를 하러 가는 일들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점차 산에 ‘몰래’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수 세월에 걸쳐 사람들이 쌓아 놓은 흔적은 그만큼 쌓여간 낙엽과 잡목들에 의해 사라져갔다. 고개를 오가는 주요 교통로였던 보부상길도 공고하던 길의 형태를 점차 잃어가며 과거를 회상하는 옛길이 된 것은 물론, 화전지와 독가촌, 소를 먹이러 오가던 수많은 샛길이 새로 자라는 풀 나무 아래로 모습을 숨겼다. 이처럼 많은 것이 사라져가던 와중에도 국가가 승인한 길, 즉 산림청에서 사용하는 임도만이 명맥을 유지했다. 사방과 조림을 용이하게 하고, 이후의 산림자원을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산림공무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임도는 오히려 경관을 분할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두천과 소광의 주민이 국가의 명령에 적극 순응하여 모든 길이 사라져가도록 둔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송이버섯 수출로, 울진의 작은 마을에도 송이 채취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었다. 여름과 가을철이면 사람들은 국가가 승인한 길과 입산금지라는 제도적 망을 피해, 송이 따는 일에 나섰다. 그러면서 종전의 샛길과는 또 다른 길이 생겼다. 한 철이

지나면 없어질 길이였지만, 매해 지워졌다 생기길 반복하게 될 길이였다. 또한 ‘합법적으로’ 산지 내부 농토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주민 몇몇은 힘이 닿는 한 농사를 짓기 위해 다시 골짜기를 올랐다. 경관이 나뉜다 해도, 그것이 생활권의 분리까지 일괄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었으며, 마을 경관의 일부인 주민은 계속해서 산으로 들어가 그 곳과 마을을 매개했다.

## 2) 푸른 숲이 상징하는 선진국의 도덕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추진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새마을 운동을 통한 조림애국사상의 생활화로 녹화혁명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조림-애국-사상이라는 합성어는 당시 녹화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새롭게 등장한 군사 정권 아래, 나무를 심는 온 국민의 행위가 곧 ‘애국’이었고, 조림애국의 ‘사상’은 일상화된 식수(植樹)에 따른 어린 나무의 모습으로 현현(顯現)한다. 당시 내무부 장관 김현옥은 장관훈시로 산림녹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지자체와 경찰, 산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그가 내세운 가치도 애국이었다.

여러분, 국토녹화에 대한 애절한 우리의 호소는 일찍이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공무원들에게 교시하신 집념이고 애국 애정이면서 생애의 경륜이기도 합니다. ... (중략) ... 다 같이 희망과 더불어 나무, 나무와 더불어 조국의 꿈을 크게 키워 나가는 이 성스러운 대열에 낙오 없기를 바라고, 애국가(愛國歌)를 산에 심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愛國歌를 산에 심는 엄청난 유신의 열사로서, 새마을의 선봉으로서, 또 선택된 민족의 간부로서 여러분들은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현옥, 1973년 3월 16일 <푸른 유신, 치산녹화>

애국사상의 지향은 ‘부강한 국가’에 가 닿았다. 푸른 숲은 곧 ‘강대국’의 이미지를 표상한다. 근대화가 온 나라의 화두였던 1970년대 산림녹화기, 강대국의 의미는 경제적 풍요라는 목적 달성과 함께 자연을 보호하는 도덕을 정립하는 것 모두를 포괄했다. 무엇보다 울창하고 푸른 숲의 이미지는 ‘풍요’

를 표상하기에 적합한 부의 상징이었다.

〈사례3-17: 산림녹화의 가치〉

산림녹화 사업 자체는 성공한 거지. 치산녹화는 산림청의 가장 큰 업적으로 본 거야. 험거벗은 산을 그 빠른 시간 내에 한 거니까 대성공이지...선진국 중에 녹화 안 된 데가 없어. 잘 사는 나라는 산이 녹화가 다 됐지. (김원호, 구 산림과 과장)

1970년대 울진군 산림과에서 군유림과 사유림 녹화 업무를 진두지휘한 김원호씨는 치산녹화의 성공의 의미를 곧 빠른 시간 내에 민둥산을 나무로 뒤덮었다는 데서 찾았다. 한정된 종류의 속성수를 녹화사업 초기부터 도입하여, 일단 푸른 녹색을 온 산에 채색해 시각적 효과를 부각하는 것이었다. 험거벗은 산이 가난했던 삶을 떠오르게 한다면, 산의 ‘푸름’은 군사정권의 핵심 목표인 경제적 풍요를 연상시켰다. 이런 점에서 웅장한 산림 경관은 매우 적절한 상징물이었다.

산림 자원을 통한 수익 극대화는 실제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특정 유실수와 주거 및 연료용 목재를 ‘경제수’라 지칭한 것만 보아도, 70년대 조림 목적은 사실상 ‘경제 조림’에 맞닿았다. 하지만 복병은 나무의 생장 기간에 있었다. 15-20년 이상을 키워야 상품 가치를 갖는 목재의 특성상, 시간은 산림 자원의 가치가 매겨지는 데 중요한 변수였다. 70년대 낙엽송은 전봇대나 건축용 자재 등으로 소비되었기에 상품적 가치가 높았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면서 시대 흐름이 바뀌었고, 더 이상 나무 전봇대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 낙엽송의 상품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다. 최근 들어서 건설자재로 쓰이면서 소비가 다시 활성화되었지만, 주민들은 조림지 다수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에 비해 여전히 그 쓸모가 많지는 않다고 한다.

마을 내부에서 막대한 조림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懷疑)가 있다 해도, 애림(愛林) 사상은 녹화사업의 도덕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 용이했다. 두천2리의 산림계 이름이 애림계라는 데서 알 수 있듯, 산림계 활동의 의의는 주민이 나서서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키고, 가꾸는 행위로부터 발현된다. 진종현(2016)은 이를 녹화사업이 창출한 ‘도덕지리적 경

관'이라 보았다. 과거 화전민은 산림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리며 불법적 존재가 되었고, 보탕조사로 산의 나무를 마을로 가져온 주민에게 엄벌을 가했다. 화전과 벌목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방식'에서 벗어난 '일탈적 행위'로 간주되어 사회공동체적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Matless 1998: 62; 진종현 2016: 543-544에서 재인용). 이 때 사회공동체적 합의는 두 마을에서 법리에 따른 강력한 처벌에 의해 강화되었다. 녹화사업의 전면에 나선 애림사상은 자연을 향한 도덕을 강조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법이 자연에 가하는 인간 행위에 대한 새로운 도덕을 주조한 것이다.

뒤르켐은 도덕을 제재(sanction)에 의해 매개되는 종합명제로서의 행위규칙이라 보았다(Durkheim 1906: 19-21; 김도현b 2012: 255에서 재인용). 즉 사회적으로 마련된 약속을 어길 시 가해지는 제재가 매개하는 규칙이 도덕이다. 또한 법은 사회의 연대성을 드러내주는 외적 징표로, 뒤르켐에게 연대 개념은 사회의 '도덕적 통합'이다(김도현b 2012: 247-251). 그의 논의에 따르면, 녹화의 법은 제재에 의해 실현되는 도덕적 통합에 기여한다.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률은 기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만이 추구한 유일한 가치가 아니었다. 왕조시대에 이르기까지, 통치자는 다양한 목적으로 치산치수(治山治水)에 나섰고, 혈벗은 산을 복구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재난과 전쟁, 빈곤은 국가의 노력을 무력화했다. 도덕은 십사리 마을에 자리 잡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성공'을 자평하는 산림녹화사업의 기저에는 강력한 제재의 원리가 움직였다. 농번기 노동을 포기하면서까지 조림에 나서야 했던 이유는, 이를 어겼을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두천과 소광의 각 가정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규칙적으로 조림에 동원되면서 이러한 도덕을 강제로 실천하고, 자발적으로 내면화했다.

#### 〈사례3-18: 산림녹화의 도덕〉

어떻게 보면 불이 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불이 나면 먹을 게 많아. (나무를) 가꾸면 좋은 점도 있긴 있지. 산이 푸르잖아. 산이 푸르러야 사람이 산다니까. 큰 틀에서 생각하면 엄청 커. 숲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어. '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 숲이 없어도 생명체가 없고. (전민식, 두천1리)



전민식씨가 내면화한 녹화의 도덕은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추상적 의미로 표현된다. 사실 불이 나서 나무가 타면, 그 재가 좋은 비료 역할을 하여 다음 해 봄이면 많은 나물을 캘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설명처럼 산불의 장점은 생계의 문제로 직결되어 생활에 보다 밀착해 있고, 그래서 구체적이다. 하지만 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은 ‘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생명을 존재케 하므로 중요하다. 생계라는 현실과 생명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사람들은 후자의 도덕적 상징을 받아들였다. 도덕의 ‘수행자’였던 주민은 오늘날 산림마을 도덕의 ‘수호자’로 변모했다.

대표적인 수호 행위가 산불감시활동이었다. 1970년대의 윤번순산제는 모든 마을 주민이 정해진 기간 산불을 감시하는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였다. 다만 도덕의 의무는 마을 차원의 강제 규제를 전제해, 감시 활동은 마을 공동체를 한 단위로 이뤄졌다. 녹화의 성공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집단이 책임을 공유하는 체제를 기초로 했다. 뒤르켐이 말한 도덕적 통합은 두천과 소광에서 강한 집단적 책임을 통해 가능했다.

이는 또한 산림의 교란 요소 중 하나로서, 생태계에 변화를 추동하는 자연의 불이 사회적 감시, 금지 대상으로 변모함을 의미한다. 농토를 위해 자발적으로, 혹은 실수로 불을 내던 사람은 이제 주기적으로 완장을 차고 산불 감시 모자를 쓴 채, 산의 ‘내부’가 아닌 산의 ‘바깥’인 전망대에서 광활한 산림을 조망하며 내부의 불을 잡아내는 존재로 화한다. 이는 국가가 자연을 바라보는 위치와도 상통한다. 보다 높은 곳에서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관리 영역을 썬하는 국가의 시선과 산불을 감시하는 전망대 위 주민의 시야각이 일치하는 것이다. 언제나 산림 내부에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회적 장소를 창안하던 사람들은 산과 가장 가깝고, 또 그곳에 대한 지식을 체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산림 도덕이라는 가치를 생산 및 지속하는 최적의 대상이었다.

## IV. '녹색 산', 그 축적의 경관

본 장에서는 오늘날 두천과 소광을 따라 펼쳐진 산림에 축적된 경관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경관은 역사성을 내재한다. 경관은 중대한 사회적 사건의 역사가 되고, 그러한 사건들은 장소에 깃들여 사람들 사이에 회자 된다(Myers 1986: 68; Ingold 2000: 53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시적이지만 일상적인 행위, 그리고 '초역사적'인 선대 조상들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구성된다(Ibid.: 같은 쪽). 대대적인 녹화사업이 종료되고, 완전한 울창함을 자랑하는 울진의 소나무 숲 또한 화전과 벌목, 채집 등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산림 생태계의 변화 작용이 얹혀 있는 경관을 지닌다.

숲을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산림 경관을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수십 년 간 송이로 높은 수익을 얻은 마을 주민은 임상(林相)<sup>30)</sup>과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해가는 산림 경관의 '내부'에서 점차 감소하는 송이 생산량을 걱정한다. 또한 2000년대 초반 국민에게 개방된 뒤부터 주민의 송이산은 금강소나무숲길로 불리기 시작했다. 다수가 '외지인'인 탐방객은 '자연'의 생명력에 감탄하고, 500년 수령의 금강소나무에 경외를 표한다. 이 과정에서 숲해설사는 농경과 간척 출몰, 산판의 현장 등, 산에 자리했던 수많은 과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동일한 장소임에도 숲길을 찾는 사람들과 주민은 상이한 시각으로 산림을 바라보며 숲에 들어간다. 이는 산림과 탐방객, 주민이 맺는 '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경관의 다층성은 똑같은 대상을 향해 붙여진 숲길과 송이산이라는 두 이름에서도 드러난다. 본 장에서는 오늘날 산림청과 탐방객 및 주민이 산림을 어떤 방식으로 전유 또는 향유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여러 주체가 산림과 맺는 관계의 성격을 고찰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전 논의에서 다룬 과거의 다양한 산림 전유 양태가 현재의 경관에서 표상되는 양상은 시각적 재현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흩어졌다 모이는 이야기와 삶 자체를 보여준다.

---

30) 숲의 생긴 모습

## 1. 소나무 숲 마을의 자랑 ‘송이’

### 1) ‘상품’이 된 송이

〈사례4-1: 값이 없던 송이〉

옛날에는 집집마다 소가 있어. 농사를 지으려고 소를 한 마리씩 다 먹였는데, 옛날엔 소 먹이러 가면 송이가 있어. 옛날엔 송이 값이 없으니 그까짓 거 하고 소가 먹지. 싸리나무 가지에 꼽아서 집에서 먹기도 했지. (최상현, 두천1리)

1970년, 송이(松栂, *Tricholoma matsutake*)가 일본으로 수출되기 전까지 이 버섯은 산촌민의 흔한 찬거리 중 하나였다. 한 두릅에 20개를 엮어 울진장에 조금씩 파는 일도 있었으나 귀한 대접을 받는 산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 수출 확대로 전국적으로 송이 생산량이 급증했다. 소광과 두천 사람들도 점차 송이의 ‘상품’ 가치에 눈떴다. 가난한 시절 소나무 숲이 내주던 먹을거리 중 하나였던 송이버섯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소득을 가져다주는 ‘고부가가치 임산물’로 변모한 것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송이의 인기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원폭피해자에게 송이가 특효라 하여, 그들이 주로 송이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은 힘들지만, 일본에서 송이가 매우 고귀한 가치를 갖는 것은 분명했다. 상류층의 특권을 상징한 송이는 가을철 풍미의 대표격으로 인정받았고, 많은 문학 작품에서 송이의 ‘향’을 칭송했다(Tsing 2015: 6-7). 하지만 1905년 나무 조직 내에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재선충이 처음 발견된 뒤,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일본의 소나무는 전멸 위기에 처했다<sup>31)</sup>(매일신문 2017년 2월 20일). 소나무 사멸은 소나무 뿌리와 공생하는 송이의 생산량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시야를 외부로 돌렸고,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송이를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발돋움했다.

31) 매일신문, 2017년 2월 20일, “[재선충을 막아라]〈상〉 경북 소나무 위기”

한국은 일본의 송이 수입 증가 추세에 발맞춰 1970년부터 적극적인 송이 수출에 나섰다. 관련 법령은 수출 집중 기조를 잘 보여준다. 산림법 54조 임산물사용제한고시에 의거해 송이는 국내 유통이 금지되는 품목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전량 수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송이 수집은 산림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지역민은 송이 채취만 담당할 뿐 판매에 개입할 수 없었다. 1995년까지 수출우선정책에 따라 일정 분량은 반드시 수출되어야 했으며 2006년이 되어서야 사용제한이 해제되고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해졌다(대구일보 2015년 4월 22일).<sup>32)</sup> 그 이전만 해도 유통 전 과정을 국가가 통제해 울진군내에서 생산된 송이는 산림조합이 전량을 수집하기 전까지 지역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오늘날의 송이 유통은 국가의 통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져 판매경로도 다양해졌다. 물론 마을 산림계가 채집한 송이를 산림조합에 넘기는 기존의 유통 통로는 현재까지 주요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때 조합이 책정하는 입찰단가와 송이등급은 지역 내 조합마다 다른데, 산림조합 직원 이현종씨에 따르면, 경북 내에서는 송이 등급 선정 기준이 봉화, 울진, 영덕 순으로 까다롭다고 한다. 현재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전체 송이 중 평균 20~30%가 조합을 통해 유통된다.



〈그림 20〉 송이의 등급

(출처: 산림조합 홈페이지 <http://uljin.sanrimjohap.co.kr>)

32) 대구일보, 2015년 4월 22일, “솔 향기 이끄는 대로 거닐다 보면 소나무 밑동 ‘황금빛 보물’ 영덕 송이 만난다”

송이 수출 규제 완화 및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 조정은 모두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된 송이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1970년대의 전반적인 수출우선주의 정책 기조 가운데 송이는 고가의 수출 품목 중 하나였으므로 국내 유통을 ‘금지’한 셈이었다. 규제가 풀린 계기도 국민 경제력 상승과 연결되었다. 정부는 판매의 ‘독점자’가 되어, 자국과 타국의 구분을 막론하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높은 값을 얻을 수 있는 편을 택해, 역설적인 방식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산판이 한창이던 당시, 소나무 감시초소를 설치해 국가의 승인을 받은 소나무만을 마을 밖으로 내보냈듯 소나무와 공생하던 송이 역시 국가라는 최종권자의 허가 하에 오직 ‘일본’으로 수출된 것이다.

현재는 마을과 주민 차원에서 송이를 판매하는 것도 활발한 추세다. 송이를 사기 위해 외부인이 마을로 직접 찾아오는 일도 많다. 판매경로의 다변화는 마을 내부 조직의 구성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임산물사용제한 해제 전에는 원칙적으로 마을별 송이 생산량을 조합이 총괄적으로 관리했다. 산림계는 마을 차원에서 조합, 국유림관리소와의 소통은 물론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주민 자치 조직이다. 그런데 조합 외의 판매처가 많아지면서 유통 경로의 선택 방법 역시 개인화되는 경향이 생겼다. 마을 내에서 송이 생산 전반에 영향력을 가한 산림계의 입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국유림 내 송이 채취는 산림 구간별로 구역을 나눠 1~5인 이내로 팀을 구성해 이뤄지는데, 이 때 생산되는 송이도 이제는 각 팀별로 거래처를 결정해 판매에 나선다. 가령 소광1리는 소수의 인원만이 송이 채취에 참여해 각 구역 당 한 명만이 입산해 송이를 판다. 때문에 이후의 판매 방식도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과거에는 각 구역에서 나온 송이를 산림계가 모두 취합했으나 이제는 조합에 팔 송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권리는 각 구역 구성원이 취하게 되면서 산림계의 자체 권한은 줄어든 것이다.

국가는 송이 채취 및 수출에 있어 무소불위의 독점권을 가졌고, 각 부락별 산림계는 생산량 전체를 조달하는 수직적 체계는 1970-80년대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을 전유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확대된 시장 경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산림계를 기치로 마을 내 송이 수집을 통제하는 기조가

약해졌다. 국유림 내 생산되는 송이에 대해서만 관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변모한 것이다.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른 국유림 인근 마을과 국유림관리소의 ‘계약’은 오늘날 국유림 내 송이 채취권을 분할하는 주요 제도이다. 강한 통제가 기초하는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 국가 기관과 마을은 협약에 따른 계약 관계를 맺는다. 산림의 일부를 전유하는 데 대한 양자의 소통 방식은 명령에서 협상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국유림보호협약은 마을 공동체의 형성과 주민 간 사회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협약은 지역기반 산림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산촌 주민은 산불감시와 도벌 단속 등 국유림 보호활동을 수행한다(윤여창 외, 2015: 5). 보호활동 대가는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일부를 양여해 주는 것이다. 두천과 소광도 읍진국유림관리소와 매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다. 약 15년 전 읍진 국유림관리소는 송이를 무상 양여해 주어 마을 주민이면 부담 없이 송이를 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수 확대를 위해 유상양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각 산림계는 송이 시세 대비 1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송이 채취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협약 마을인 두천과 소광 주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당연한’ 것이라 인식했다. 녹화사업부터 산불 끄기 등 술한 부역과 동원에 주민들이 응했기에 지금의 푸른 산림이 존재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역시 주민에게 베푸는 혜택이 치산녹화사업 당시 주민의 봉사에 대한 보상 효과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과거의 기여에 더하여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른 오늘날의 보호 활동도 요구한다.

산불 단속은 대표적인 주민 참여 활동 중 하나이다. 1970~80년대 활발했던 윤번순산제도가 폐지된 후, 산불단속활동은 주민 일자리 증진과 연계해 산불집중단속기간인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과 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채용된 산불감시원이 주로 산불을 감시한다. 산불감시원은 차량으로 마을과 산림 임도를 오가며 무단입산자를 색출하고, 잔불 여부를 조사하거나 주민의 소각 행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관공서에서 지역 노동력을 활용해 산불감시에 나서는 것 외에도, 국유림보호협약 마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산불을 지키기도 한다.

녹화사업 이후 자연 보호의 ‘수호자’가 된 주민에게 산불감시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데, 자신의 봉사로 숲의 황폐화를 막았기에 이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경제적 이익이었다. 마을 내 산불감시에 참여함으로써 송이를 취할 권리를 얻으므로, 송이는 감시 활동을 독려하는 강력한 동인이다. 부역과 동원을 시작으로 푸른 산의 형태가 드러났다면, 송이가 자라는 오늘의 녹색 산에는 도덕적 가치와 경제적 실익이 교차한다.

송이 채취에 있어 주민과 정부 기관의 긴밀한 관계가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한 자본주의의 연결고리(chain) 하에서 송이의 이동을 추적한 썩(Tsing)은 미국 오레곤(Oregon) 주 송이 채집자들의 불안정한(precaious) 삶에 주목했다(Tsing 2015: 4).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출신 채집자들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빗겨난 난민이거나 빈곤층이며, 오레곤 주 내 국유림에서 능력껏 송이를 채취한다. 반면 핀란드에서는 주로 사유화된 숲에서 송이를 채취하나, 산주가 아닌 대다수 사람들도 송이를 딸 수 있다. “모든 이의 권리(everyman's rights)”라는 관습법에 따라 거주자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숲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ibid.: 175-176).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해 마을별로 폐쇄적인 채취 구역을 설정하는 한국과는 채집자의 성격부터 채집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미국이나 핀란드 사례와 달리 구역별 송이 채취를 허가하는 한국의 제도는 송이 생산 방식은 물론 산림청과 마을의 관계 및 마을 공동체의 ‘경계’ 인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송이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송이 채취와 수매, 유통 일반을 둘러싼 제도와 법령, 마을 자체 규약이 세워졌다. 정형화된 규칙들은 송이 생산의 ‘불확실성’ 위에 정립된 것이었다. 송이는 그 생물학적 특성상 현 재로선 인공 재배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촌민의 자연 채취에 생산 전체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1967년부터 송이 수매 통계 집계를 시작했지만 정확한 생산량을 파악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특히 국유림의 경우 송이 생산을 전담하는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송이 채취 전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주민의 고지를 신용할 수밖에 없다. 사실 사유림과 국

유림 내 송이 채취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실제 채취량과 신고한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이를 모두 적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해당 산림의 소유자가 국가일지라도 임산물을 경제적 상품으로 ‘자원화’하는 데 있어 마을 공동체와의 신뢰 관계가 뒷받침되어야, 소유권을 지닌 데 따른 이익을 취하는 구조인 것이다.

지역 내에서도 각 마을은 송이를 딸 수 있는 구역의 경계에 보다 민감해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 능선의 경계를 임의로 설정해 마을별 송이 채취구역을 정했는데, 이 ‘경계’의 위치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두천1리와 두천2리의 국유림 경계 변경에 관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 두천리는 해방 후 1리와 2리로 분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2리는 애림계를 조직해 일제가 남기고 적산을 관리하게 되었고, 1967년에는 대부조림을 받아 마을 인근 국유림을 가꾸었다. 이에 해당 대부림은 두천2리의 무상양여 구역으로 인정받아 이 곳에서의 임산물 채취권은 2리 주민이 독점하도록 되어 있었다.

갈등은 대부림의 위치가 두천1리와 2리의 접경에 위치한 데서 비롯한다. 두천1리 주민의 입장은 2리와 달랐다. 해당 산림은 두천1리 주거지와 보다가깝고, 1리 주민들의 산불보호 활동으로 수십 년 간 재해 없이 보호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두천2리는 대부림은 아니지만 그곳과 인접한 산림도 무상양여 구역으로 독점해 1리의 ‘보호 영역’에 있는 산림에서의 이득을 2리가 취했음을 지적한다. 갈등의 골은 1980년대 두천1리와 2리 산림계장의 비공식적 협의로 인해 2리 산림계장이 주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1리에 산림을 일부 넘겨주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국유림의 면적 변경은 곧 송이 채취 면적의 변화를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두천2리 주민은 산을 빼앗기면서 발생한 송이 채취량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만 것이다. 2리 사람들은 산림청에 항의는 물론 소송을 고려했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이미 행정 처리가 완료된 후였기 때문에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마을 주민은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품고 있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갈등의 대상이 된 산림은 모두 ‘국유’이지만, 그 갈등의 내용은 사적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과도 유사하다.



우리 마을이 어느 지점까지 송이를 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곧 1리와 2리라는 서로 ‘다른’ 마을의 경계를 획정하는 사안으로 확장되어 임산물 채취권이 적용되는 산림 면적의 변화는 마을 간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70년대 이전만 해도 온 산을 누비며 생계를 이어 온 사람들에게 국유림의 경계는 무의미한 구분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권이 개입되면서부터 산림 경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채취를 위한 마을 차원의 엄격한 자체 규약과 송이 도둑 단속은 이를 반영하며, 채취권은 곧 주민으로서의 성원권과 산림소유권 - 임산물 채취에 한정될 지라도 - 을 실질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화전정리나 녹화사업 등으로 산림과 마을의 뚜렷한 경관이 정립되었을지라도, 송이가 사회적 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국유림은 마을의 경계를 위치 짓는 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했다. 국가 정책의 기획으로 산림과 마을의 지리적 구분이 이뤄졌을 지라도, 장소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산림은 여전히 마을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장소로 인지된다.

## 2) 마을공동체의 송이채취권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송이채취권의 독점 체제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 시대를 달리하며 산림의 형태와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산림 정책이 바뀌었고 송이와 관련된 제도도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내용 및 형식상의 수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는 두천1리와 2리의 경계 변화에 영향을 가했듯 마을공동체의 ‘성원권’을 규정하는 데 영향력을 가했다.

### 〈사례4-2: 산불감시와 송이채취〉

불은 필히 지켜야 해. 안 지키면 송이밭을 얻을 자격이 없어. (배기용, 두천1리)

각 마을마다 송이를 누가, 얼마나 채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때문에 송이 채취로 실익을 얻는 주민의 비율에 따라 마을 차원에서 산불 감시에 투여하는 노력의 정도가 달라진다. 본래 송이는 불에 매우 취약해 큰 산불이 나면 향후 30년 정도는 송이가 자라지 않는다. 송이는 소나무에

기생하는 균의 일종이라 볼 수도 있는데, 소나무는 솔씨를 통해서만 발아하여 나무를 베거나 산불로 타버리면 새롭게 자라나지 못해 산불은 소나무의 생장에 치명타를 입힌다. 이는 송이 채취를 활발히 하는 마을일수록 산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한 예로 두천 1리는 지금까지 전 주민이 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산불감시활동을 벌이는데,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송이를 채취하지 못하는 주민이라도 오래 전부터 산림 보호에 이바지했다는 점, 현재도 산불감시에 기여한다는 점 등으로 송이 생산액 일부를 줌으로써 마을 주민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데 이유가 있다. 즉 ‘누가’ 산불 감시에 나서는가 곧 송이 채취권자 및 수익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배기용씨가 말했듯 송이밭을 얻을 ‘자격’은 오랜 시간 마을에 거주하며 봉사한 주민임을 인정받는 기제인 것이다.

전술했듯 송이를 따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단지 국가가 부여한 ‘혜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40여 년 간 산림 보호에 앞장선 주민 활동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송이를 비롯한 임산물 양여를 허락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지역 국유림관리소 공무원과 함께 공유하는 생각으로, 1970년대부터 산불감시활동과 녹화사업에 열심히 참여해, 오늘날의 푸른 산림을 만드는 데 일조한 국유림 마을의 경제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인 셈이다. 때문에 송이 채취 자격은 마을 거주민 모두에게 곧바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곧 송이철 산에 입산할 수 있는 자를 가려내는 원리이기도 하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산림의 안과 밖의 구분은 무효했고, 생활세계의 일부였다. 하지만 점차 안과 밖이라는 경계선이 형성되면서 송이라는 상품을 마을이 독점하는 데 있어서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배제와 포함의 규칙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규칙은 마을 산림계의 협의와 동의에 따라 정해졌기에 각각 차이를 보인다.

송이 채취권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산림계’에 부여된다. 즉 산림조합이나 국유림관리소와 소통하고 이익을 나누는 일은 일반 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산림계라는 마을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산림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의 취득은 자연적 취득과 인위적 취득이 있는데, 전자는 부락에서 출생한 주민이 속한다(배병일 2008: 82). 다만, 산림계 조직의 근

거법인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1951년 시행됐으므로 해당 부락에서 태어나진 않았어도 산림계 조직 당시부터 마을에 살았던 주민은 모두 산림계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자치조직인 송계로부터, 국가에 의해 재등장한 산림계가 현재는 국유림을 관리 및 전유하는 마을별 조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림계의 ‘역사성’이 드러난다. 마을재산이었던 산림을 관리하는 송계에서 70년대 주민 동원 기구로 활용된 산림계가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일련의 흐름은 산림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어진다. 축적되어가는 경관은 단순히 산의 시각적 변형 뿐 아니라 이를 전유하려는 주민과 마을, 국가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 중 하나인 제도 및 규칙의 축적을 담지한다.

산림계의 역사성은 산림계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마을 내 ‘거주(dwelling)’가 곧 산림계원의 자격이었던 과거로부터, 도시화로 인한 대규모 이동 및 현재의 고령화에 따른 산림계원 수의 감소 등이 맞물리며 누가 산림계원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시간의 축적으로 오랜 세월 산림 내 봉사에 이바지한 주민과 새로 유입된 주민이 함께 거주하면서 송이 채취를 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선별할 필요가 생긴 까닭이다. 물론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소광과 두천 주민의 자녀는 비록 부모가 산림계원일지라도 이 자격을 물려받을 수 없다. 산림계는 철저히 마을 거주에 기반을 두므로 혈연 등의 친족(kinship)은 계원의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에 살게 되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산림계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산림계원 자격의 인위적 취득은 타 지방에서 해당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Ibid.: 82). 그럼에도 마을별 규칙에 따른 산림계 회의를 거쳐야만 새로 온 거주민의 산림계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한 예로 소광1리는 10년 거주 조건을 지켜야만 이후 산림계원으로 인정받아 송이 채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송이를 채취하는 모든 마을이 가지고 있으며, 산림계원 회의에서 규칙을 정한다. 사실상 마을 소유가 아닌 국유에서의 송이를 채취함에도, 채취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모두 마을 산림계의 역할이다. 엄격한 소유권의 법 원리에 따르면 모순으로 보이는 상황일 수 있

겠으나, 이는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는 마을의 권한이다. 화전이 흥행 하던 시절, 당시 소유에 대한 집합 의식은 국가와 마을 사이 상충했으나, 이제 마을 내 자체 규약 및 그에 따른 집합의식과 국가의 소유권은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룬다.

두천1리만의 독특한 특징은 다른 마을과 달리 ‘입찰 방식’을 택해, 낙찰된 인물을 중심으로 송이채취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는 약 10여 년 간 지속된 규약으로, 송이 채취를 원하는 주민은 국유림 내 설정된 여러 구역 중 한 구역에 대한 입찰가를 제시해야 한다. 입찰가는 구역마다 정해져 있는 내정 가격 이상을 제시해야 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되는 구조로 전 입찰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만약 1구역의 내정 가격이 400만 원이고, 여러 입찰자 중 500만 원이 최고가였다면 이를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된다. 그러나 1구역을 한 명이 전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마음이 맞는 이웃 주민을 택해 팀을 꾸려 송이 채취에 나선다. 그래서 먼저 낙찰가를 마을에 지불한 뒤, 송이 채취로 얻은 수익은 낙찰자와 공동 채취자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는 두천1리에서만 행하는 비공식적 절차이다. 바로 옆 마을인 두천2리만 하더라도 구역별로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고, 발생하는 총수익은 구역별로 공동 분배하지만 사전에 입찰로 특정 구역에 대한 가격을 정하진 않는다.

하지만 돈이 개입되는 만큼, 두천1리에서 송이 채취는 원칙적으로 산림계원 여부와 관계없이 마을 주민이기만 하면 모두에게 열려 있다. 송이에 대한 공동체의 성원권이 화폐를 매개로 보다 손쉽게 획득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송이는 마을 내 산림 보호 활동의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마을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나 외지인의 송이 채취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마을 거주기간이나 연령 등 자체 기준을 두고 그에 부합하는 자만이 산림계원으로서 입산할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두천1리는 입찰가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송이길이 열리는 원칙을 내정한다. 하지만 마을의 고령화로 실제 송이 채취자는 10명 안팎이고, 이들이 주요 입찰자가 된다. 물론 낙찰자가 팀을 꾸릴 때에는 마을 주민을 위주로 사람을 모으거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입산해 채취에 나선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시

에는 외부에서 사람을 ‘고용’해 송이를 따게 할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30년 이상 두천리에 거주한 마을의 ‘어른’은 오늘의 울창한 산의 모습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채취자들의 수익 일부를 반드시 그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이처럼 두천1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경제적 거래 관계가 비경제적 공동체 관습보다 우선한다. 거주 기간이나 마을에 기여한 바와 관계없이,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보다 많은 수익을 얻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거래관계를 따르는 까닭이다. 하지만 마을 전체에 대한 채취자의 경제적 기여 또한 다른 마을에 비해 큰 편이다. 현재 송이를 채취하지 않는 주민도 송이 채취에 포괄적 권한을 인정받아 그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천1리의 방식은 자본 중심의 입찰과 마을 주민이 모두 이익을 얻는 공동체적 분배 방식이 접합된 형태를 띤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광1리 마을 주민은 산불감시를 관공서의 감시원에게 일임하고, 본인 산을 소유한 산림계원 4명이 산불감시에 일부 나선다. 이곳은 10년 이상 거주자만이 송이 채취권을 가질 수 있고, 노령인 주민은 건강상의 이유로 채취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아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인원이 매우 한정된 데다, 생산액도 공동 분배하지 않는다. 이에 구역 당 소수의 인원이 고정적으로 송이를 채취하는 경향이 강해져, 송이가 특히 많이 나는 구역을 관할하는 주민은 계속해서 더 큰 이익을 보게 된다. 다만 수익의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저축한다. 구역마다 출자액이 달라 넓고 송이가 잘 자라는 곳을 담당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액수를 기금으로 낸다. 이 기금은 주민 소득이 아닌 마을 공동체에 기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주민이 다수인만큼 주민 차원의 산불 감시 활동에도 소극적인 사람도 많다. 두천1리는 주민 개개인이 송이로 수익을 거둔다면, 소광1리는 주민이 아닌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기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채취자들이 마을에 기여하는 형태다. 때문에 이곳 산림계원의 자격권한이 마을 성원권을 상징할 만큼의 확장성을 갖는 데는 제한이 있으며, 소수의 구성원이 소광1리가 관할하는 국유림 내 채취 권한을 과점하는 특성을 갖는다. 모든 주민이 산림의 임산물을 자유롭게 취하던 과거와 달리, 송이 채취에 있어 지금의 방식은 오히려 산림에 다가가는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기제가 된다. 경제 관계의 중요한

원천이 된 ‘송이산’에서 산림계라는 마을 조직은 송이철 입산 가능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작동하는 것이다.

소광2리는 80년대만 해도 마을에 2년만 거주하면 마을 회의를 거쳐 송이 채취권을 주었지만, 현재는 의무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이곳 역시 국유림은 구역별로 나눠 산림 면적에 따라 입산자의 수가 조정되고, 수익은 구역 중심으로 공동 분배된다. 만약 사정상 송이를 따지 못하는 주민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조원들이 그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야 한다. 가령 5명 중 한 명이 송이를 못 따게 된다면, 그가 송이채취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 나머지 네 명이 더 많은 이익금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송이채취권을 네 명이 공동으로 취하는 차원에서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한 명이 마을에 거주한 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 이는 그가 아직 마을의 진정한 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 마을마다 상이한 송이 채취 규약을 갖듯, 송이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송이길’도 저마다 다른 모양새를 띤다. 이방인은 마을을 둘러싼 광활한 국유림을 보며 능선과 골짜기로 이어진 ‘하나의 산’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송이를 따는 마을은 국유림을 구역화하여, 송이철이 되면 주민은 자신에게 배당된 구역에서만 송이를 채취한다. 국유림의 경계는 곧 마을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를 침범해 다른 마을의 송이를 채취하려 한다면, 그는 송이도둑이 되는 셈이다. 도둑과 도둑 아닌 자는 곧 내부인과 외부인을 의미했으며, 이는 마을 성원의 지위 문제와도 연결된다. 소광1리는 산림계원 4명을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이 송이를 채취하기 때문에 한 명씩 한 구역을 맡아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서 송이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나머지 마을은 구역별로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그 수는 산림 면적에 비례하도록 설정해 공정성을 기한다.

주민들의 구역 선택은 송이철이 오기 전 마을 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앞서 말했듯 두천1리는 마을 회의에서 입찰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 원하는 구역을 선점한다. 다만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만큼, 채취에 나선 산림계원들은 이 돈을 일종의 ‘투자금’으로 인식한다. 반면 그 밖의

다른 마을은 산림계원이 선호 구역을 말하면 그 뒤 협의과정을 거쳐 인원수를 조정한다.

송이가 기울어져가는 산촌 마을 경제에 큰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19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두천과 소광을 잇는 산림의 송이 생산량이 급증해 채취에 나선 주민은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 당시만 해도 아침 일찍 산에 들어가 밤에 나와도 다음날 가면 채취할 송이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 버섯이 이른바 ‘돈 되는 물건’이 되면서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송이철마다 마을 인심이 각박해지는 것도 필연적이었다. 또한 경쟁이 격화될수록 송이 채취의 ‘자격’을 둘러싼 포함과 배제의 원리가 더욱 세밀하게 작동한다.

#### 〈사례4-3: 흥흥한 인심〉

현찰이 도니까 마을 분위기가 송이 딸 때 되면 험악해져. 인심이 각박해지지. 돈이 개입되니까. (김원복, 소광2리)

마을의 안과 밖에서 이 ‘자격’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곤 한다. 전술했듯 마을 내부에서도 거주 기간과 건강상의 이유, 산림계원의 조건 등으로 송이를 따는 사람과 따지 않는 사람이 나뉘었다. 때문에 송이 채취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은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수십 년 간의 산림계 회의에 걸쳐 정해진 규칙이기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마을의 비난에 부딪친다. 외부 요인 중 가장 큰 골칫거리는 ‘송이도둑’이었다. 현재는 외부인이 입산해 송이를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산림법 제 116조에 따르면 산림절도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송이철에 외부인의 송이 채취를 목격한 주민은 바로 산림청에 신고해 그를 처벌토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80년대에는 송이로 사익을 취하려는 외부 입산자가 많았다. 쪼은 송이 채취자들이 국유림을 광범위한 공공재인 듯 인식하고 송이를 수집함을 지적한다(Tisng 2015: 78). 규제의 힘이 약하고, 양여자인 주민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재했을 당시 이른바 송이 ‘도둑’의 인식도 그러했다. 그들은 공유재 성격이 짙은 국유림 내

산림 활동을 한 셈이나 해당 국유림 산림계원이 아니었으므로 입산을 허락받지 못한 이방인에 불과했다. ‘도둑’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리에 의해 송이 유통망을 독점한 주체는 국가였으나, 송이 ‘도둑’들의 활동은 독점 유통망의 한계와 그 틈새 또한 보여준다. 원칙대로라면 송이는 국내 유통이 불가하기에 도둑들의 활동은 송이를 몰래 빼돌리는 행위였다. 건강에 좋다는 소문에 개인적으로 송이를 취하려 몰래 산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으나, 개인적 판매를 위해 사람들 눈을 피해 새벽녘 산을 헤맨 이도 있었던 것이다.

이들을 단속하는 것은 결국 산과 가장 가까운 주민의 몫이었다. 송이를 위해서라도, 두천과 소광 사람들은 산을 지키기 시작했다. 70년대 이전만 해도 산림은 지켜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경제적 활용을 위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었다. 삼척 사람도 행정 경계를 넘어 소광리 인근 국유림에서 자유롭게 화전지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송이 생산이 본격화된 뒤로는 송이철인 9월 경 산에 들어갈 수 있는 구성원 자체에 제한이 생겼다. 경제적 활용이라는 목적은 변하지 않았으나 그것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소수의 마을 주민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이제 산을 지키는 역할은 송이의 주인이 맡았다. 국유림은 산림계원인 주민 일반이 단속과 보호에 참여한다. 반면 사유림 송이 채취권은 산주가 독점하므로 도둑 퇴치 역시 산주가 일임한다.

#### 〈사례4-4: 송이 도둑〉

옛날엔 외부에서 송이 따러 온 사람 많았어. 법이 몰려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유림에서) 잠도 잤어. 그러면 (도둑이) 못 오니까. (박정화, 두천1리)

송이 채취자는 송이를 집중적으로 채취하는 한 달 간은 아예 텐트를 치기도 한다. 산에서 숙식을 하며 낮에는 송이 따는 데 열중하고, 밤에는 송이 도둑을 물리치는 주민이 꽤 있었다. 과거에 독가촌이 있었다면, 80년대에는 임시 텐트가 그 자리를 메운 것이다. 텐트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만으로도 송이 도둑을 겁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사실 이것만으로 군데군데서 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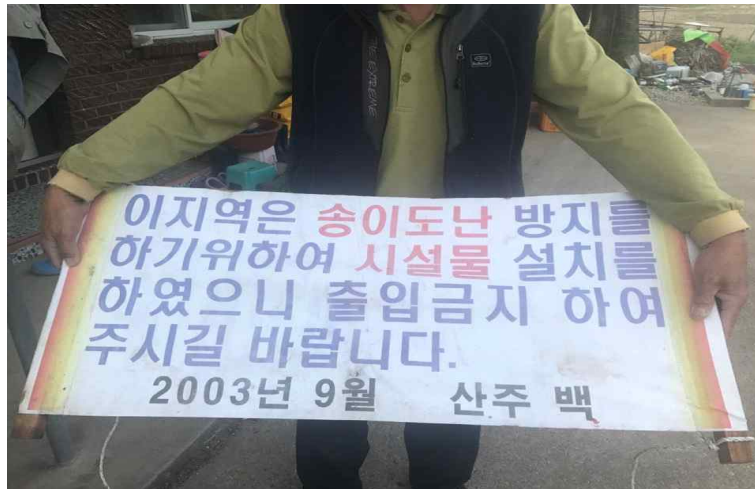


드는 도둑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깊고 넓은 산을 드나드는 모든 이를 개별 주민이 신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주민이 국가 대신 국유림을 지키는 활동으로부터 이곳에 대한 국유림보호협약 마을의 간접적인 소유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두천과 소광 주민은 해당 국유림의 사법적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곳의 송이를 배타적으로 채취하는 주민의 권리는 전체 산림을 지키고, 입산하는 외부인의 행위까지 막을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두천리 배기용씨는 넓은 산을 소유해 송이 도둑 단속에도 열심인 인물이다. 처음에는 밤에만 텐트를 치고 지냈으나 도둑이 끊이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는 올가미를 설치한 뒤 시설물 설치 경고문을 내걸어 도둑을 혼쭐냈다.

#### 〈사례4-5: 송이 도둑〉

CCTV는 안 달고, 올가미를 만들어놔. 월남전 부비트랩처럼. 줄 건들며 사람이 나무에 매달리게 돼. 그래서 경고문 붙여놔. ‘이 지역은 시설물을 설치했으니 입산금지’ 이렇게. …… 저 산에서 불이 반짝 반짝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올가미에 걸렸어. 그걸 보고 산 밑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올가미 풀어주고 다른 사람 송이밭으로 갔어. 거기서 들려서 난리 났지.……그 후로는 그 사람들 산에 안 들어갔어. 소문이 나니까. 배기용이 산 들어가면 무조건 올가미에 끌려 올라간다. 일절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도둑들이) 안 건드려. (배기용, 두천1리)



〈그림 21〉 송이 도난 방지 대비 시설물 설치 경고문  
© 장예지

이렇게 송이 도둑 잡기에 열을 올린 배기용씨도 정작 그들을 경찰이나 산림청에 신고하진 못했다.

#### 〈사례4-6: 송이 도둑〉

실제로 사람(도둑)이 많이 걸렸어. 주로 지방 사람들이가 많이 그랬지. 송이밭 아는 사람이 그러지. 그럼 그 아는 사람이라 신고하면 평생 원수가 되거든. (배기용, 두천1리)

송이 채취는 나름의 기술을 요구하므로 누구나 쉽게 발견해 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남몰래 밤을 틔타 송이를 따려면 어두운 산길에 눈이 밝고 그 가운데 송이를 찾을만한 생태적 지식도 갖춰야 했다. 그러다보니 지역을 잘 모르는 외지인보다 두천과 소광 인근 마을 사람들이 송이를 훔치러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도둑을 적발해도 아는 사람이거나 먼 이웃들이 대부분이기에 그들을 쉽게 신고할 수는 없던 사정이다. 송이를 둘러싼 관계 일반이 금전적 거래 관계였다면, 배기용씨는 손쉽게 송이 도둑을 신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을’ 경계로 들어온 자가 수십 년 간 한 지역에 살았던 타 마을 이웃이라면 그를 마냥 ‘도둑’이라 내몰 순 없었다. 도둑의 존재란,

공동체 외곽의 경계지대에 위치한 자에 속한다(안승택·이경묵 2015). 따라서 산림에 낳은 도둑의 등장은 곧 그와 마을 사람의 경계를 바로 확정한다. 하지만 도둑 또한 옆 동네 이웃이거나 동창생이라면, 그를 경계 밖 존재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이 사회관계는 관청에 대한 처벌 요구를 철회케 하는 요인인 것이다.

도둑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은 소유 의식의 문제와 연관된다. 도둑이 채취한 송이는 적발 시 이는 국유 재산 침탈로 간주되므로 모두 국가의 이익으로 환수된다. 국유림에서 주민이 버섯을 채취함에도, 도둑의 송이는 주민의 수익 대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대량의 송이를 수집한 도둑을 주민이 잡는다면 이를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둑과 ‘협상’을 할 여지도 발생한다. 사실상 국유로 포섭되는 송이는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역설적 상황 하에서 도둑이 ‘아는 사람’이라면, 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일을 ‘크게’ 만들 것 없이 그들 사이의 협의로 송이 도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밀한’ 도둑은 산림계 또는 마을에 대한 이차적 성원권을 갖는 셈이다.

### 3) 송이 채취의 묘(妙)

경상북도 울진군은 매해 10t 이상의 송이가 나는 최대 송이 주산지 중 한 곳이다. 그래서 가을 송이가 고개를 들 9월경이 되면, 송이 채취에 뛰어든 사람들과 유통업자의 최대 관심사는 올해의 송이 생산량으로 쏠린다. 하지만 채취의 적기와 생산량을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금년 송이 생산 시기만 하더라도 작년의 초기 생산시기에 비해 5~7일 늦춰졌으며, 생산량도 작년에 비해 줄었다(2017년 9월 현재)<sup>33)</sup>. 가을철 강수량과 기온, 토질, 소나무림의 상태 등 여러 요소가 얼마나 ‘적절히’ 맞물리느냐에 따라 당해의 송이 생산량이 결정된다. 송이는 여전히 인간이 ‘재배’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연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선물인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공재배가 어려운 송이의 생장 특성에서 비롯된다. 송

33) 영남일보, 2017년 9월 22일, “풍작 기대했는데…경북 송이농가 울상”

이는 소나무 뿌리와 공생하는 활물기생균(活物寄生菌)<sup>34)</sup>으로, 외생균근<sup>35)</sup>을 만들어 공생한다(이태수 외 1999: 1). 죽은 유기물을 분해해 버섯을 만드는 사물기생균(死物寄生菌)은 죽은 나무나 톱밥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반면 송이를 발생시키는 활물기생균은 살아 있는 소나무와 공생관계를 맺는다(이태수 외 2000: 21). 게다가 균이 소나무에 뿌리에 자리 잡더라도 8-9월 사이 비가 적게 내리거나, 나무와 미생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및 수분상태가 따라주지 않으면 송이 생산량은 급감한다. 기상현상이 송이 생산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는 것이다(ibid.: 31).

결국 송이를 다량으로 발견하는 일이란 인간의 관점에서 언제나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올 해 송이가 많이 났다고 하여 다음 해를 낙관할 수 없다. 가령 1985년의 대풍년기에는 전국에서 총 1,313톤의 송이가 나왔으나 1993년의 대흉년기에는 137톤이 생산되었을 정도로(ibid.: 21), 흉년과 풍년의 격차가 크다. 그러나 사람들은 송이철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송이 풍년의 확률을 점친다. 울진군 두천리와 소광리 주민들은 여러 요소 중에서도 장마철 마을 강우량을 송이 흉년과 풍년을 가르는 풍향계로 삼는다. 수년 간 기록해 둔 송이 채취 시작일도 비교해 산에 들어갈 시기를 예비한다. 또 가을 송이 채취가 본격화되기 전인 9월 초부터 버섯의 발아 상태를 관찰하며 예측 불가능성의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이는 비가 온 ‘정도’, 날이 더웠던 ‘정도’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측정해, 자연의 불확실성을 해석해내는 시도일 것이다.

송이 채취자인 마을 주민들이 축적된 경험치가 만든 ‘감각’을 활용해 작황을 예상한다면, 임학 연구자는 정확한 수치로 송이 발생의 공통조건을 찾아내고, 송이 생산을 인간의 재배 행위 영역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송이 주요산지의 월별 기온과 주요 산지의 해발고별 연평균기온 및 습도, 송이 발생 시기와 종료기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송이 생장에 적

34) 살아있는 세포로부터만 영양을 섭취하고 살아 있는 숙주 조직이 없으면 발육할 수 없는 사상균을 의미한다. (출처: 토양사전)

35) 균사가 식물 뿌리의 표면 또는 표면에 가까운 조직 속에 번식해 균사는 세포간극에 들어가지만 뿌리의 세포 내에까지 침입하지 않는다. 소나무과의 수목 뿌리에 송이과의 균이 붙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출처: 두산백과)

합한 조건을 일반화한다.

가장 중요한 목표인 인공재배는 송이 최대 수입국인 일본에서 시작됐다. 일본에서는 1973년부터 송이 균환부에 소나무 묘목을 심어, 자연적으로 송이균이 묘목에 부착된 감염묘를 얻었고, 송이균 감염묘에 의한 송이 인공증식 연구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나무를 다른 임지에 옮겨 심은 뒤에는 소나무가 죽어 버리거나, 붙어 있던 송이균도 점차 시들어져 송이 증식은 성공하지 못했다(이태수 외 1999: 16).

이를 기점으로 한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1980년부터 현재까지 ‘송이버섯균 감염묘에 의한 인공증식 시험’을 꾸준히 진행해 2017년이 되어서야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 2001년 강원도 시험림에 송이 균에 감염된 150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2006년 31그루에 송이 균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그 뒤 2010년 송이버섯 1개가 처음으로 자랐고, 올해 송이버섯 3개가 자란 것을 확인했다<sup>36)</sup>. 미미한 수치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세계 최초의 인공재배 성공 사례였다. 약 16년을 기다려 3개의 송이를 인공 재배한 성과는 그만큼 송이 생산의 불확실성을 방증한다.

생물학적 지식에 근거해, 인간이 지배하는 재배 환경을 구상하는 과학자와 달리, 송이 채취자가 송이를 발견하는 ‘감각’은 경험의 축적에서 비롯된다. 여러 채취자들이 각자 선호하는 구역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정 구역을 자주 가다 보면 다른 곳에 비해 길눈이 익숙해지고, 송이가 잘 나는 지점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매해 다른 구역을 가는 것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이다. 설령 송이를 딸 일꾼을 외부에서 고용할 수 있다 해도 이는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마을에서 수십 년 간 송이를 따온 주민이 송이 채취의 지름길로 통하는 송이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은 구역별로 공동 분배한다는 원칙이 엄격하게 작동하기에 송이 채취는 언제나 집단적으로 이뤄진다. 즉 한 날 한 시에 모여 입산과 퇴산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한 명이 먼저 송이산에 들어간다면 그는 해당 구역 구성원일지라도 도둑으로 몰릴 가능성

---

36) SBS뉴스, 2017년 9월 21일, “[취재파일] 귀한 몸 ‘송이버섯’...소나무 뿌리에 ‘더부살이’”

도 배제할 수 없다.

그들은 저마다의 송이를 찾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른바 ‘송이 나는 나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었다. 솔의 종류에 따라, 특정 솔씨가 있는 곳 근처에 송이가 잘 자란다던가, 태양이 많이 비추는 곳에서 잘 자란다는 등 저마다의 채취 기준이 있는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분류는 암송과 수송에 대한 것이었다. 본래 소나무는 자웅동체이므로 암송과 수송이 한 나무에 자란다. 그러나 몇몇 주민은 암 소나무와 수 소나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후자보다 전자에서 더 많은 송이가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두 천2리 한 주민의 설명에 따르면, 솟나무는 잔뿌리가 적고 솔방울이 잘 달리지 않지만 암나무는 잔뿌리가 많고 솔방울도 많다. 여기서 솔방울은 소나무가 낳은 ‘아이’처럼 의인화되어 소나무 중 솔방울이 많이 달린 나무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잔뿌리가 많은 소나무 근처에서 송이를 채취한 주민의 경험은 생태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 송이는 소나무 뿌리와 균사의 공생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뿌리가 많은 소나무, 이른바 암송일수록 송이가 자랄 확률이 높아진다.

두천과 소광의 송이 채취자 개개인이 수십 년간 산에 오르며 체득한 감각은 또 하나의 지식, ‘메티스’다. 항상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 환경에 적응해 온 실용적 기술과 획득한 지혜의 포괄적 영역을 의미하는 메티스는 변덕 심한 물리적 환경에서 더 많은 필요를 요한다(스콧 2010[1998]: 472). 채취자는 매번 위치를 달리하며, 기후와 토질, 주변 식생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라는 송이의 불확실성을 메티스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이 지식의 핵심은 필연적으로 암묵적이고 경험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이지만, 과학은 우연성, 추측, 맥락, 욕망, 개인적 경험 등을 배제하고 메티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ibid: 475-484). 두천과 소광에서 주민과 임학연구자는 각각 메티스와 과학적 지식의 담지자로 간주된다.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송이산 가꾸기 사업’ 등을 주관하는 임학자에게 산림은 인공 송이를 배양시켜 성장을 유도하는 ‘실험실’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개인 또는 각 마을만이 지니는 독특한 메티스로 송이를 찾는 주민에게 산림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장소에 익숙해지고, 주변 환경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실행지’이다.

실험실과 실행지의 차이는 자연과 사회라는 이분법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된다. 산지 일부를 실험실로 설정한 과학자는 산림을 인간의 방식으로 전유해 문화 또는 사회를 창출하는 서구식 이분법을 그대로 계승한다. 반면 실행지인 국유림에서 주민의 송이 찾기는 전자와 같이 자신의 실험 공간을 창안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메티스의 본질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경험의 법칙을 적시에,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다(ibid.: 477). 이에 사람들은 매해 상이한 기후 조건과 산림 환경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신이 자연물과 접촉하며 쌓았던 지식에 따라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즉 산림 생태계와 대적하며 인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함께 스며들어 감으로써 감각적 지식을 발휘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산림 내 행위자의 일부가 된 채취자에게 자연 또는 사회의 경계는 보다 불분명해지고,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메티스를 가동시키는 관계적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송이의 성장 환경은 분명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 또한 송이가 자라거나 혹은 자라지 못할 총체적 환경을 창안하는 데 기여했다. 홍수나 산불, 벌목 등 인간과 비인간이 야기하는 모든 교란(Disturbance)은 송이의 성장조건에 적합한 생태계를 직조하는 데 일조한다. 삼림이라는 생태사회에 인간종은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교란행위를 가했다. 산불, 농경 행위, 벌채 등은 끊임없이 산림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켰다.

두천리와 소광리는 약 50년간 상품용 송이 채취를 해오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소광리는 1980년대만 해도 한 사람이 하루 내내 100kg의 송이를 채취했을 정도지만 현재는 반나절이면 하루의 송이 채취 일과가 끝나는데다 생산량도 크게 줄었다. 이는 소나무림의 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1970년대 이전만 해도 화전과 연료용 땔감 마련을 위해 수많은 잡목<sup>37)</sup>들이 베어져 나갔다. 이렇게 소나무의 경쟁 수종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나무림이 우점하게 된 산림지대가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농토에 뿌리기 위해 낙엽을 끌어가면 햇빛을 잘 받은 소나무림 인근 토양은 송이가 성장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되었다. 산림 황폐화의 주범으로 낙인찍히

---

37) 두천과 소광리 주민들은 소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를 통칭할 때 ‘잡목’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는 낙엽 채취와 벌채, 화전 활동 등이 오히려 송이의 생장 환경을 복돋은 것이다. 풍부한 양의 송이는 수차례의 교란에 따른 역사의 창조물이었다(Tsing 2015: 30).

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림녹화사업 역시 1980-90년대 송이 특수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 무분별한 벌채로 소나무림을 포함한 숲 전체가 황폐화되던 상황에서, 조림 및 강력한 입산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어린 나무가 생장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에 송이가 자라기 가장 좋은 20-30년생 소나무가 숲을 조성하면서 송이 생산도 급물살을 탔다. 산림녹화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도 기존 산림 생태계에 변화를 가하는 복원 활동으로서, 의도치 않게 송이의 생장을 촉진한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숲이 생활세계이자 사회생활의 공간이었던 과거와 달리, 농촌 공동화 및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입산금지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 산림 보전이 곧 산림을 있는 그대로 두는 부작용성을 내포함에 따라 숲은 점차 우거지고 낙엽이 쌓여만 갔다. 솔씨는 낙엽 아래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고, 기존에 크던 나무들만 살아남아 어린 소나무는 큰 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받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소나무림의 노후화는 곧 송이 생산의 감소로 이어졌다.

울진 국유림관리소는 현재 ‘천년하종갱신사업’<sup>38)</sup> 등으로 소나무 주변 나무를 간벌하고 소나무 씨앗이 지표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낙엽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할 정도로 어린 소나무가 자라진 못하는 형편이다. 오히려 금강소나무 육림정책이 실행되기 이전, 대대적인 조림사업 시행과 함께 소나무 벌목이 금지되고, 마을 사람들이 퇴비와 땔감용으로 소나무를 제외한 낙엽과 잡목을 사용했을 당시에 소나무에게는 더 좋은 생장 환경이었던 셈이다.

짙은 송이가 자라는 환경의 총체를 ‘아상블라주(assemblage)’로 개념화한다(ibid.: 22-23). 군집, 집합체를 의미하는 아상블라주는 인간을 포함한 다채로운 종(multispecies)들이 조화 또는 부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집합적

---

38) 산림 내에 천연으로 산포한 종자가 발아하여 치수로서 자라는 천연하종에 의해 후계 산림을 육성하는 방법 (출처: 농업용어사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수 세월에 거쳐 인간과 동식물이 산림의 안팎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송이는 소나무림의 성장과 함께 생산량 증감의 변곡점을 찍었다. 아상블라주 안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비의도적 협력이 어떤 패턴을 만들어냈고(Tsing 2015: 23), 이것이 곧 지역 경제의 동력원인 송이의 상품성을 강화한 것이다.

다채로운 교란은 역동적인 경관을 창출한다. 경관은 여러 행위자의 궤적과 우연적 요소의 개입 등으로 언제나 변동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일시성(temporality)을 띠지만, 이는 경관의 역동과 역사성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숲의 생태적 변화는 갖가지 교란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 균락을 이루면서 송이와 소나무가 만든 역사의 아상블라주다. 여기서 송이, 소나무, 인간은 경관의 궤적을 형성해나가는 것이다(ibid.: 171). 다시 말해 송이는 단순한 상품의 가치를 넘어, 두천과 울진 산림에 역사적 경관이 낳은 축적의 산물이다. 세계 내에 인간을 위치 짓고, 여러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을 이해한 잉골드의 관계적 시각에 따른다면, 이러한 경관은 제도와 규약의 사회와 불확실성을 담지하는 자연의 세계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 번 와해시키고 만든다.

## 2. 숲을 ‘관광’하다

### 1) 박물관이 된 숲: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두천과 소광의 산림은 2010년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이 일대 보호구역과 일반 국유림을 가로질러 개장한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이다. 울진군 북면과 서면, 근남면 일대에 개발된 총 5개 구간의 숲길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sup>39)</sup>과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지를 포함한다. 5개 구간 중 2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두천리와 소광리를 지난다. 1구간 첫 개통 후 마을 주민과 민간시민단체 및 지자체, 산림청은 협의를 거쳐 최근 5구간 신설을 마쳤다.

---

39)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

숲길은 축적된 경관을 ‘전시’한다. 왕실 황장봉산으로 지정된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오늘날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역사, 과거 대표적인 산림 ‘훼손’ 행위였던 화전의 흔적은 물론 숲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와 고목 등에 팻말을 붙여 소개하며 거대한 숲 박물관을 숲 안에 들여 놓았다. 이에 다음의 논의에서는 숲의 박물관화가 이뤄지는 양상과 그것이 창안하는 경관의 특성 및 이러한 경관 만들기에 기여한 국가와 마을, 주민의 실천을 자연과 사회라는 두 개념 간 관계 속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림 22〉 숲길에서 바라본 보호구역 © 장예지

보호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산림 자연을 인간의 ‘유해한’ 외부 활동으로부터 보호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산림청은 병해충 방제나 숲 가꾸기 사업, 산림유전자원 보호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자연의 ‘관리’에 성공하려면, 산불과 무분별한 자원 채취 등 수많은 ‘산림 훼손’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이때 국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하는 산림과 훼손당하는 산림은 똑같이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었음에도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를 부여받는다. 쩡(Tsing)에 따르면 보호되는 산림은 원형의 자연을 표상하는 반면 인간에 의해 황폐화된 산림은 사회적 성격을 띤다(Tsing 2005: 202). 국가의 적극적인 보전 활동 역시 숲을 특정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기에 매우 사회적인 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영원한 자연’으로 표상되어 왔다. 수십 년 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의 입산마저 금지한 울진숲길의 숲은 국가의

목적이 꾸준히 투영된 지극히 사회적인 공간임에도 “자연 그대로를 살린 친환경적인 숲길”<sup>40)</sup>이라는 천연의 이미지를 구사하는 것이다.

산림청의 입산 통제는 숲의 천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다. 사람이 산에 들어가는 행위, 즉 훼손 위험 요인 자체를 금지하는 입산 통제는 꽤 단순한 방식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숲을 인간이 배제된 동물과 식물의 장소로 환원함으로써, 자연 생태계가 인위적 교란 행위를 피해, 본래 “스스로 그러하듯이” 생장을 지속하도록 두는 것이다.



〈그림 23〉 도처에서 발견되는 입산금지구역 팻말 © 장예지

아무렇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산림 생태계의 야생화와 소나무, 그 밖의 여러 사회적 흔적들이 원형의 상태로 박물화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숲의 사회성은 소거된 채, 과거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흔적은 ‘원형’의 전시물, 일종의 자연 상태의 일부로서 사람들 앞에 재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숲길 아래편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전시물은 생활 도구가이자 생계 수단이었다. 해설사의 설명과 탐방객의 서로 다른 시선,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산림 경관이 단순히 전시물의 집합체로 보일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처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숲길이 오늘날 울진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자

40) 울진군청 제공 팸플릿 “울진에 빠지다”

원으로 발돋움하게 된 근처에는 닫혀있던 산을 다시 개방하는 변화가 자리한다. 점차 산을 찾는 이가 줄면서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이 패여 만들어진 숲길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대신 숲을 지키고, 관리하는 산림청 직원들의 교통로인 임도가 길 노릇을 했다. 닫힌 산에 다시 입구를 만든 첫 주역은 울진군내 연합 시민단체였다. 향토사를 공부하며 십이령길과 보부상, 간첩사건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산림을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십이령길을 복원하자는 복안이였다.

2008년 발간한 “울진금강소나무림 지역 숲길 조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숲길 조성원칙은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역사 및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녹색연합 2008: 35). 길의 환경친화성은 옛날부터 이곳을 오간 사람들이 사용한 길과 현재 이용하는 길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조성은 배제해 훼손 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의 최대한 지양하고 지역 주민과 향토사가의 자문에 의지해 흔적만 남은 옛길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된 ‘등산로’가 아닌 ‘숲길’로 개칭하게 된 이유도 숲길의 자연친화적 ‘어감’과 관련된다. 등산로는 산을 오르는 행위에 비중을 둔 표현으로, 정상정복형 산행문화의 어감이 강하지만 숲길은 자연과 교감한다는 의미를 담는다(ibid.: 37).

이처럼 숲길 조성의 기본 전제는 옛길, 즉 과거를 현재화한다는 데 있으나 사실상 이 일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도 요구된다. 역사의 복원이란 단순히 역사적 장소를 모사(模寫)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를 투영해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뒤섞임을 일으킨다. 이는 썩(Tsing 2005)이 주조한 개념인 사회-자연적 경관(social-natural landscape)의 역동을 보여준다. 환경 그 자체는 아니나 자연 환경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친화적인 숲길의 모습을 형상화하되, 오늘날 우리 세대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옛 시절의 자원, 즉 십이령길이라는 사회적 대상의 장소성을 다시 조명하는 전략이다.





〈그림 24〉 보부상의 옛길을 복원한 골짜기 © 장예지

환경친화적인 길 굽이굽이에 자연, 역사, 문화적 ‘자원’이 위치한다. 마치 관람객이 박물관을 순회하듯, 탐방객은 정해진 탐방로를 걸으며 - 울진숲길 탐방객은 탐방로 외의 길은 다닐 수 없다. - 자원화된 꽃나물과 옛사람들의 흔적을 손과 눈으로 밟는다. 금강소나무림이나 진귀한 야생화, 산나물은 물론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구성하는 경관 역시 자원이 ‘된다’. 이때의 자원은 금강소나무와 같이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뿜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야깃거리’를 갖는 자연물과 경관, 건축물 등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자원의 지위를 점한다. 숲은 역사나 문명의 경계 바깥에 존재하지 않고, 경관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매체로 기능한다(Tsing 2005: 201). 사람들 사이에 축적되어 온 장소와 관련된 기억, 특정 동식물과 맺었던 관계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 자체로 자원화해 산촌민과 그 바깥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매개하는 것이다. 이 또한 축적된 경관의 일부다.

울진숲길에서만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희소성’의 감각은 특정 사물이나 생물을 자원화하는 데 용이한 요소로, 오늘날 새롭게 획득되는 가치다. 금강송군락지의 대왕소나무와 500년생 소나무는 울진숲길의 자랑이다. 군락지가 위치한 서면(西面)을 2015년 금강송면(面)으로 개칭했을 정도로, 금강송은 울진군을 상징하는 수목이다. 소나무는 기후와 토양 차이로 지역마다 다른 성장환경을 갖지만, 강원과 경북 일대에 서식하는 금강형 소나무가 한

국의 ‘대표’ 소나무로 자리매김했다.



〈그림 25〉 금강송군락지를 둘러보는 탐방객 © 장예지

탐방객 다수는 이 소나무를 실물로 보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않고 울진에 모였다. 때문에 울진이 금강송의 전통적인 대표 산지라는 것을 확증할 황장봉산 표석은 숲길을 걷는 이들이 꼭 확인해야 할 징표이기도 했다. 산불 피해목에도 따로 설명판을 마련해 신기함과 경각심을 모두 불러일으킨다. 1950년경 소광리 인근 산림에서 발생한 큰 불은 산천을 태웠다. 당시 고사한 나무 한 그루가 재에 그슬린 채 남아 있어, 이를 산불 피해목이라 명명해 숲길의 전시물로 선보였다. 팻말이 없었더라면 이 검은 나무 기둥은 쉽게 지나칠 고목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숲해설사의 손짓과 설명으로, 숲을 감싼 수만 그루의 나무 중 새까맣게 타 버린 채 흔적만 겨우 남은 나무는 탐방객의 눈으로 재발견된다.

진귀한 나무와 산나물 야생화와 더불어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 역시, 그 희소성으로 탐방객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고지대 절벽을 선호하고 겁이 많은 산양을 산행 중 만나는 경험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사람들은 숲길을 안내, 동행하는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서만 산양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한다. 운 좋게 산양의 배설물이나 발자국을 발견한다면, 산양의 실체에 한층

다가간 느낌을 주어 이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탐방객의 구미를 당긴다. 고고한 소나무와 희귀한 동식물의 존재만으로 숲은 청정한 자연, 푸른 녹음의 이미지를 획득한다. 이로써 각박한 도시와 대조되는 ‘휴양’의 공간을 표방한 숲길은 그 조성 목적을 최대로 성취한다.

하지만 금강소나무와 산양 등 희소성을 갖는 탐방 자원은 현 시점에 ‘생성 중인 경관’의 요소로 보아야 한다. 두천과 소광의 마을에, 산지에 오랜 시간 터 잡았던 사람들의 삶에서 금강송과 산양은 크게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다. 500년 수령 소나무는 너무 높은 고도에 위치했기에 산꾼들의 별목 대상이 되지 못했고, 일반 주민 역시 근처에서 화전을 했을 뿐 금강송으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 송이는 수령 20-30년 이하 소나무 근처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굳이 높은 곳까지 올라 금강송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산양도 오늘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가 보호해야 할 동물이 되었으나, 주민의 인식은 이와 달랐다. 마을 남자들이 사냥을 나갈 때 잡곤 했지만 맛이 없어 크게 반기는 사냥감이 아니었다고 한다. 오히려 지금은 보호 대상이 된 바람에 산지 내 농토의 농작물을 파헤쳐도 잡을 길이 없어 때론 눈엣가시로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화는 산림의 관광 자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 대상의 특별함이 사라지고, 매일 부딪치는 일상 속 이야기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강송과 산양을 홍보하는 산림청과 지자체는 주민의 과거의 경험이 아닌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금강송과 산양의 가치를 강조하며 오늘날의 경관을 만들어 나간다.

두천과 소광 산촌민의 삶이 집약된 흔적은 보부상과 화전민의 삶 이야기를 현재의 시선으로 재현하기에 적합한 ‘역사·문화 자원’이다. 생태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의 눈에 숲의 과거는 곧 숲에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로 수렴된다. 지금은 무인(無人)의 장소가 된 텅 빈 산에 누가, 왜 오르내렸는가 하는 물음이 곧 사람의 흔적을 자원화하는 것이다.

울진 흥부장과 봉화, 영주, 안동 등을 씬 없이 오간 보부상의 ‘십이령길’은 숲길 조성 초기부터 거론된 주요 테마 중 하나였다. 이에 1구간과 2구간이 관통하는 십이령 재마다 팻말을 세워 쉬어가는 구간을 정하는 한편, 골짜기에 얹힌 이름의 유래와 보부상의 관행, 조직 특성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굽이굽이 과거를 마주할 때, 해설사의 언술은 시대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과거의 이야기를 소환한다. 그의 언어 속에서 문화재나 터가 존재했던 시간의 순서는 뒤섞여 있고, 단지 탐방 시간 해당 구간을 다니며 눈에 띄는 장소와 각종 기념비의 존재성을 다채로운 이야기 속에서 풀어낸다. 경관의 축적은 시간에 따른 역사 서술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쓴다.

〈사례4-7: 보부상길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

이 성황당에는 대관령에서 모셔온 화신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자 화상이 있었는데 도둑 맞았어요. (성황당 건립을) 주도한 게 마을 보부상입니다. 주민이 같이는 했어도 보부상들이 주도했어요. 보부상들 이름이 현판에 다 적혀 있습니다. 개중에는 일본 사람들도 있어요. 장사하는 길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게 해 달라, (우거진 숲이라) 야생동물이 많으니 안전과 성공적인 장사를 기원한 곳입니다. (조용호, 울진숲길 해설사)

두천리에 위치한 1구간 숲길 입구의 내성행상불망비와 골짜기를 넘어가다 보이는 성황당은 이곳이 ‘보부상의 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긴다. 보부상 조직의 우두머리인 접장과 반수에 대한 은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내성행상불망비(乃城行商不忘碑)’는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1995년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310호로 지정됐다. 셋재를 지나면 도달하는 성황당은 보부상이 주도하고 주민이 협력해 건립한 것이다. 사람들은 건물 내부에 들어가고, 정면과 측면으로 성황당 건립에 기여한 보부상들의 이름이 내걸린 현판을 마주한다. 지금은 완전히 대가 끊긴 보부상의 존재를 작게 새겨진 이름으로나마 확인하는 것이다.

성황당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아래편에는 ‘현령이광전영세불망비(縣令李公光筌永世不忘碑)’가 자리한다. 옛 주막이 있었다던 터 바로 앞에 18세기 현령을 기리는 비가 놓여있다. 현령비는 뾰족한 낙엽송 지대를 바라보는데, 과거의 화전지가 조림사업 이후 낙엽송 숲으로 바뀐 것이었다. 해설사는 저마다 다른 시대를 산 성황당과 현령비, 주막터, 낙엽송이 한 장소에 펼쳐져 있는 이 지대에서 탐방객을 마주한다. 탐방객은 해설사의 설명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통해 현령과 보부상, 화전민의 삶을 상상해야 한다. 오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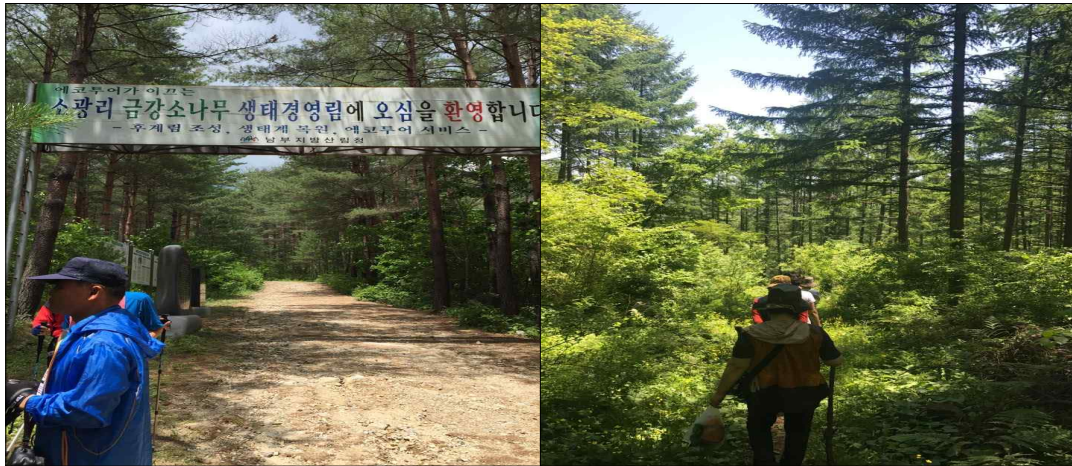
시간, 산재된 과거를 훑아보는 해설사의 설명 속에서 각각의 시간과 장소는 뒤섞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엮어내는 ‘말’의 힘은 시간의 어긋남을 잊게 한다. 말의 휘발성은 고정되지 않는 경관의 일시성(temporality)과 역동(dynamics)을 암시하듯 역사적으로 직조된 한 공간의 문화와 자연을 소묘한다.



〈그림 26〉 현령비(좌)와 그 뒤에 펼쳐진 주막터(우) © 장예지

## 2) 탐방객과 마을 주민이라는 표식

지금까지 개설된 5개 구간의 길에는 ‘어디에, 어떤 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여러 주체의 고민이 담겨 있다. 옛길의 역사성을 살리고자 한 울진 연합 시민단체의 초기 아이디어는 1구간과 2구간에서 실현되었다. 이후 개발된 3구간과 4구간을 대표하는 콘셉트는 ‘금강소나무’였다. 금강송 군락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으로, 산림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개통된 길이었다.



〈그림 27〉 3구간 생태경영림(좌)과 탐방객의 모습(우) © 장예지

특히 3구간의 경우, 종착지점인 소광리 주민의 호응도 구간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마을 주민이 탐방객의 도시락과 민박을 제공해 소득을 얻기 때문에 구간별 거점 마을이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해당 마을의 수익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5구간은 마을 차원의 입장이 반영되어 개발 착수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친 영향이 컸다. 숲길 조성 초기였던 2008년만 해도 주민은 마을 역사 관련 자문을 하는 정도의 참여에 그쳤다. 그러나 울진숲길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탐방객의 증가가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주민 참여 영역도 대폭 확대됐다.

탐방 구간을 개발할 때에는 군데군데 흩어져 있던 두천과 소광리 주민의 사유지를 숲길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과정도 필요했다. 점심 식사가 이뤄지는 거점지인 찬물내기나 십이령 주요 고개 중 하나인 셋재 등은 모두 사유지였다. 때문에 소유자인 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없었다면 숲 전체를 관통하는 연속적인 길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숲을 두고 국가와 마을 주민, 그리고 마을 차원의 대화는 부재했다. 산림정책은 미처 마을까지 와 닿지 못했고, 국유일지언정 산촌민은 국가와 상충하는 자신의 의지로 산림을 전유했다. 느슨한 관계는 70-80년대 대대적인 산림 보전 사업으로 변화를 맞이했다. 강제와 동원 체제 하에서 주민은 국가가 원하는 산림 형태를 창안하는 데 중심이 된

까닭이다. 하지만 강력한 보전 정책에서 숲길을 국민에 개방하는 보전적 활용 방식으로 산림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면서 두천과 소광 사람들은 산림청과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는 협상의 대상이자, 때로는 마을의 이해관계 충돌을 강하게 요구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5개 구간의 숲길은 산림청과 환경단체 및 숲길 운영 조직, 주민이 상호작용한 양상의 시각적 결과물로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주체의 상호작용으로 빚어진 울진숲길의 개장은 오지 산촌이라 칭해지던 깊은 산간 마을에 새로운 사회관계를 낳았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 현재를 사는 산촌민의 존재가 숲, 그리고 탐방객 사이에서 의미하는 바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숲을 찾는 외지인인 탐방객이 마을에 들어옴에 따라 지역과 지역민은 물리적, 정신적 변화를 마주한다.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의 개장은 산을 오르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을 붙였다. 등산을 위한 적절한 옷차림을 갖추고, 구멍이 뚫리지 않은 등산화를 착용한 이는 탐방객이다. 탐방객 중 가깝게는 창원과 포항, 멀게는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 출신이 많다. 산길이 익숙하지 않은 탐방객을 안내하고, 숲의 역사와 생태 지식을 전달하는 이는 숲해설사다. 해설사는 유니폼과 같은 조끼를 입고 맨 앞에서 걸으며 탐방객의 안전을 살핀다. 그들은 산림청에서 교육을 받고, 정식 해설사로 인정받은 사람들로, 두천과 소광 주민 중에도 해설사가 된 이들이 있다. 탐방일, 점심시간 전후로 숲길에 나타나는 자가용을 탄 여성들은 두천리 또는 소광리 부녀회 소속 주민이다. 거점마을이기도 한 소광리와 두천리의 여성 일부는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방문자센터에서 정해진 일정과 탐방객 수에 따라 도시락을 만들어 점심식사 장소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맡는다.

숲길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는 문화와 경제를 매개한다. 해설사와 탐방객의 대화는 숲길에 산재하는 문화화된 자원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이며, 탐방을 위한 숙식을 제공하는 주민은 농민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 탐방객을 만난다. 또, 이러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가운데 숲과 마을이라는 공간의 분화는 자연과 사회라는 이분법적 인식의 경계를 다시 재편한다. 숲길에서 ‘천혜의 자연’을 만끽한 탐방객은 자연과 문화역사 양자의 매개자인 해설사의 설명을 수용한다. 탐방이 끝난 후에는 다시 사람이 사는 마을, 즉 사회

적 공간으로 들어와 주민이 제공하는 농촌의 음식을 먹고 하루를 마감한다. 이렇게 짜여진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트레킹 코스는 산림과 마을을 분할하는 숲길 입구에서 자연과 사회의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20세기 중반, 한국의 근대화 경로에서 포착된 문명과 야만, 사회와 자연이라는 계몽주의적 이분법은 보호구역으로 포섭된 자연을 여행하는 숲길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두천리와 소광리를 연결하는 산림이 외부자의 탐방 대상이 되면서, 마을주민과 숲의 관계는 또 한 번 전환기를 맞는다(장예지 2017: 284-285). 주민은 금강소나무숲이 오늘날의 푸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숲을 지킨 수호자로 인식된다.

#### 〈사례4-8: 숲길과 산불〉

금강송 숲길도 좋지만, 산불이 나면 다 끝입니다. 옛날 금강소나무 도벌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GMC가 다 베어 먹고 그랬는데, 늦게나마 사람들이 키우기 위해 무난히 애를 쓰고, 이제는 불도 안 놓고 산을 가꾸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불이죠. 불만 잘 안 나면 금강송 보호하는 거죠. (배기용, 두천1리)

약 50년 전만 해도 화전과 벌목 등으로 발가벗겨진 숲의 경관이 흔했음에도, 지금의 울창한 숲은 그러한 과거를 지워낸다. 오랜 시간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연을 가꾸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한 결과 훌륭한 풍광을 지닌 숲을 ‘보전’했다는 서사가 탐방객에게 전달된다.

탐방객과 마을주민은 두 번에 걸쳐 서로를 대면한다. 숲길에 오르기 전, 숙박을 하는 탐방객은 방문자센터를 통해 마을 내 지정된 민박집을 예약한 뒤,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안한 이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생태계 보호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목적이 자리한다. 현대 사회에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달리 말하면 개발의 압력에서 소외된 지역을 의미하는 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녹색연합 2008: 87). 때문에 생태계가 우수하다는 찬사, 즉 자연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었다는 수사에는 인위적 개입이 일으키는 ‘훼손’에 따른 경제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양가성이 함축되어 있다.

마을 내 민박업은 주민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숲길 조성에 참여한 NGO와 산림청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다. 외지인과의 왕래가 뜸한 산골 마을에서 새로운 사람들의 방문은 환영할만한 것이라기보다 불편한 일에 가까웠다. 새 길이 개통되고, 통신 발달의 수혜가 경북 산촌에도 전해졌지만 여전히 두천과 소광은 지형의 80% 이상이 산림인 지형적 특성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고령화된 마을에서 누군지도 모를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데다 연로한 주민은 탐방객의 식사와 잠자리를 살피는 일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현재는 두천리에서 6가구, 소광리에서 9가구가 숲길 민박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이 처음부터 탐방객을 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대도시에서 온, 여행을 다닐 정도의 여유를 갖춘 탐방객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일말의 걱정이 앞섰다고 한다. 가령 아파트에 비해 ‘열악하게’ 보이는 주거 환경과 편의 시설이 전무한 산지 농촌에서의 삶이 탐방객의 시선에서는 다소 후진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염려가 투영된 것이다. 탐방객과 주민 사이의 거리감은 단순히 서비스와 화폐를 교환하는 경제적 거래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지역민이 탐방객을 향해 느끼는, 이른바 경제적·문화적 ‘격차’는 진정한 환대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기제였다. 자연에 가까이 사는 산촌민에 투영된 이미지는 마을 주민 자신을 향해서도 굴절되어 이방인과의 관계에서도 균열이 발생했다.

환대는 탐방객과 주민 간 지속적 상호작용이 있는 후에 실현되었다. 탐방객이 ‘단골손님’이 되고, 그가 자주 찾는 민박집 주인이 ‘어머니’로 불리면서 관계 지형에도 변화가 생겼다. 원칙적으로 민박 예약은 방문자센터라는 컨트롤타워에서 총괄하지만 점차 민박집 주민과 탐방객 간에 일대일로 연락한 후 민박을 하러 마을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까다로운 도시인으로 여겨졌던 탐방객은 이제 ‘나의 집’을 찾는 손님으로서, 보다 가까운 존재로 인식된다.

손님과 주인 간 상호작용은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진다. 숲길이나 그 밖의 관광지 정보를 소개하거나 과거의 추억을 나누는 것이다. 이로써 주민은 탐방객과의 관계에서 산의 내부와 외부에 이중적으로 위치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방문자센터에서의 트래킹 예약 없이 숲길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



다. 하지만 지역민은 산불감시기간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산에 들어간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산림 자원 훼손이 금지되어 있지만, 산림청이 이를 정기적으로 감시할 여건은 갖추지 못했다. 또한 이미 수십 년 이상을 오갔던 길이기에 도시민이 잘 닦인 인도와 차도를 익숙히 횡단하듯 이곳 사람은 이정표 없는 구불구불한 길을 자유자재로 걷는다. 그러나 이들이 40~50년 전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입산하는 횟수는 현저히 줄었다. 이미 생활 여건이 마을에 갖춰져 나물이나 송이 채취 목적을 제외하면 산에 갈 일이 거의 없어진 까닭이다. 탐방객은 명확한 예약 절차를 거쳐, 정해진 일자에 해설사와의 동행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숲길을 걸을 수 있으나, 민박집 주인은 그러한 절차 없이 산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이제는 산에 잘 오르지 않는 것이다. 안과 밖의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숲을 오갔던 사람들은 숲 바깥의 마을에서 숲 안의 소식과 과거의 기억을 전하는 이중적 존재가 되었다. 탐방객의 시선에서 주민은 이분화된 공간의 안과 밖을 매개하는 주체인 것이다.

국지적으로 발견되는 화전터는 ‘자연’으로 채색된 듯한 경관과 대치되는 인간 삶의 흔적이다. 화전을 많이 했던 두천과 소광의 농업 관행 특성상, 지금도 산에 오르면 옛 화전지를 지천에서 발견할 수 있다. 평평한 지대에 쉼터를 마련해 통나무로 앉을 공간을 만들고, 화전 농가가 두고 간 디딜방아와 솔단지도 전시해 두었다. 거친 산생활의 일부였던 잡기와 농토가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와 산촌 문화라는 이름 아래 역사적 자원의 성격을 얻었다.



〈그림 28〉 화전민이 두고 간 솔단지(좌)와 화전지의 식생(우) © 장예지

탐방객은 군데군데 보이는 평평한 터와 화전민이 두고 간 솔단지, 물레방아 등을 보며 산림에 묵혀 있던 ‘화전의 역사’를 알게 된다. 또한 화전지에 움튼 식생이 창안하는 이차림<sup>41)</sup>은 인간의 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동식물상을 보여주기에, 그 자체로 사회적 장소다(Tsing 2005: 190). 화전지와 그것이 야기한 이차림, 그리고 이를 구술하는 주민의 존재는 모두 산림을 자연의 공간으로 환원하려 했던 모든 정책과 구상에 균열을 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은 찢이 개념화한 틈(gap), 즉 국가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전히 가 닿지 못한 지점을 말한다(ibid.: 195).

이 틈 속에 소광과 두천 주민들이 산림의 수많은 장소에 부여했던 의미들이 내려앉는다. 경관은 삶의 배경이나 플랫폼(platform)이 아닌, 삶이 지속되는 기념물이다(Ingold 2005: 54). 넬슨(Nelson)은 알래스카 원주민 코유콘(Koyukon)이 그리는 고향의 경관을 ‘의미들로 직조된 총체로’ 파악했다(Nelson 1983: 243; Ingold 2005: 54에서 재인용). 비록 산의 바깥에 살게 되었을지라도, 두천과 소광의 주민이 숲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는 방식은 언제나 그곳에서 함께한 가족, 친구, 가족과의 기억을 꺼내는 것이었다. 대왕송 바로 아래 살 때 만난 맹수와의 기억, 아무개 아버지가 모신 바위가 있던 터 등, 장소를 되뇌는 일은 곧 삶의 기억의 일부였고,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경관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잉골드는 이를 ‘거주’(dwelling)의 문제와 연관지었다. 경관에 거주함으로써, 일상의 활동의 일부로 포함됨으로써 한 장소가 ‘집’이 되는 수렵채집자(hunter-gatherer)와 같이, 이 곳 사람들에게 산은 수없이 수풀을 헤치며 오간 집이었다. 따라서 탐방객과 대화하는 민박집 주인은 오늘날 축적된 경관의 증인이자, 숲이라는 집의 주인이었다.

---

41) 토지 본래의 자연식생이 재해나 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파괴되어 그 대신 군락으로 발달한 산림

### 3. 송이산과 숲길 사이에서

#### 1) 소나무에 붙인 이름들

시대를 달리하며 울진의 소나무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각각의 이름은 그 이름이 붙었을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랜 역사에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나무를 ‘문화적 목적’으로 이용했다(Östlund 외 2002: 49). 소나무를 관리·보호하는 규범은 신라와 고려 때부터 존재했다. 조선시대에는 양질의 소나무가 있는 산을 ‘봉산(封山)’ 또는 ‘금산(禁山)’으로 정해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다. 소광리 일대의 금강송군락지도 숙종 6년(1680년)에 황장봉산으로 지정되어, 황장목을 확보하고자 무단 벌채를 금하는 구역을 표시했다(울진군청 2016: 14). 황장봉경계표지석과 황장봉산 동계표석은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을 걸을 때 탐방객이 마주하는 중요 자원이 되었다.

1994년 발견된 황장봉경계표지석은 금강송군락지 초입 소광리 광천계곡 인근의 자연암석에 새겨져 있고, 2011년 두천리 주민이 발견한 황장봉산 동계표석은 황장봉산 동쪽 경계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림 29〉 황장봉산 동계표석 표지판 © 장예지



〈사례 4-9: 황장목의 의미〉

누를 황(黃), 창자 장(腸) 자를 써서 창자와 같은 색이라 하여 황장목이라 부릅니다. 이 황장같은 색이 그 나무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황장목으로 쳐 줍니다. 금강소나무라 해서 전부 황장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척박한 땅에서 더디게 자라야만 황장목으로 태어납니다. 이 나무로 집을 짓거나 왕족들이 관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이 나무로 관, 집을 지으면 1,000년이 가도 안 썩는다 그래요. (박영호, 울진숲길 해설사)

금강소나무숲길 해설사는 3구간에 위치한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내부의 소나무 전시 공간에서 황장목에 관해 위와 같이 설명했다. 품종에 따라 소나무를 분류하는 근대의 분류법과 달리, 황장목은 목재의 사용 목적이 투영된 이름이었다. 금산과 봉산은 왕토사상에 입각하면 모두 왕의 소유였다. 그래서 조선조 한양으로 보낼 목재를 벌채할 때에는 “어명ियो.”라 외치고 나무를 베어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금산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일제의 대규모 벌채로 군락지 곳곳이 파헤쳐졌다. 그럼에도 300~4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소나무 약 3,000여 그루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수탈과 해방 후 벌어진 도남벌 가운데도 이 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던 까닭은 단순했다. 법적 제재 여부와 관련 없이, 벌목꾼들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고 높은 지대에 뿌리내렸기에 가공용 목재로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주민이 말했듯 ‘오지 중의 오지’에 있지 않았다면, 더 낮은 고도에 있던 굵은 소나무와 같은 처지로 몰렸을 것이었다.

조선의 봉산에 자라는 소나무는 왕을 위해 존재하는 나뭇의 문화적 특질을 지녀 수백 년 간 보호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 식민지의 문화는 독해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황장봉산의 나무는 단지 ‘자연’에서 얻은 군수 물자와 건축 자재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울진 금강송을 포함한 한반도의 소나무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적송’(赤松)은 소나무의 영문 이름 'Japanese Red Pine'을 한자어로 번역한 단어로, ‘일본 소나무’가 모국과 식민지의 소나무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둔갑했다. 제국은 식민지의 산림을 수탈 대상으로 삼았으나 각각의 자연물에 이

름을 부여하는 문화적 행위에 있어서는 식민자의 권력이 여과 없이 표출되는 것이다.

적송은 ‘춘양목(春陽木)’이기도 했다. 그 연원은 이 곳 소나무가 황장목으로 지정된 조선조까지 올라가는데, 춘양에서 강물을 이용해 한양으로 나무를 운반했기에 ‘춘양에 모이는 나무’라 하여 춘양목이라 불렀다. 일제강점기에도 강원 남부와 경북 각지에서 춘양으로 나무가 집하됐고, 이는 별목이 한창이던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춘양역은 울진 뿐 아니라 인근 산간지방에서 반출된 목재들의 집하장이었기 때문에 춘양에 집결한 나무를 통틀어 ‘춘양목’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울진에서 금강송이라 불리던 소나무는 춘양에 도달해 타 지역 나무들과 함께 춘양목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소광리 산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중 품질이 좋은 일부가 ‘황장목’이 되고, 황장목을 포함해 목재 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춘양목이 되어 수출되거나 국내 제지업계의 손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적송과 황장목, 춘양목은 오늘날의 ‘금강소나무’와 하나의 맥으로 이어진다.

#### 〈사례 4-10: 소나무의 이름〉

붉을 적, 솔 송 자잖아. 금강소나무의 금은 쇠 금. 누렁잖아. 황장목도 속이 누렇다 라는 의미고. 춘양목은 일제 강점기 시대 붙여진 말이라. 춘양이 별목한 나무 집결지야. 그 소나무를 수송하기 위해 일본 사람들이 기차역을 만들었어. 나무가 좋잖아. 일본으로 (나무가) 반출됐는데, 춘양서 왔다 해서 춘양목이 된 거지. (해방 후) GMC 있었을 때는 죽변 쪽으로도 가. (전민식, 두천1리)

전민식씨의 설명에 따르면, 적송과 황장목, 금강송의 공통점은 소나무의 ‘색’이다. 붉은 빛을 띠는 나무 특성이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춘양목은 울진을 포함한 타 지역 소나무를 일컫는다. 전자의 두 이름이 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것과 달리, 이제 가공목으로서, 상품이 된 나무는 고유한 이름을 잃고 상품이 도달하는 지역명에 자신을 얹는다. 나무는 산업화 이전 다용도의 자원이었으나 20세기의 산업화 이후 집단적 대량 별목과 함께 하나의 원재료(raw material)로 바뀌었다는 설명(Östlund 외 2002: 57)과도 상통한다. 고유의 문화적 특질을 가졌던 소나무 역시 주요 별채 대상에

포섭되면서 그것이 춘양으로 반출될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소비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품의 원재료로 인지될 뿐이다. ‘춘양’은 상품이 최종 목적지를 향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이곳에 모인 모든 나무를 통칭할 만한 상징성을 갖는다.

〈사례 4-11: 적송의 의미〉

왜정 때 일본놈들이 다 베어 먹은 걸 적송이라 했어. 왜적(倭敵)이 베었다 해서. (이석원, 두천1리)

〈사례 4-12: 적송의 의미〉

지금의 금강소나무를 적송이라 하는데, 이건 일본 사람들이 지어냈어. 왜 적송이냐. 속이 붉어서. 지금은 적송이란 소릴 못하게 하잖아. (박영호, 소광2리)

적송의 ‘적’은 붉을 적(赤)을 쓰지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석원씨는 식민지배기 한반도의 적(敵)이기도 한 일본이 지은 소나무 이름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적의 소나무’로 적송을 이해했다. 그러나 이는 동음이의어에 따른 혼동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적송을 속이 붉은 소나무의 일종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이는 일본식 표현이므로 이제는 ‘우리의 소나무’인 금강송이라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박영호씨가 언급했듯 적송은 일본인들이 쓰는 말이므로 한국 소나무에는 한국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숲해설사들은 금강송의 연원을 소개할 때 항상 ‘적송 대신 금강송’이라 불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송을 금강송이란 이름으로 대체하는 일은 곧 빼앗긴 우리의 소나무를 다시 우리의 나무로 되찾는 것이기도 했다.

〈사례 4-13: 숲해설사가 말하는 적송〉

적송이란 말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강송, 금강송이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적송이란 말은 일본의 잔재입니다. 일제시대 때 japanese red pine이란 이름으로 금강송을 등록해버려서 우리는 다시 등록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 한 번 지정하면 다른 나라에서 못 써요. (김병철, 숲해설사)

2015년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자생식물 영어 이름 목록집>을 발표해 소나무의 영어 이름을 ‘한국 적송(Korean red pine)’으로 표기하기로 했다.<sup>42)</sup> 두천과 소광에서는 ‘적송’ 자체를 일제 잔재로 보고 금강송으로 대체해 불러야 한다고 했으나, 국립수목원의 방침은 적송 앞에 ‘한국’을 붙여 적송의 한 종류로 한국 적송을 배치한다. 이러한 차이는 소나무의 대표성 문제와도 관련된다. 사실 금강송은 금강산 줄기에서 시작해 태백산을 중심으로 강원과 경상권에 집중 분포하는 소나무이다. 이에 금강송의 재질이 뛰어나고 우수한 수형을 보유한다 해도,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일반을 칭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이 말하는 적송 = 금강송이라는 도식은 울진의 금강소나무가 한반도 소나무의 대표 격이라는 인식을 내포한다.

산림청과 울진군청도 금강소나무 보전 및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 이른바 ‘보전적 활용’이라는 기치 아래, 금강소나무를 보전하면서 울진숲길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2013년에는 금강소나무 군락지 인근에 울진국유림관리소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를 신축해 생태경영림과 숲길 탐방로 조성 및 운영관리,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한다(ibid.: 14-15). 울진군청 역시 금강소나무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그 생태적 가치를 표방해 ‘생태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오늘날,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명명하는 금강소나무는 지역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것은 물론, 춘양목의 시대와는 다른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 2) 탐방객의 숲길, 주민의 송이산

탐방객의 길은 안전하다. 또한 자연을 닮아있다. 자연에 ‘가까운’ 길을 만든다는 취지로 숲길은 데크 설치를 최소화했다. 작은 도랑 사이를 잇는 건널목은 통나무를 이어 만든 나무다리를 활용했다. 숲길과 통나무 다리는 모두 숲에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정교한 개발 계획과 시설 설치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인공물이지만 흙과 나무 등 ‘자연’의 재료를 활용했기에 숲의

---

42) 한겨레, 2015년 8월 10일, “소나무가 일본 적송? 자생식물 영어이름 바로잡는다”

자연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졌다.

예약탐방제 원칙을 고수하는 울진숲길은 사고 및 이탈 방지를 위해 해설사의 동행 없는 산행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지지대 없이 가파른 길목을 오를 때에는 해설사의 안내 하에 질서를 지켜 예기치 못한 사고를 피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탐방객의 숲길은 구간이 정해져 있고, 안전한 통행을 요하므로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만들어진 샛길은 제대로 된 길이 될 수 없다. 샛길은 숲길과 대비되는, 막아야 할 길이다. 다시금 사람들이 산에 오르기 시작했지만 수십 년 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샛길과 지름길을 만들어 또 하나의 생활 세계를 일구었던 것과 달리, 오늘의 숲길에서는 규칙과 제도가 탐방객의 움직임을 제어했다. 때문에 샛길이 아닌 1-5구간의 ‘숲길’과 산림청이 전용하는 임도만이 공식적인 길의 지위를 갖는다. 다만 임도와 탐방객의 길은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탐방객은 임도 통행을 원치 않는다. 자동차가 오가는 임도는 자연스럽지 못한 인위적인 길인 까닭이다. 숲길 역시 조성 초기 길을 내고, 정돈하는 인위적 작업을 거친 곳임에도, 임도는 숲을 ‘관리’하는 길이라면, 숲길은 자연의 길로 인지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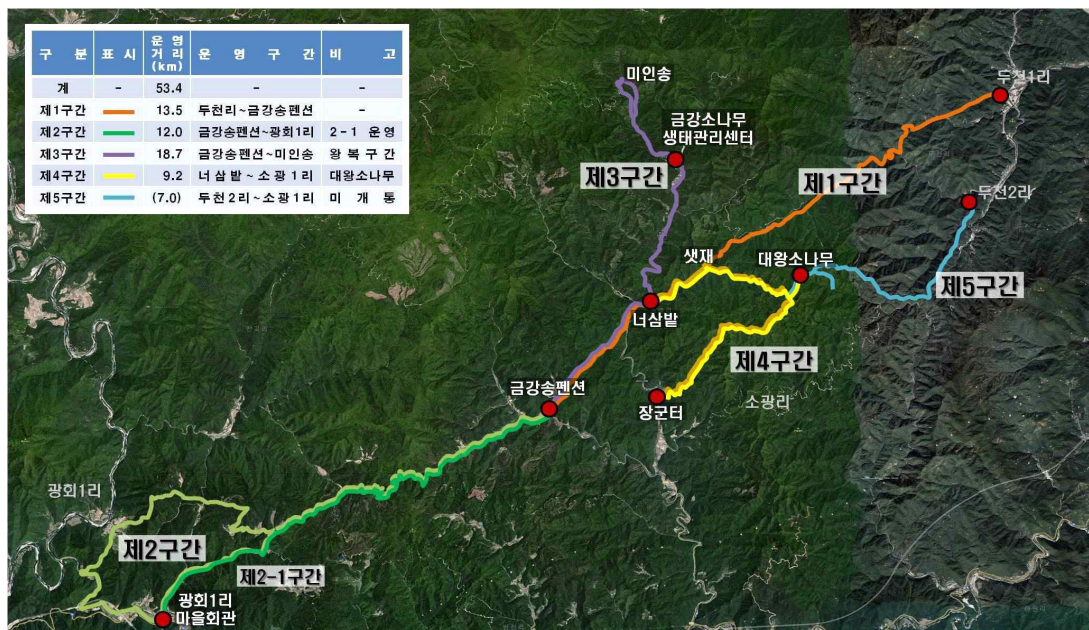


〈그림 30〉 임도와 숲길 사이 © 장예지

숲길이 난 산은 곧 가을철 두천과 소광 사람들의 송이산이기도 하다. 숲길과 송이를 따라 다니는 송이길은 겹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송이길은 송

이를 찾는 주민의 시선과 움직임에 따라 언제나 새로 생겼다 사라질 수 있고, 정해진 길이 있다기보다 샛길의 연속으로 복잡한 선들을 그리며 지워졌다 생겼다 하기를 반복한다. 안전은 채취자가 각자 책임져야 할 몫이다. 수십 년간 산에 오르기를 반복한 그들에게 산은 매우 익숙한 공간이므로 안전이 최우선이 되진 못한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귀한 송이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해진다.

숲에서 탐방객과 주민은 잘 마주치지 않는다. 이는 산을 찾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데서 기인한다. 전자는 유명세를 탄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직접 보기 위해, 그리고 숲길을 걸으며 자연 환경이 주는 안락함과 상쾌함을 맛보려는 목적으로 깊은 산중 마을을 찾는다. 때문에 트래킹 중 탐방객들은 “금강소나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나무가 안 보이지?” 라는 물음을 던진다. 군락지는 트래킹 코스 전체에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역에 도달해야 볼 수 있다. 그러나 숲길이 곧 금강송 군락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트래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락지의 위치를 궁금해 한다. 질문에 답해야 하는 해설사는 조금만 더 가보자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림 31〉 금강소나무숲길 지도 (출처: 남부지방산림청)



위의 <그림 31>에서와 같이, 금강소나무숲길의 지도는 각 목적지를 지시하는 점들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어져 있다. 이는 수송기(transport)의 길과 같이, 다채로운 흔적(trace)이 아닌 연결 장치(connector)와 유사하다 (Ingold 2007: 85). 4-5시간 길을 걸어야 하는 탐방객은 도보여행가임에도, 언제나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자유롭게 갈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코스를 숲해설사라는 가이드의 지시와 동행 하에 걸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지도가 지시하는 길의 굵은 선 바깥으로는 가는 일은 곧 ‘이탈’행위가 되므로 탐방객이 찾는 숲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들의 방향과 위치를 한정한다.

금강송과 대왕소나무를 찾아 3구간 금강송경영림이나 4구간에 도착하면, 100년 수령 이상의 오래된 소나무가 탐방객을 반긴다. 이곳에는 또한 수령 60년 이상의 금강송 문화재목재생산림이 있는데, 4,137그루의 나무가 산림청의 관리 대상에 속한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 광경을 보며 사진을 찍고, 웅장한 소나무에 감탄을 보낸다. 대왕소나무와 500년 소나무, 미인송 등은 산림청이 보존하고 탐방객이 찾는 나무인 것이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표시된 소나무는 문화재목재생산림으로, 오랜 시간 보존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흰 줄무늬는 산림청과 탐방객의 나무라는 표지이기도 하다.



<그림 32> 문화재목재생산림을 식별하는 표시 © 장예지

하지만 주민들에게 나이 든 소나무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너무 오래 산 소나무 근처에는 송이가 자라지 않는다. 핵심은 채취자가 채취 가능한 산림 지대의 경계와 송이가 자랄만한 소나무를 찾는 것이다.

송이를 찾는 길 역시 십이령길 높은 고개를 올라 유명한 소나무를 보려는 탐방객의 동선과 달라진다. 무엇보다, 송이 채취자 중 고령층이 다수이므로 이들은 고지대까지 오르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뿐더러 그 곳에는 송이가 잘 자라는 소나무가 많지 않으므로 숲길과 송이길은 비슷한 듯 다른 길로 뻗어 나가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찾는 소나무는 20-30년으로, 비교적 어리거나 젊은 수령의 나무다. 탐방객이 500-600년 수령의 고목(古木)을 찾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채취자의 젊은 소나무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반면 나이 든 소나무는 문화적 유산(cultural legacy)으로서 주민이 아닌, 국가와 국민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상징이다(Östlund 2002: 62).

국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금강송군락지의 경계를 획정해 둔 것처럼, 두천과 소광 주민들도 마을별로 송이를 딸 수 있는 구획을 내정한다. 대부분의 마을은 서로 간의 '약속'으로 경계를 정하는데, 이는 마을과 타 마을을 가르는 표지를 두기보다 능선과 골짜기가 난 모양, 도로의 형세 등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나무를 경계의 지시물로 선정한다. 아래의 〈그림 33〉은 두천1리와 2리의 채취 구역을 분별하는 화살표 표시이다. 특정 사물을 표지로 삼을 뿐인 경계 획정은 탐방로 곳곳에 경계 표시와 지도로 위치를 알리는 숲길 코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화살표가 그려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선의 안과 밖을 식별할 장치는 존재할 수 없으며, 접경하는 마을 사람들 간의 오랜 약속만이 송이를 찾아 확보하는 사람들에게 인식상의 경계를 판단케 할 뿐이다.





〈그림 33〉 송이 채취 경계를 표시하는  
화살표 © 장예지

두천리와 소광리에서 오늘날까지 송이를 따는 사람들은 수십 년간 산과 들을 오간 개인사를 지녔다. 산이 많이 우거졌다지만 여전히 눈에 흰한 것이 산길이었다. 1950~70년대 화전민으로, 산판꾼으로 숲을 드나들었던 이들은 이제 송이채취자로서 한정된 기간에만 산에 들어간다. 채취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은 결국 송이가 어디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산에서 나와 계산기를 두드리며 송이 단가를 셈해볼 때에야 총 생산량에 주목하지만, 일단 산에 들어가면 품질 좋은 송이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송이를 찾아가는 길 역시 한 두 가지로 고정될 수 없다. 매해 같은 장소에서 송이가 자라는 것이 아닐뿐더러 작년에 송이가 잘 났던 구역이 올해는 흉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금씩 위치를 달리하며 자라는 송이를 찾는 사람들은 나름의 묘(妙)를 발휘해야 한다. 이 때 채취자의 묘는 어디선가 머리를 내밀고 있을 송이에 대응해 규칙성과 불규칙성 모두를 내재한다. 따라서 송이길을 지도로 그릴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그 길을 그려 본다면 이는 채취자의 몸짓(gesture)과 걸음(walk)이 그대로 그려내는 스케치 지도와 비슷할 것이다 (Ingold 2007: 85). 탐방객의 움직임은 계획에 따른 지도가 먼저 존재하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라면 송이길의 지도는 사람들 상호간의 움직임이 지도를 그려내고, 또 계속해서 새로 길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규정지어지지 않은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송이가 있는 곳을 따라 나는 송이길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보와 차도처럼 정해진 방향으로의 이동을 담지하지 않는다. 송이는 소나무의 잔뿌리 근처에서 자란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원론에 불과할 뿐 모든 소나무 아래에서 송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눈에 잘 띄게 솟아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송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산림식물생태계에 대한 경험적 이해와 더불어 높은 주의력이 요구된다. 핵심은 채취자가 채취 가능한 산림지대의 경계를 구분하고, 그 경계 내부에서 송이가 자랄만한 소나무를 찾는 것이다. 이에 주민이 만드는 송이길은 일반적인 산길처럼 장시간 사람들이 걸으면서 만드는 길이라기보다, 송이를 따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만드는 복수(複數)성을 갖는다.

## V. 결론: 숲에 난 길들

본 논문은 개인과 마을 공동체, 국가가 어떻게 산림을 전유해 나가는지 살피고, 산림 내부에서 이뤄지는 그들의 상호작용이 창안하는 총체적 환경을 소묘해보고자 했다. 인간이 세계 내에 자신을 두고 다종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을 창안하는 관계적 시각(Ingold 2000)에 따라, 생성과 해체, 재생성을 거듭하는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적 경계를 따라가 보고자 한 시도이기도 하다. 경계에 균열을 가하거나, 때로 이를 공고하게 만드는 기제는 여러 형태의 ‘길’이다. 길을 만드는 행위는 한 지점과 다른 지점을 연결하기 위함이다. 두천리와 소광리 산림경관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열쇳말은 여러 갈래의 길이다. 어떤 길은 처음 생긴 뒤로 그 목적을 달리하며 꾸준히 살아 남지만, 다른 길은 쉬이 사라지기도 하고, 잊혀진 뒤 다시 소생하는 길도 있다. 누가, 그리고 왜 길을 만드는가 하는 점은 길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또한 다종다양한 길의 생성과 지속, 소멸은 인간과 자연, 사회 사이의 매개와 단절을 야기한다.

길을 만드는 주체는 시기를 달리하며 다양하게 등장한다. II 장에서는 해방정국에서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산림이 전유된 양상과 그것이 산림과 마을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다뤘다. 조선 후기부터 줄곧 울진과 타 지역의 상업망을 연결한 십이령길은 굴곡진 보부상과 선질꾼의 역사를 품었다. 하지만 이 길은 도부꾼 여성이 홀로 가정을 이끌기 위해 장사하러 오르거나, 소를 팔려는 사람, 또 소에게 먹이를 주려는 마을 아이들이 오르는 곳이기도 했다. 십이령길 사이사이 샛길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와 농사지을 땅을 찾는 이들일 것이었다. 땀감이나 비료로 쓸 목적으로 잡목과 낙엽을 끌어내리는 마을 남자들, 불을 놓기 좋은 평평한 땅을 찾는 사람이 만든 샛길 등이다.

갖가지 길들이 사라졌다 생기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법과 제도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국가의 힘은 미약했다. 사람들은 ‘법이 없었다.’라고 당시를 기억할 만큼, 깊은 산 속까지 미칠 정도의 행정력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화전은 산림 내부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인간의 적극적인 전유이자, 자신과 가족의 장소를 마련하는 행위였다. 임야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리

적·생태적 조건, 그리고 빈곤한 경제적 현실은 법의 존재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지었다. 두천과 소광에서 화전을 했던 주민은 선대(先代)로부터 배운 생태적 지식과 자신이 숲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당한 화전지를 모색하고, 노동을 통해 작물을 생산했다. 또한 이들의 생태적 삶은 새로운 문화를 창안했다. 사회적 관계와 노동 방식은 가정(household)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화전민의 거주지인 독가촌과 마을은 경계가 명확한 공간으로서의 마을이 아닌, 품앗이와 울력, 잔치 등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같은 ‘마을 사람’으로서 서로를 인지한다. 화전지로 이어지는 길은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소유관념을 보여주는데, 법에 의해 국유와 사유가 구분되는 것과는 다른 그들만의 원리로 자신과 타인의 화전지를 가름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산을 오고 가는 데 있어, 마을 내부의 집합 의식과 자치 원리가 작동했음을 방증한다.

십이령길과 샛길은 사람이 만들지만, 벌목업이 성행한 뒤 들어온 GMC 차량은 그 무게를 견뎌 보라는 듯 무자비하게 숲으로 들어왔고, 나무를 싣고 나갈 길을 냈다. 나무를 베는 일 뿐 아니라 산판길을 닦는 노동의 몫도 산판꾼에게 돌아갔다. 마을로 들어오기까진 야트막한 하천을 따라 이동했다면, 본격적으로 산에 오를 때에는 최대 고도로 올라 양질의 소나무를 실었다. 소나무 중에는 국가에서 허가받은 나무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인 자를 받지 못한 도벌목이 함께 적재되었다. 국가가 승인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규칙적으로 쌓인 나무들 속에 혼재되어 있었다.

여러 길들로 이어진 평지의 마을과 산림은 그 자체가 총체적 경관을 이루며 하나의 생활세계로 작동했다. 사람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나무를 베고 화전지를 만든 한편 산의 신성함을 숭배했다. 산림에는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이 깊숙이 결부되어 있는 동시에 자연의 신이 거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장소의 특성을 내포했다. ‘거주(dwelling)’는 인간과 비인간의 일상적 활동으로 경관을 빚어내는 방식이다(Ingold 2000). 따라서 독가촌 가족과 그들의 화전지, 야생 동물과 산신이 거주하는 산림은 마을이라는 사회적 장소와 분리되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 그물과 같은 길들이 교차하는 하나의 연결망(meshwork)이다. 따라서 ‘산림의 경관’도 지형적으로 산림으로 분

류되는 공간과 동일시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non-human)이 맺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자연적 경관의 성격을 띤다(Tsing 2005).

하지만 이 길들은 68년 무장공비침투사건과 이후의 국도 건설로 점차 사라져갔다. III 장에서는 1968년 이후 기존의 셋길이 사라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길들이 화전정리사업과 산림녹화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군사정권의 집권을 전후로 국가 정책과 관료의 권력이 산림생태계를 포함한 마을 공동체, 그리고 주민 개개인에게 침투하기 시작했다.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산림을 장악한 이후, 연이은 공비 퇴치와 화전민 이주 정책으로 산림 입산이 일시 통제되었다. 화전민의 거주지인 독가촌은 ‘취약지’로 명명되고 그들이 오갔던 길은 제 기능을 잃었다. 국가의 적이 아군의 길을 점령하지 않도록 지점들을 ‘연결’하는 길은 서둘러 그 연결을 해체해야했다. 1970년대 36번국도 개통 공사가 시작되면서 상인들도 힘든 산길을 오를 필요성은 점차 희미해졌다.

미미했던 국가의 존재감이 극명하게 도드라지며, 마을과 산림을 잇는 경관은 점차 분리되고, 국가가 원하는 푸르고 단순한 산림의 형태가 주조되기 시작했다. 강력하고 엄격한 법의 언어는 국가의 정책 집행을 정당화했는데, 이때의 법은 박정희 정권 고유의 창조물이 아닌, 일제강점기 삼림법에 뿌리를 두고 근대의 계보를 이었다. 제약 없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의 의지가 산림 전유에 일차적 영향을 가함으로써 법이 통치하는 문명화된 자연과 사회를 창안하는 것이다. 양자의 경관의 분리는 자연과 사회의 경계가 보다 공고해지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국가가 구상하는 자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상징화하는 작업이었다. 자연의 푸르름과 강대국의 이미지를 동시에 표상하는 울창한 삼림 경관은 인간 사회와는 확연히 구분된 ‘자연’이다.

이제 산림, 특히 국유림을 개인 마음대로 전횡하는 것은 ‘불법’으로 낙인 찍히고 그에 대한 처벌도 강해졌다. 산림청 공무원이 산촌지역에서 가장 큰 실권을 가진 관료 중 한 부류였던 때도 이 당시였다. 그러나 GMC가 낸 산판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가 산림을 ‘관리’하는 데 용이한 임도로 변모해 국가의 자연보호 정책 수행을 뒷받침했다. 녹화를 위한 갖가지 금기

사항이 주민들의 일상적 행동을 통제했고, 조림과 사방은 동원의 논리에 따라 산림계가 꾸려져 마을 차원에서 이뤄졌다. 산림계의 연원은 조선시대의 자체 원리에 따라 마을마다 규범과 조직을 구성한 송계에 있어, 이는 과거의 규범이 현재의 법으로 화(化)한 ‘법의 이중적 제도화’의 결과였다(Bohannan 1965). 하지만 새롭게 제도화한 법은 단순히 과거의 자기복제물이 아닌, 강한 명령과 통제를 바탕으로 국민을 동원해 녹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변형된 형태였다.

강력한 법이 마을에 실질적으로 현현함에 따라, 마을 내 집합의식과 국가가 주입하는 산림의 ‘도덕’ 사이에는 어긋남이 발생했다. 화전정리사업은 마을 사람끼리 공유했던 화전지에 대한 소유 의식을 와해했다. 근대적 소유 관념에 따라, 소유자만이 산림을 완전 전유한다는 원칙이 보다 강하게 부과되어 국유림에 농토를 만든 화전민은 자신이 일시적으로 점유했던 땅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화전정리는 나름의 기준으로 화전지를 자연의 공간인 산림 또는 사회적 공간인 경작지 중 하나로 편입시키는 목표도 있어, 이는 녹화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자연과 사회의 공간을 분할하는 작업이었다.

강제적인 녹화활동으로 주민은 산림의 적극적 전유자에서 수호자로 변모했다. 정해진 순번에 따라 산불을 지키고, 농번기 노동을 하루, 이틀 포기하면서까지 한나절씩 나무를 심는 강제적 실천은 도덕의 내면화로 이어졌다. 즉 국가와 동일한 위치와 시선으로 산림을 ‘바깥’에서 감시하고, 스스로 나무를 심어 그 경관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림의 도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두천과 소광의 주민이 국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응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역시 나름의 전략으로 다시금 산에 올랐다. 두천2리의 애림계와 오동산계는 조선조 촌락공용림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새로운 법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마을의 산으로 인식되었던 산림 일부를 국가가 취하게 되면서, 이를 마을의 소유 하에 두려는 계원은 국가와 경합했다. 또한 절대적 통제 상황 하에서도 생계를 위해 그 법망의 틈을 비집고 입산을 감행하는 이들이 존재했다. 화전을 그만두게 된 이유도 단순히 법적 금지 조치에 따른 순응을 넘어, 적극적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내린 선택 중 하나이기도 했다. 산림계와 대부조림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동원해 산림을 개조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적 제도이나 모두 그 이전 시대의 관습적 토대에서 발현했다. 푸른 자연을 주조하는 과정에서 법은 도덕을 승인했고, 그 기저에는 지역민이 공유했던 관습과 규범이 자리 잡는 것이다.

Ⅳ 장이 다루는 ‘오늘’의 산림의 모습은 공시적인 현재의 시점에 머물지 않고, 이전 시기의 산림에서의 변화가 축적된 다층적 경관을 포함한다. 산림 녹화사업의 성공으로 산에 남은 길은 임도와 주민들이 이따금 산에 올라 나무와 버섯을 채취하기 위한 샛길뿐이었다. 이 샛길마저도 산불조심기간이면 입산금지 조치가 강해져 크게 이용되지 않았다. 보호구역 설정은 산림 자연과 인간의 활동 장소를 명확히 구분해, 양자의 이분법적 경계를 인식적, 시각적으로 보다 선명히 한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가 꾸준히 실행해 온 ‘보전’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연의 원형을 복원한다는 데 있으나, 이 또한 인간의 적극적인 전유 의지가 개입되므로 산림은 사회적 장소로서의 성격을 띤다. 훼손과 보전은 모두 인간과 동식물이 행위자가 되어 어떤 장소를 창출하는 교란(Disturbance)의 일부인 것이다(Tsing 2015).

2000년대 들어 개통한 울진숲길은 잠잠해진 숲에 다시 활기를 띄웠다. 고립된 자연의 공간을 개방해 시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묵혀 온 십이령길을 ‘복원’하고, 숲에 묻어 있던 사람의 흔적들 - 공비 침투로, 화전민 집터, 묵은 논밭 등 -을 ‘문화’ 자원으로 탈바꿈했다. 보호구역 지정으로 산림의 ‘관리자’이자 ‘소유자’인 산림청만이 숲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숲길 개통은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간을 추구했다. 다만 이제 숲길과 마을 사이에는 들어감과 나감이 확연히 표시되는 ‘입구’를 두어, 두 개의 상반되는 장소를 매개하는 영역을 만들어 두었다.

숲길에서 탐방객이 마주하는 광경은 축적된 경관이다. 울진숲길에서 홍보하는 문화자원도 사람들이 산림에서 행했던 다채로운 행위가 산림 생태계에 녹아든 결과물이다. 박물관이 된 숲에는 사람의 역사가 묻어 있었다. 삶의 지속을 내재하는 경관은 곧 의미들의 총체였다. 따라서 마을의 ‘외부인’인 탐방객을 마주하는 두천과 소광리 민박집의 주인은 산의 바깥에서 산의 추억을 나누는 이중적 위치의 존재이자 경관의 증인이다. 보호구역 및 입출구의 경계선이 명료한 숲길에서 주민의 존재는 자연의 공간의 사회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따라서 경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울진군의 자란이 된 송이와 금강소나무 역시 역동(dynamics)의 경관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소산이다. 송이는 다채로운 종들이 조화와 충돌을 일으키는 교란이 빚어내는 ‘아상블라주(assemblage)’의 총체적 환경의 산물이었다(Tsing 2015). 하지만 송이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규약이 송이를 따는 마을마다 생겼다. 마을과 마을에 포함되지 않는 곳을 결정짓는 경계는 행정구역에 의한 물리적 경계 뿐 아니라, 공동체의 바깥을 상징하는 외곽지대에 의해 보다 선명해진다. 상품의 가치를 얻은 송이를 채취하게 된 주민은 이러한 아상블라주에서 자신의 경험적 지식과 감각, 즉 메티스(metis)로 송이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스콧 2010[1998]). 송이산에서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을 구분하는 의미는 사라진다. 모든 행위자의 활동이 축적된 산림에서 메티스 역시 사회적 지식이 아닌, 아상블라주의 지식이다. 이는 과학을 담지한 임학연구자의 방식과는 상반된다.

길은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를 분리·매개한다. 평지와 산지라는 지형의 차이가 공간상의 분기를 야기하는 이상, 양자를 연결하는 통로가 필요했다. 이 통로가 내재하는 역사는 한 산간 마을에서 자연과 사회라는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는지 보여준다. 물리적 존재인 길을 오가는 주민과 동물, 관료의 움직임은 자연과 사회라는 상이한 개념에 대한 인식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양자 사이를 유동하게 만들었다. 산림생태계는 상인과 농민, 산림공무원 등 다양한 목적과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을 마주했다. 그들에게 선택된 몇몇 나무와 식물은 마을의 자체 규약 혹은 새로운 법적 언어에 포섭되어 종교와 경제, 정치의 영역에 내려앉았다.

인간은 산림 생태계에 ‘훼손’과 ‘보전’이라는 극단의 어휘 아래 분류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교란을 일으켰다. 화전과 벌목, 조림과 사방, 그리고 오늘날 송이산 가꾸기와 보전 프로그램은 산의 형태와 경관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주체를 경관 외부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산림 내부의 다양한 동식물과 그들이 이루는 생태계 역시 경관에 변형을 가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였다. 산림의 천이(遷移)와 산불, 특정 수종의 우점 현상 등은 언제나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경관의 내부에서 개인과 집단, 국



가가 갈등과 협력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산’에 대한 도덕과 정의(正義)가 탄생해 오늘날의 녹색 산은 이를 표상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결국 우리가 하나의 공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유동성을 보여준다. 공고해 보이는 듯한 안과 밖, 자연과 사회 등의 경계는 인간과 비인간이 빚어내는 아상블라주로 인해 언제나 다른 형태로 변화해 갔다. 경계의 변화는 마을이라는 국지적 공간을 넘어 우리 삶의 방식과 토대도 종전의 그것과 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민지의 문법과 근대의 조건, 냉전 하 권위주의적 국가 체제의 흔적은 작은 산촌에 축적된 경관으로 남아있는 까닭이다. 사회가 언제나 새롭게 구성되는 가운데, 자연은 점차 외부화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해 나갔다. 하지만 축적된 경관에서 보듯 자연은 끊임없이 사회 안으로 들어왔다. 사회와 국가가 구축되는 역사와 자연의 역사 간 구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 참고문헌

### 〈논문·단행본〉

강만길

- 1981 "일제시대의 화전민 생활," 『동방학지』 27: 155-203  
"일제시대의 화전민 생활(하)," 『동방학지』 28: 165-217

강원도

- 1976 『火田整理史』, 강원도

공선옥

- 2002 "[공선옥 마흔에 길을 나서다] 떠나간 혹은 떠나온, 경북 봉화 화전민 마을," 『월간말』 22-29

김도현a

- 2010 "울진 십이령 셋재 성향사와 보부상단," 『가노가노 언제가노 열두개 언제가노』, 울진문화원  
"울진·봉화지역 선질꾼의 활동과 문화", 『가노가노 언제가노 열두개 언제가노』, 울진문화원

김도현b

- 2012 "법의 도덕성: 에밀 뒤르켐의 법사회학," 『법과사회』 43: 243-270

김동수

- 1974 "강원도 화전정리사업에 대한 소고," 『한국임학학회』 22: 7-17

김사랑

- 2006 『태백산맥』 노트북

김종철

- 2011 『산림녹화 성공 기적의 나라 한국』 한국임업신문

김주영

- 2013 『객주 10』 서울: 문학동네

김충원

- 2017 "공동관리 방안으로서의 생태관광 평가 -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홍식

- 1975 “마을 空間構成 方法에 대한 한국 傳統 建築思想 연구,” 대한건축학회 45-50

남근우

- 2000 “‘신민족주의 민속학’의 방법론 재고,” 『역사민속학』 10: 147-171  
경북: 남부지방산림청

- 2014 『남부지방산림청 90년사』 경북: 남부지방산림청

노익상

- 2000 “뚱뚱이 잡아 길 떠나는 화전마을 사람들,” 『월간말』 124-128

녹색연합

- 2008 “울진 금강소나무림 지역 숲길 조성 기본계획” 남부지방산림청

문만용

- 2010 “이중의 녹색혁명 - 박정희 시대 식량증산과 산림녹화,” 『전북사학』 36: 155-184

문순홍

- 2006 『생태학의 담론』 서울: 아르케

민병근

- 1995 “화전민의 생태관행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호석

- 2001 “경북 화전지역의 농업기술 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 『협동조합연구』 24: 31-57

배관호·조현제·홍성천

- 2003 “위진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일대 산림군락의 식생조성 및 구조,” 『한국임학회지』 92(6): 536-544

배병일

- 2008 “송이採取에 관한 山林契의 慣習,” 『토지법학』 24(1): 77-97

- 2016 “마을재산의 소유권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연혁적 연구,” 『법학논고』 53: 269-297

배영동

- 2013 “화전농업의 기술과 전승지식의 의의-20세기 경북 영양군 수하리의 사례,” 『비교민속학』 51: 59-91

배재수·강영심·노병완·주린원

2001 『한국의 근·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 서울: 임업연구원

배재수·이기봉·오기조 지히로

2007 『1970년대 산림녹화정책 - 1차 치산녹화10년계획 수립 및 화전정리사업』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1980 『화전정리사』 산림청임정연구회

1997 『한국 임정 50년사』 산림청

2017 『산림청 50년사』 산림청

산림조합

2012 『산림조합 50년사』 산림조합

신민정

2011 “한국 정부의 화전정리사업 전개과정과 화전민의 실태(1965-1979년),” 『경제사학』 59: 69-103

2011 “화전민호수의 변화요인 분석: 강원도를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10(2): 85-98

신종원

2002 “한국 산악송배의 역사적 전개”, 『한국의 산악송배와 지리산 성모천왕』 한국종교사연구회

안승택·이경묵

2015 “기술과 사회, 중심과 주변을 함께 보기: 역사인류학으로부터의 탐색,” 『역사와현실』 98: 381-411

오명석

2012 “지식의 통섭(通涉)과 인류학,” 『비교문화연구』 18(2): 175-222

엘리너 오스트롬

2010[199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윤홍근·안도경 옮김, 서울: 랜덤하우스

옥한석

1985 “한국의 화전농업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학회』 33: 68-90

2001 “한국 화전농업의 발달과 산지촌락의 형성,”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요약집

울진군

2001 『울진군지』 경북: 울진군청

윤여창·김민경·박소희·박선영·석현덕·구자춘

2015 "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 -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  
임산물 양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지환

2011 "도시공간의 생산과 전유에 관한 연구 - 서울 문래예술공단을 사례  
로." 『대한지리학회지』 46(2): 233-256

이경준·김의철

2010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 박정희가 이룬 기적』 서울: 기파랑

이경준·윤여창·최인화·구창덕·김의경·김세빈

2015 『한국의 산림녹화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이광규·최길성

1968 "현지답사기-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 화전민," 『한국문화인류  
학』 1: 69-73

이규송

2006 "화전 후 목밭의 식생천이에 따른 종다양성 및 식생 구조의 발달,"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29(3): 227-235

이기봉·배재수

2007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의 성공 요인," 『한국임학회지』  
3: 325-337

이동욱

2015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서울: 백년동안

이선화

2015 "초원을 나는 닭: 중국 내몽고 초원 사막화 방지의 생태정치," 서  
울대 박사학위논문

이우연

2006 "식민지기 임야소유권의 정리: 산림녹화와 소유권," 『경제사학』  
40: 21-55

2010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 서울: 일조각

이태수·가강현·박현·박원철·윤갑희·이지열

1999 『송이증수 및 인공재배 연구』 서울: 임업연구원

2000 『송이산 가꾸기 및 송이증수』 서울: 임업연구원

임송자

2017 “지리산 도벌사건과 산림정책의 변화,” 『인문과학』 64: 111-151

임창규

1973 “한국의 화전농업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예지

2017 “산의 경관 및 자연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변화: 울진군에서 시행된  
산림녹화사업과 화전정리사업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3(1):  
251-297

정연학

2005 “화전민의 농경문화,”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정운하·김세빈

1999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화전지역의 산림변화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26(1): 12-20

정헌목

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  
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107-141

제임스 스콧

2010[1998]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옮  
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5[2009]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이상국 옮김, 서울: 삼천리

제프 멜파스

2013 “공간의 제자리”,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서울: 소  
명출판

조동규

1966 “한국화전의 분류,” 『지리학』 2(1): 57-65

조석연

2012 “해방 이후의 마약 문제와 사회적 인식 - 해방과 정부수립 초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08: 301-342

진중헌

- 2016 "발전의 상징경관으로서의 '푸른 산' - 산림녹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0(4): 539-548

채수홍

- 2004 "탄광촌의 쇠락과 폐광촌의 미래: 태백시 철암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0(1): 63-104

최병택

- 2008 "1908년~1945년 일제의 임야 소유권 정리와 민유림 운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8 "해방 직후~1960년대 초 산림계 설립논의의 전개와 그 성격," 『사학연구』 90: 291-336
- 2009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정책』 서울: 푸른역사
- 2012 "조선총독부의 화전 정리 사업," 『한국문화』 58: 139-177
- 2016 "일제하 목재 생산 정책의 성격과 그 변화," 『전북사학』 48:137-170

최원석

- 2014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서울: 한길사

최재석

- 1987 "자연부락의 성격과 그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19: 167-215

폴 로빈스,

- 2008 『정치생태학: 비판적 개론』 권상철 옮김, 파주: 한울

클리포드 기어츠

- 2012[1963] 『농업의 내향적 정교화』 김형준 옮김, 서울: 일조각

한상복

- 1966 "僻地聚落의 變化構造 : 變貌하는 部落社會 : 火田部落," 『지방행정』 154: 42-50

호을영

- 1975 "江原道 火田整理事業에 隨伴되는 問題點分析에 關한 研究," 韓國林學會誌 28: 50-66
- 1977 "강원도내 화전취락의 민속자료발굴보존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

학회』 33: 68-90

황진태

2013 "한국에서의 토건국가 논의", 미즈오카 후지오 편저, 이동민 옮김,  
『세계화와 로컬리티의 경제와 사회』 317-320

황진태·박배균

2013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  
론," 『대한지리학회지』 48(3): 348-365

朝鮮總督府

1924 『朝鮮森部落調査報告』 朝鮮總督府

Atran S

1998 "Folk biology and the anthropology of science:  
cognitive universals and cultural particulars." *Behav.*  
*Brainn Sci.* 21:547-609

Barry, J

2007 *Environment and Social Theory*, New York: Routledge

Bohannon, P

1965 "The Differing Realms of the Laws", *American*  
*Anthropologist* 67(6): 33-42

Chatwin, B

1987 *The Songlines*, London: Jonathan Cape

Conklin H.C.

1961 "The study of shifting cultivation," *Current Anthropology*  
2(1): 27-61

Descola, Philippe and Pálsson, Gísli

1996 *Nature and Society: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Psychology Press

Durkheim, E

1906 "The Determination of Moral Facts", *Sociology and*  
*Philosophy*, New York: Routledge



Durkheim E and Mauss M

1963 *Primitive Classific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ley R

1995 "The adaptive legacy of human evolution: a search for the 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edness." *Evol. Anthropol.* 4(6): 194-203

Greenhouse, Carol J.

2015 "Ch 24. Law", *A Companion to Moral Anthropology*, Wiley Blackwell

Hann, C.M

1998 *Property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irsch, Eril

1995 "Landscape: Between Place and Space," in E. Hirsch & M. O'hanlon, eds., *The Anthropology of Landscape: Perspectives on Place and Space*, Oxford: Clarendon Press, pp. 1-30

Howell, Signe

1996 "Nature in culture or culture in nature? Chewong ideas of 'humans' and other species", in *Nature and Society: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Psychology Press

Ingold, T.

1994 'Introduction to Social Life', n T.Ingold (3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Culture and Social Life*. London: Routledge

2000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o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London: Routledge.

2007 *Lines a brief history*, London&New York: Routledge

Lars Östlund and Olle Zackrisson and Greger Hörnberg

2002 "Trees on the Border between Nature and Culture: Culturally Modified Trees in Boreal Sweden," *Environmental History*, 7(1): 48-68

Lefebvre, H.

-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D. Nicholson-Smith, Oxford: Blackwell.

Myers, F.R

- 1986 *Pintupi country, Pintupi self: sentiment, place, and politics among Western Desert Aborigines*.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Nations J and Ronald Nigh

- 1980 "The evolutionary potential of Lacandón Maya sustained-yield tropical forest agriculture,"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36: 10-30

Nelson, R. K.

- 1983 *Make prayers to the raven: a Koykon view of the northern forest*.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tting R. McC.

- 1972 "Of Men and Meadows: Strategies of Alpine Land Use," *Anthropological Quarterly* 45:132-144
- 1976 "What Alpine Peasants Have in Common: Observations on Communal Tenure in a Swiss Village," *Human Ecology* 4:135-146
- 1977 *Cultural Ecology*. Long Grove, IL: Waveland

Nick, B

- 2012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o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Social and Environmental Accountability Journal* 32(2): 121-123

Matless, D

- 1998 *Landscape and Englishness* London: Reaktion

Myers, F. R

- 1986 *Pintupi country, Pintupi self: sentiment, place, and politics among Western Desert Aborigines*,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O'Brien, William

- 2002 "The nature of Shifting Cultivation: Stories of Harmony, Degradation, and Redemption," *Human Ecology* 30(4): 483-502

Rappaport R

- 1968 *Pigs for the Ancestors: Ritual in the Ecology of a New Guinea People*. New Haven, CT: Yale Univ. Press

Reed L. Wadley and Michael Eilenberg

- 2005 "Autonomy, Identity, and 'Illegal' Logging in the Borderland of West Kalimantan, Indonesia," *The Asia Pacific Journal of Anthropology* 6(1): 19-34

Wilk. R. R

- 1997 *Household Ecology: Economic Change and Domestic Life Among the Kekchi Maya in Belize*,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Simmel G

- 1994 "Bridge and door", in *Simmel on Cultures* Eds D Frisby, M Featherstone, London: Sage

Steward J

- 1955 *Theory of Culture Change: The Methodology of Multilinear Evolution*. Urbana: Univ. Ill Press

Tsing A Lowenhaupt

- 2005 *Friction: an ethnography of global connection* NJ: Princeton Univ. Press  
2015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NJ: Princeton Univ. Press

Yancey Orr, and J. Stephen Lansing and Michael R. Dove

- 2015 "Environment Anthropology: Systemic Perspectives," *Annu. Rev. Anthropol.* 44:153-68

## 〈웹페이지〉

국가기록원 산림녹화 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forest/viewMain.do>

농업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3658&categoryId=43658>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산림조합 <http://uljin.sanrimjohap.co.kr>

울진금강소나무숲길 <http://www.uljintrail.or.kr/>

토양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51610&categoryId=51610>

## 〈언론자료〉

동아일보 “國有林을 火田民에게 開放하라 (下(하))” 1935년 11월 15일

경향신문 “蔚珍(울진)에 武裝共匪(무장공비)30명” 1968년 11월 6일

대구일보 “솔 향기 이끄는 대로 거닐다 보면 소나무 밑동 ‘황금빛 보물’영덕  
송이 만난다” 2015년 4월 22일

동아일보 “火田民”, 1965년 1월 14일

중앙일보 “옛 보부상 길 보고 흥분...『객주』 완결편 나오겠다 싶었죠” 2012  
년 3월 19일

한겨레 “소나무가 일본 적송? 자생식물 영어이름 바로잡는다” 2015년 8월  
10일

매일신문 “[재선충을 막아라]〈상〉 경북 소나무 위기” 2017년 2월 20일

울진의 소리 “울진군, 생태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 2017년 4월 25일

SBS “[취재파일] 귀한 몸‘송이버섯’...소나무 뿌리에 ‘더부살이’” 2017년 9월  
21일

영남일보 “풍작 기대했는데...경북 송이농가 울상” 2017년 9월 22일

## 〈정부기관·지자체 자료〉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화전정리대장

내무부, 1973, 국토녹화10개년계획 - 기본계획

김현옥, 1973년 3월 16일, “푸른 유신, 치산 녹화”, 내무부장관훈

산림청 보도자료, 2017,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산림청

[http://www.forest.go.kr/new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MSTR\\_1036&mn=KFS\\_03\\_02\\_01&nttId=3101545](http://www.forest.go.kr/new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MSTR_1036&mn=KFS_03_02_01&nttId=3101545)

울진군청 제공 팸플릿, “울진에 빠지다”

## Abstract

# From a slash-and-burn field to a matsutake forest:

The dynamics of the dichotomy between  
nature and society in an Uljin-gun  
forest

Yeeji Ja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of constructing forest as 'Nature'. The forest examined in this study has been identified as a part of Nature, external to an entity called Society. In South Korea, however, forests have been deeply intertwined with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ves; they were perceived as social places, where the strong wills of the people, local communities, and the state to appropriate them never ceased to penetrate.

In this study, I aim to do an ethnographic research in a mountain located between Sogwang and Doocheon villages in

Uljin Province, which is renowned for its *Pinus densiflora*. My research result illustrates the changes in the villagers' perception of the forest when political events, as well a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get entangled with the mountain's ecology through time. The constant interactions of three groups of subjects, that is, the villagers, the local community, and the state, have made a huge impact on the forest landscape, and these interactive relationships became a part of the forest's environment. Through this analysis, this dissertation pays attention to the dichotomy of 'Nature' and 'Society' as captured by the history of forest appropriation.

I would like to raise three questions for the study, and the answers will be given by an analysis of the period between the 1950s to present days. Firstly, I examine the political economic features of the national forest policies, such as the arrangement of shifting cultivations, and Forest Protection Acts. These features also led to the changes in the forest ecology and the village community. Secondly, I compare the innate ownership generated by forest appropriation by the villagers, with the modern property rights. Thirdly, the dichotomy between Nature and Society have changed through a long time under the influence by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the residents, community, and the state.

The analytic focus will be given to 'roads', which can both mediate and disconnect the people, nature, and society. Since the independence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at is, until the early 1960s, the actors who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roads were highly heterogeneous. Through their activities, both the forest ecology and the people's perception emerged through this period; main roads as well as peripheral ones in this area were repeatedly made and unmade. In this period, the state's power was relatively limited and weak. The ecology and the poor

economic conditions we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in the formation of the ways of life in the isolated village. Furthermore, the plain area where the village was located was connected and interwoven with the forest by diverse types of roads, thereby creating the whole landscape as a 'life-world'. The meanings of the forest landscape had social-natural characteristics, and was entangled in a meshwork of humans and nonhumans.

However, after the infiltration of the North Korean guerrillas into Uljin-Samcheok area (1968), most side roads and roads began to be unmade quickly du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 protect the people and the state from the threat. Since this period, the national policy and bureaucracy began to exert an enormous power over the residents and the forest, and permeated into their everyday life. Also, new roads were built in order to remove the shifting cultivation plots and enact forest Greenification policy. Through this process, the government produced a greener yet simplistic forest by mobilizing and controlling the residents to work for the afforestation and wild fire monitoring. As a result, the landscape was sharply divided between the village and the forest, and this boundary has become even more evident through time. This forest landscape symbolizes the strong state and the idea of nature at the same time. Above all, because of the powerful enforcement of Forestry Act,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the villagers clashed against the new morals as imposed by the state.

The forest today represents the landscape that layers the histories and reflects the traces of the past. On the Uljin trail, hikers encounter this multi-layered landscape. The mountains as a museum encapsulates the local history. At present, the residents are with a double nature; on the one hand, they appear as incorporated into the forest's history, while on the other their



living space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forest. Meanwhile, matsutake mushrooms, a product of the forest, and the Upright Korean Red Pine Trees have become the new icons of Uljin Province, exhibiting their nature as a product of as an outcome of social-natural landscape dynamics. For instance, the mushrooms are a creation by the whole environment, including the disturbance made by diverse species. The mushroom has become a profitable commodity, and the residents pick up the matsutake utilizing their own local knowledge and ecological sense.

In sum, this dissertation reveals the fluidity in perceiving time and space. The boundary such as internal-external and nature-society might appear solid. However, the boundary has been changing all the time as formed by the assemblage of human and non-human interactions. The transition of boundary reflects the ways of life that are continuously changing. In other words, all the vestiges of the colonial rules and modernity, as well as the authoritarian ideology in the Cold-War era, still remain in this forest. While the society is reconstructed day by day, the nature is endowed with a special significance by getting gradually externalized. Nevertheless, as shown in the social-natural landscape, the nature becomes more and more entangled with the society. This is, I believe, why the social and state's history cannot be fundamentally decoupled with that of the nature.

**keywords : Slash-and-burn agriculture, Forest Greenification,  
Uljin Geumgangsonamoo Trail, Matsutake mushroom,  
Nature and Society, Forest landscape**

***Student Number : 2015-22541***